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토론회 개요]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부제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 ▶ 일시 : 2013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 김용익 · 남윤인순 · 양승조 · 이언주 · 이목희 · 이학영 · 최동익 의원 공동주최
- ▶ 주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 일정

시 간	진 / 행 / 내 / 용
1부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 사회 : 조원준 민주당보건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10:30~10:35	개회 - 일정 안내 및 참가자 소개
10:35~10:55	인사말 1. 김성주 · 김용익 · 남윤인순 · 양승조 · 이언주 · 이목희 · 이학영 · 최동익 의원 (가나다순)
	인사말 2.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축사 1.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부 : 토론회 - 좌장 : 박석운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준) 대표	
10:55~11:10	발제 1.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실진단과 해법모색 -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1:10~11:25	발제 2.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의 부당성과 올바른 해결방안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11:25~11:30	현장 초청발언. 진주의료원 간호사/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보호자)
11:30~11:40	휴 식
11:40~12:20	토론 1.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토론 2. 강성훈 경상남도 의원
	토론 3. 조승연 인천의료원원장
	토론 4.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토론 5.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토론 6.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
	토론 7. 김기남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12:20~12:30	청중 토론

[자료집 목차]

1. 축사	<p>문희상 민주통합당 대표 6</p> <p>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7</p> <p>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8</p> <p>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9</p>
2. 환영사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0</p> <p>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1</p>
3. 발제문	<p>1.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실진단과 해법모색 13</p> <p>-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p> <p>2.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의 부당성과 올바른 해결방안 23</p> <p>-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p>
4. 토론문	<p>1.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 61</p> <p>- 강성훈 경상남도 도의원</p> <p>2. 일선 경영자적 관점에서 본 지방의료원이 가진 현실적 문제 79</p> <p>-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p> <p>3. 진주의료원 폐원결정에 대한 환자단체의 입장 83</p> <p>-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p> <p>4.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을 바라보며 85</p> <p>-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p> <p>5. 95</p> <p>-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p> <p>6. 진주의료원 폐원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p> <p>- 김기남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p> <p>7. 진주의료원 폐원결정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p> <p>-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p>
5. 참고 자료	<p>1.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 보건의료노조 성명모음</p> <p>2.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 주요 언론보도 모음</p> <p>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p>

[축사]



문희상 |
민주통합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토론자 및 발제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공공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적정진료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민간병원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꺼려하는 진료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헌 활동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바로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병원 하나 문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의 근간인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진주의료원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더 확대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저도 진주의료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오 제 세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입니다.

[축사]



변재일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변재일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를 주제로 한국지역거점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국정과제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이유로 독단적인 폐업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휴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의료원의 경영 적자는 폐업의 이유가 아니라, 지원 확대의 근거로 삼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폐업 시도가 다른 지방의료원의 도미노 폐업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곧 공공의료체계의 파괴라는 위기의식을 공론화하고, 공공병원의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열과 뜻을 모아주시시오.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박 기 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기춘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고자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건강한 적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가 폐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적자문제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지금도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의 발전방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경남도민의 건강권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 김용익 · 남윤인순 · 양승조 · 이목희 · 이언주 · 이학영 · 최동익

오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주관하느라 고생하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10년에 설립되어 올해 102주년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공공병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나온 첫 번째 공공의료 정책입니다.

지난 2월 26일, 홍준표 도지사는 단순히 적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도 논의도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18일에 휴업 예고를 발표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병원 문을 급하게 닫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의 회를 비롯해서 진주시민의 70%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폐업 대책도 매우 부실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고 병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취업알선 이야기만 나올 뿐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환자를 내쫓고 직원을 내쫓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토론자 발제자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유 지 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내 첫 공공병원의 강제폐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특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민주통합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입니다.

복지 대통령을 내세우며,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공약하면서 출범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의료정책으로 선보인 첫 작품이 바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입니다.

신축 이전과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후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취임 하루만에 이를 폐기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일방행정으로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현장을 살맛나는 일터로 바꾸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던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은 지난 한 달여동안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과 좌절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의 불통 행정으로 103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던 진주의료원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주의료원에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아픈 몸 만큼이나 마음의 상처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들의 소중한 눈물을 닦아주고, 어루만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실진단과 해법모색

정 백 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한국 공공의료의 현실진단과 해결 모색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 백 근

I. 진주의료원 사태에 즈음하여

진주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공공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의 근원이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의 과잉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 계층, 분야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이라고 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심수단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임.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닌 민간의료기관과는 그 역할과 위상에 차이가 있어야 함.

진주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잘 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진주의료원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폐원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야 한다면 폐원의 이유는 공공보건의료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여야 함.

그러나, 경상남도가 폐원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진주시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미 과잉임.
- 매년 40억원 - 60억원, 지난 해에는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적자 재정규모가 커져,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임.

-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은 회생가능성이 없으며,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또한 도의 채무가 1조 3,488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채무관리대책의 일환으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는 것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는 핵심적인 이유는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 경상남도의 채무 때문임. 그러나, 적자와 부채를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 광역지자체의 채무 해결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는 현재까지 없음.

또한,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면개정안’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들이 주장되고 있음.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즈음하여 폐원과 관련된 논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임.

II. 지방의료원들의 현실

1. 경영 현황

2011년 전국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을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656억원이었는데, 이것을 기관 평균으로 하면 약 19억 정도 됨. 2011년 현재 진주의료원의 운영병상이 320병상이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300병상이 넘는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을 포함해서 총 8개소인데 이들 지방의료원들의 평균 적자는 40억원임. 2011년 현재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약 63억원으로서 적자 규모로 본다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서울의료원 다음으로 적자가 많음. 그러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2011년 기준으로 흑자를 발생시킨 지방의료원은 7개소이고, 의료순손익의 측면에서 흑자를 발생시킨 지방의료원은 1개소 뿐임.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지방의료원들은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8억에서 149억원 사이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부채 규모를 보면, 2011년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원이었는데, 군산의료원은 416억원, 부산의료원은 368억원, 서울의료원은 315억원임. 그리고, 전체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채가 없는 병원은 없고, 평균 부채가 151억원임. 그리고, 전체 지방의료원의 65%가 1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평균 부채는 261억원임. 그러므로,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의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 상의 2011년 지방의료원들의 대차대조표 자료를 보면, 부채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30개 지방의료원의 총 부채는 4,752억원이었음. 지방의료원의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액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서 각각 22.4%와 30.9%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경기도의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20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변화하게 되는데, 이들 지방의료원의 총 부채는 3,131억원이었는데, 이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은 31.2%에 해당하는 978억원, 퇴직급여 충당금은 27.1%에 해당하는 849억원이었음. 이 중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고정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을 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는 지방의료원 경영, 그 중에서도 대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이들 지역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지만, 이러한 경영 부담은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황은 주요한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들 지방의료원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현재, 경상남도(43.3%)를 제외하고는 모두 20-30%대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지원 여력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진주의료원의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부채액 253억원 중 37.0%인 94억원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해당함.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불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를 합치면 약 155억원 정도가 지출되어야 함.

표 1. 2011년 지방의료원 경영 현황

시도	의료원	운영병상 (개소)	당기순손익 (백만원)	의료수익 (백만원)	인건비율 (%)	부채 (백만원)
서울	서울	500	△14,911	46,558	82.8	31,477
부산	부산	497	△3,237	41,346	63.8	36,849
대구	대구	494	△755	28,677	63.7	19,261
인천	인천	187	△2,258	24,070	77.2	19,848
경기	수원	148	△1,953	15,568	72.1	8,413
	의정부	227	△3,460	15,208	74.8	11,853
	안성	151	△1,293	11,989	67.6	6,114
	이천	125	△1,464	10,962	71.1	5,556
	파주	118	△2,827	11,608	74.5	10,230
	포천	143	△2,390	15,665	66.4	13,651
강원	원주	250	△1,235	16,052	74.0	20,602
	강릉	100	△1,915	5,535	95.1	17,361
	속초	169	△2,526	8,277	86.0	17,550
	삼척	130	△1,831	9,248	72.6	8,858
	영월	210	△1,635	8,526	82.3	18,692
충북	청주	495	149	35,793	55.3	18,501
	충주	257	638	22,971	51.4	7,136

시도	의료원	운영병상 (개소)	당기순손익 (백만원)	의료수익 (백만원)	인건비율 (%)	부채 (백만원)
충남	천안	120	△2,948	8,086	74.2	12,018
	공주	227	△1,499	16,404	54.1	18,793
	홍성	432	△1,112	29,580	59.8	11,362
	서산	240	219	18,659	61.2	9,985
전북	군산	430	△4,901	35,609	61.0	41,601
	남원	350	△937	25,707	61.2	24,691
전남	순천	236	△1,431	11,301	68.4	8,803
	강진	120	△1,491	6,398	80.2	10,546
	목포	180	△696	11,166	55.9	8,281
경북	포항	248	316	13,238	63.1	5,366
	안동	256	△826	18,100	54.5	6,988
	김천	215	1,048	22,018	52.7	14,472
	울진군	105	129	6,217	83.3	2,726
경남	마산	231	△847	16,998	60.7	16,263
	진주	320	△6,277	15,812	77.6	25,290
제주	제주	297	127	5,117	101.6	6,453
	서귀포	212	△1,521	18,201	73.9	18,426
전체 평균		248	△1,921	17,843	69.8	15,118
300병상 이상 평균		440	△3,998	32,385	65.7	26,129

표 2. 지방의료원들의 부채 현황

(단위 : 원(%))

지방의료원명	부채액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서울의료원	31,531	0 (0.0)	13,500 (42.8)	13,500 (42.8)
부산의료원	35,454	0 (0.0)	10,383 (29.3)	10,383 (29.3)
대구의료원	27,183	8,745 (32.2)	5,334 (19.6)	14,079 (51.8)
인천의료원	19,848	0 (0.0)	6,908 (34.8)	6,908 (34.8)
수원병원	8,467	0 (0.0)	5,173 (61.1)	5,173 (61.1)
의정부병원	10,143	0 (0.0)	5,440 (53.6)	5,440 (53.6)
안성병원	5,590	0 (0.0)	3,291 (58.9)	3,291 (58.9)
이천병원	5,566	0 (0.0)	3,283 (59.0)	3,283 (59.0)
파주병원	7,260	0 (0.0)	3,303 (45.5)	3,303 (45.5)
포천병원	10,983	0 (0.0)	5,265 (47.9)	5,265 (47.9)
원주의료원	21,360	9,440 (44.2)	7,974 (37.3)	17,414 (81.5)
강릉의료원	16,863	3,400 (20.2)	1,862 (11.0)	5,262 (31.2)
속초의료원	17,589	8,560 (48.7)	3,408 (19.4)	11,968 (68.0)
영월의료원	8,962	2,280 (25.4)	2,360 (26.3)	4,640 (51.8)
삼척의료원	18,758	10,170 (54.2)	2,426 (12.9)	12,596 (67.2)
청주의료원	18,441	8,001 (43.4)	4,225 (22.9)	12,226 (66.3)
충주의료원	7,139	0 (0.0)	2,800 (39.2)	2,800 (39.2)
천안의료원	12,046	4,120 (34.2)	2,770 (23.0)	6,890 (57.2)
공주의료원	18,885	8,208 (43.5)	3,981 (21.1)	12,189 (64.5)

지방의료원명	부채액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홍성의료원	15,437	4,380 (28.4)	5,733 (37.1)	10,113 (65.5)
서산의료원	12,855	5,840 (45.4)	3,383 (26.3)	9,223 (71.7)
군산의료원	42,255	0 (0.0)	13,091 (31.0)	13,091 (31.0)
남원의료원	25,208	8,360 (33.2)	8,387 (33.3)	16,747 (66.4)
순천의료원	5,977	0 (0.0)	2,610 (43.7)	2,610 (43.7)
강진의료원	11,091	5,617 (50.6)	2,237 (20.2)	7,854 (70.8)
목포의료원	8,281	2,800 (33.8)	1,980 (23.9)	4,780 (57.7)
포항의료원	5,081	0 (0.0)	2,955 (58.2)	2,955 (58.2)
김천의료원	14,618	5,300 (36.3)	5,471 (37.4)	10,771 (73.7)
안동의료원	6,988	2,000 (28.6)	3,172 (45.4)	5,172 (74.0)
진주의료원	25,297	9,370 (37.0)	4,052 (16.0)	13,423 (53.1)
합계	475,155	106,591 (22.4)	146,760 (30.9)	253,351 (53.3)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제외 합계	313,130	97,846 (31.2)	84,879 (27.1)	182,726 (58.4)

2.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결손

지방의료원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체 지방의료원의 85%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 중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32%에 불과함. 감염병 격리병상, 호스피스 병상 설치율이 동급 민간병원보다 높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설치 비율도 높음. 또한, 지방의료원들은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하여 입원 진료비는 71%, 외래 진료비는 74%정도의 낮은 의료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상급병상 비율은 16.5%로 동급 민간병원 27.8%보다 낮음.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7.8%이고, 민간병원은 16.6%임. 그러나, 입원환자들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은 41.8%이며, 민간병원은 13.2%임.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들은 소위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재원 일수가 19일임. 이에 반해 동급 민간병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3일임. 이러한 경향들은 지방의료원 적자의 중요한 요인이 됨. 보건복지부의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의료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적자는 연 평균 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지방의료원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적십자병원의 경우, 2008년 현재 전체 적십자병원의 당기순이익은 총 36억원이 적자였음. 그러나, 이들 병원들이 350병상 이하 평균 정도로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고,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한 후 무료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면 총 4억원의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밝혀졌음.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

보건의료의 개념을 수정하여 기존에는 공공보건의료의 수행주체를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 설정하였던 것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는 정의를 도입하여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보건医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음. 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설립 및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립한 것임.

법률 전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민간의료기관이 보완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 법 안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영역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영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법 조문에 기록함으로써 사실상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즉,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였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의 일차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그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임.

그러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하나의 논리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 근거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폐원하고, 이를 민간의료기관이 대체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법의 개정 이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임.

실제 이 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공공의료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지만, 전면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임. 만약,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진주의료원이 폐원된다면 매우 잘못된 선택을 남기게 될 것임.

4. 거버넌스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이며 지역주민들의 병원임. 그러나, 병원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음. 지방의료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이며 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게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대표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원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나, 원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의료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임. 그러므로 이사회의 리더십은 병원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관료적 리더십일 확률이 높음. 또한, 지방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는데, 임원추천위원들은 지방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4인,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임명된 지방의료원장은 정무직적 성격이 강함.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료원의 의사결정자들은 체계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병원과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 더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병원 운영의 가능성은 찾아보기 힘들. 실제, 매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도 가장 점수가 낮고 개선 속도가 느린 영역이 합리적 운영이라는 점은 지방의료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임. 선진국들의 경우 공공병원, 심지어는 지역사회 비영리병원들조차도 대부분 지역주민대표에 의한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의 획기적 투자가 현실화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지방 의료원들을 자기들의 거점병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투자의 효과가 줄어들 것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내의 노사갈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의료원 간의 갈등,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진료 및 서비스 영역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대표에 의한 거버넌스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병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보건복지부의 자세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이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왔으며 시설, 장비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투입하였음. 그러나, 폐원 시점이 되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음. 이는 2010년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때 여실히 드러난 바 있음. 당시 보건복지부는 적십자병원이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노력을 대한적십자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되었음.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2005년 이후 130억원 이상의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매우 애매모호함. 이번에도 일차적인 해결은 경상남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또 하나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사라지는 것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하에서 2차의료의 핵심적인 기관들임. 또한, 이들 기관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기관들이 아님.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없음. 광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국립대병원들에 지역 암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하였지만, 이와 연계하여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에게는 어떠한 미션도, 투자도 제공하지 않았음. 이미 존재하는 자원도 중앙정부의 보건정책 집행의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급기야, 2012년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회계법인에 맡김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의 가치를 일부 폄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III. 해결 방향

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임. 지방의료원들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대부분 신축 이전 및 증, 개축과 같은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정부지침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 때문에 발생한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료원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며, 시설 현대화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지자체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지방의료원 경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주요한 적자 요인들 중의 하나임.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부채가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20-30% 밖에 안 될 정도로 열악함.

그러므로,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지방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방의료원들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료원들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공공병원 역할에 기인한 적자액 보전

지방의료원 적자 요인들의 상당 부분은 적정 진료, 의료안전망 역할,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기인함.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발생한 적자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뭐가 다르냐는 다른 측면에서의 비판을 받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의료원은 수익성, 공공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임. 그러므로, 공공병원 역할에 기인한 적자액을 추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3. 지역주민 대표에 의한 거버넌스 실현

지역주민 대표에 의한 거버넌스는 지방의료원이 사회적 통제를 받으면서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음. 이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반영되게 해야 함. 또한, 일정 수가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이사회 및 경영진과 지역주민 협의체가 의무적으로 병원 운영을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함.

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기인한 적자 보전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육성, 발전 및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많은 역할을 해야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면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교육훈련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획과 활동을 해야 함.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마스터 플랜 및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지방정부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견인하여야 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관한법을 전면 개정안이 공공병원을 폐원하고 이를 민간병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 보건의료 담당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대형정책의료센터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의료원들이 하위 정책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 부서들의 부문간 연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교 병원들의 의료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 파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지방정부 역시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보건소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특히, 실질적인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권역 내 자체충족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은 공공병원 뿐임.

지역 내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 무상의료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대 → 민간부문 의료기관의 확대 → 경쟁 심화 → 보건의료체계의 이윤추구적 경향 증대
-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 →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의 질적 수준 차이 심화 → 지역 중소병원들의 몰락, 그 중에서도 지역의 공공병원의 사회적 위상은 더욱 저하
-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및 이로 인한 건강의 불평등이 야기될 가능성 증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 중의 하나는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같은 직접적 정책수단이 많을수록 성공가능성은 높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수한 질의 공공병원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및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발제 2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의 부당성과 올바른 해결방안

이 주 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과 해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이 주 호

1.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상황

1) 경상남도

-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기습 발표함.
- 경상남도 공무원 4명을 진주의료원에 파견하여 폐업 절차 강행임무를 맡김.
-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중단, 호스피스완화센터 지원 중단,약품 및 재료공급 중단 요청, 환자퇴원 중용, 의사 사직 중용 등 진주의료원을 휴업상태로 내몰고, 고사시키기 위한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 자행
- 매일 보도자료,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 홍보
- 3월 7일 경상남도 '산하기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구성
- 3월 7일 경상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3월 27일까지 의견서 접수)
- 3월 18일 ~ 3월 30일까지 진주의료원 휴업 예고

2) 진주의료원 상황

- 경상남도에서 파견한 기획실장이 병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맡고 있음.
- 정상근무 중이나 내과 의사 전원 사직, 경상남도에서 휴업상태로 몰아가고 있음.
- 입원환자 200여명이었으나 폐업 발표 후 퇴원중용 등으로 현재 130여명이 남아 있음.
- 3월 18일 경상남도에서 휴업예고한 뒤 3월 19일 진주의료원장 명의로 환자들에게 전원하라는 내용의 휴업 공고문 부착

3) 노동조합 및 지역 차원의 대응

-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매일 오전 의료원내 출정식 후 창원으로 이동하여 경

- 남도청 앞에서 선전전, 오후 5시 30분 의료원에서 마무리 집회
- 보건의료노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본부> 구성하고, 진주의료원에 상황실 설치하여 전면투쟁 전개
 - 노동계, 의료계, 지역시민사회단체들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조례개정 반대 의견서 올리기 등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음.
 - 3/12일 진주지역대책위, 3/13일 경남도 대책위 구성
 - 3/14일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청 앞 1차 집중투쟁
 - 3/18일 환자보호자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김미희 의원실 국회 토론회
 - 3/21일 10:00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주최 공청회
 - 3/22일 국회 대토론회
 - 3/24일 1차 '진주의료원 살리기' 희망 걷기대회
 - 3/27일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청 앞 2차 집중투쟁
 - 4/ 6일 2차 '진주의료원 살리기' 희망 걷기대회(가)

4> 이후 일정

- 3/22일(금)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
- 3/27일(수) 경남도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마감
- 4/9일(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상임위)에서 조례개정안 논의 예정
- 4/9일(화)~11(목) 도정질의(홍준표 등원)
- 4/12일(금) 혹은 15(월) 상임위
- 4/18일(목)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 상정 처리 예상

2.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

1>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폐업 결정 : 불통행정, 독재행정의 전형

- 진주의료원, 직원, 진주시의회, 경남도의회, 보건복지부 등과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경상남도가 2013년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함.
-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와 자구책, 진주의료원 살리기 위한 노력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함.
- 103년간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을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폐업 결정함.

2> 환자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

-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뒤 환자들을 내쫓음.
- 2월 26일 폐업결정 당시 200여명이던 입원환자들이 현재 130여명으로 줄었음.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기 위해 경상남도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퇴원을 종용하고, 의사에게 사직을 종용하였으며, 심지어는 약품공급 중단, 진료재료 공급 중단마저 요청하는 반의료적·반윤리적 행위를 자행함.

3> 고통분담해온 직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

- 6년간 임금동결(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6개월치 임금 체불로 생계 파탄 (2012년말 체불임금 29억 7900만원)
-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30명 명예퇴직, 30명 인원 축소,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토요일근무 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외면한 채 강제폐업
-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재능교육 등과 같이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임.

4> 경남도민의 여론 역행

- 사회동향연구소가 3월 9일 경남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경남도가 지역주민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 65.4%
 - 주민 의견수렴이나 의료원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다 : 65.7%
 -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보다 더 중요하다 : 85.4%
 - 노사가 힘을 모아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폐업해서는 안된다 : 69.7%
-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 구성
 - 3월 12일(화) 진주지역 대책위원회 결성 및 기자회견
 - 3월 13일(수) 경남지역 대책위원회 결성 및 기자회견

5>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죽이기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죽이기에 나섬.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유를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자를 이유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한 사례는 진주의료원이 처음임.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지 흑자를 내는 곳은 1곳 뿐이고 나머지 33개는 적자임. 의료외수익을 통해 정상수지 흑자를 내는 곳도 5~6곳 뿐이고, 나머지 28~29곳이 매년 적자이지만,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곳은 진주의료원 밖에 없음.

박근혜정부 출범 하루만에 진주의료원 전격 폐업함.

- 박근혜 후보 취임 하루 만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제기했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활성화> 공약을 폐기하는 것임.
- 또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140대 과제 중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 과제를 폐기하는 것임.

공공의료 5.9%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제인데 오히려 공공医료를 축소, 포기함.

- 공공의료기관수가 사회복지가 발달된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80~90%,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30% 수준임. 이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수가 5.9%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보건의료정책과제임.
- 매년 연인원 20만명이 이용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보건의료정책과제를 외면한 채 공공医료를 축소·포기하는 것임.
- 진주의료원과 달리 성남시립병원, 대전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새롭게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있는 공공병원마저 없애려는 것임.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폐기하고 막대한 국비를 탕진하는 먹튀행각

- 정부는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음. 현대화사업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왔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음.
-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신축이전사업비 534억원 중 2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음. 또한, 2008년 신축 이전 이후 진주의료원에 28억원의 공공의료사업 예산을 지원해왔음.
-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폐업하는 것은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투입된 국비를 경상남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먹튀행각임.
-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경영진단,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34개 지방의료원 어느 한 곳에 대해서도 <폐업> 진단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같은 진단결과를 무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음.

6> 진주의료원 발전가능성 차단, 정치적 논리로 공공병원 폐업

신축이전한 지 5년 만에 폐업

-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2008년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폐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임.

-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국비 200억 3200만원, 도비 91억 6600만원을 들여 지은 현대식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전격적으로 폐업. 이것은 국민들과 경남도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는 것임.

좋은 입지조건과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 외면

- 2008년 신축이전 이후 지난 5년간 진주의료원은 외곽 변두리 허허벌판에서 환자접근성 부족과 환자감소, 경상남도의 지원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음.
- 그러나, 최근 진주의료원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음.
 - 아파트 단지 : 진주의료원 주변에 4000세대의 아파트 조성 중
 - 혁신도시 : 진주의료원 3km 거리에 1만 3000세대 혁신도시 건설 중
 -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
- 지난 5년간 수요예측 실패와 타당성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축이전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주택단지와 혁신도시 조성으로 입지조건이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고, 경영호전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계산과 목적이 없는 설명할 수가 없음.

경상남도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공공병원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조치

- 경상남도는 1조 3488억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폐업, 통폐합, 보 조금 회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병원을 팔아서 경상남도의 채무를 개선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이고, 연간 12억원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경상남도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임.

서부권청사 짓기 위해 공공병원 폐업

- 최근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뒤 제2청사를 건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음.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청 청사로는 부적합하고, 더군다나 자신의 공약실현을 위해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희생물로 만드는 것임.
- 연인원 20만명에 이르는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지어진 초현대식 공공병원을 지어진 지 5년만에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음.
- 더군다나, 제2청사 건립문제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 지역의 이해관계, 행정편의, 예산 등 여러 복잡한 내용이 얹혀있고,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할 문제로서, 이러한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폭거임.

3.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없다!

1>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근거

막대한 부채와 적자로 인해 회생불가능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음.

- ①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고,
- ② 적자가 매년 40억~6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 ③ 이대로 가다가는 3~5년 사이에 자본잠식당하고 파산할 것

○ 경상남도는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3~5년 사이에 자본금이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음.

- △ 자본금 : 331억원 1700만원
- △ 월 8억원(연 96억원 적자) : 3년내에 자본금 잠식

2>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없다!

진주의료원은 좋은 입지조건과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

-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이전 이후 지금까지 5년간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 앞으로 지속 발전가능한 토대를 닦아 왔음. 그리고, 주변여건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 주변에 4000 세대의 아파트 조성 중
- 진주의료원 3km 거리에 1만 3000세대(4만명)가 입주할 혁신도시 건설 중
-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

기관명	본사인원(지방이전 계획 승인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1423명
주택관리공단(주)	108명
한국시설안전공단	25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59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0명
한국세라믹기술원	250명
한국남동발전(주)	290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70명
국방기술품질원	375명
중앙관세분석소	26명
한국저작권위원회	151명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

- 허허벌판 진주시 외곽 변두리에 신축이전한 후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음.
- 또한,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은 6년간의 임금동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예퇴직, 30명 인원축소, 연차수당 축소, 무급 토요일무 시행 합의 등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항목	직원들의 고통분담 내용
명예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11명 - 2014년 10명 - 2015년 10명 ○ 효과 : 11억 7000만원 인건비 절감
임금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6년간 임금 동결 ○ 향후 임금인상은 경영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인원 축소 및 신규 채용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30명 축소 운영 (2011년말 총 267명에서 2013년 2/26일 현재 237명으로 30명 감소) ○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최대한 억제
연차수당 축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연차수당은 1인 최대 11일까지만 지급 ○ 간부직원은 2010년~2011년 미지급 연차수당 1/2 반납
무급 토요일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정상화를 위해 무급 토요일무 시행하기로 노사 합의 (2012년 10월 18일) ○ 효과 : 직장인 및 학생 건강검진, 소아·청소년환자 유입 증대

-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노력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임.

- 진주의료원은 외곽 변두리 지역이라는 불리한 입지여건 속에서도 지역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음.
- 또한, 병상수 조정,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장애인전문치과와 장애인전문산부인과 개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설,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노선버스 1개→9개로 확대) 등 최근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같은 노력이 2013년부터 경영개선효과로 가시화될 것임.

항목	경영개선 노력
병동통합	○ 병동 통합으로 간호인력 조정, 인건비 절감,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급성기 병상수 조정	○ 신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장기환자수 감소에 따른 급성기 병상 수 조정 (256병상 → 205병상으로 51명상 축소)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병원의 현대·전통의학 협진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방과 개설 ○ 한방과 외래 진료 개시 : 2012년 10월 10일
지역여건에 맞는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장애인전문치과·산

항목	경영개선 노력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부인과 등 공공의료사업의 지속적 운영 ○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의료사업 지속 발굴
구매계약 개선	○ 철저한 시장조사 및 인근 의료원(마산, 부산)과의 의료장비 실구매가 공유로 적정 계약단가 확보 ○ 전자계약 실시로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 도모 ○ 입찰 참여 업체의 납품실적 제출 의무화 및 실거래가 확인 ○ 의료장비 구매시 보편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장비 구매 유도, 진료과장 교체에 따른 의료장비 사양 방지
주차장 유료화	○ 총 372대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음. ○ 2012년 12월 31일 정기이사회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의결함. ○ 소요인력 3명 : 자체인력 재배치(신규인력 미채용) ○ 효과 : 연간 1억 2700만원 정도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 인근 주민의 진주의료원 접근성 편의를 위한 진주의료원 경유 시내 버스 노선 신·증설 (1개 노선 → 9개 노선으로 확대) ○ 신·증설 노선 운행 개시 : 2012년 5월 21일 ○ 효과 : 6억 8000만원
유관기관 또는 기업 등과 의료협약 체결	○ 내원환자 증대를 위해 한진중공업 등 12개 기관(기업)과 의료협약 체결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 본원(7등급→5등급), 노인요양병원(8등급→3등급)으로 상향 조정 ○ 2011년 2월부터 적용 : 2011년 6억원의 의료수익 증대
노인요양병원 병상확대	○ 노인요양병원 환자 증가에 따라 2011년 80병상→120병상으로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 고령화,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에 따라 재활의학과 수요 증가 : 재활치료센터 병상수 확대, 우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치료사 채용, 재활치료센터 구조 개선 등 ○ 진료 연인원 : 9348명, 2011년에 비해 2012년 진료수익 6억 4600만원 증가
진료과 조정 및 특성화	○ 진료과장 교체 ○ 종합건강증진센터 시설 및 기능 재배치 종합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 ○ 2011년 7월부터 장애인전문치과 운영을 위한 치과과장 1명 및 시설 보강, 진료개시
내·외부고객(환자) 만족 프로그램	○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한 TFT(로데옴)구성 운영(4회) ⇨ 현장중심의 의사결정 ○ 고객만족 설문조사 실시 ⇨ 분석 및 피드백, 외래진료과 고객편의 중심 재배치 ○ 병원견학, 로비 시화전시회, 바자회 및 음악회 등을 통한 친근한 병원환경 조성
의료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강화	○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방문 홍보 활동 : 10개 면·동사무소 이·통장 236명 ○ 진료과장 및 병원안내 팸플렛 제작·배포 : 6종 5,000매, 서한문 발송, 진주시 기관장협의회(월1회)참석 홍보자료 배포, SMS문자서비스 및 병원홍보
장례식장	○ 장례식장 특실 증설로 장례식장 수익 증대

항목	경영개선 노력
수익 증대	○ 효과 : 6억 87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 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고객 유치 및 건강검진 등으로 의료수익 증대

진주의료원 경영상태가 폐업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

○ 2012년 결산기준 진주의료원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음.

자산	부채
610억 3800만원	279억 2100만원
	자본
	331억 1700만원

- 경상남도도는 3~5년 안에 자본금 331억 1700만원마저 잠식당할 것이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므로 폐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경상남도도는 매년 40억~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고, 앞으로는 매년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여 3년이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함.
- 진주의료원의 40억~60억원 순손실(적자)은 그대로 자본을 잠식하는 것이 아님. 즉, 40억~60억 순손실 가운데에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지만 실제 현금으로 빠져나가 자본을 까먹는 것이 아님. 2008년 신축이전한 이후 진주의료원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30억원에 이름. 따라서 40~60억원의 순손실 중 30억원의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진주의료원의 순손실은 10억~30억원대로 줄어듬. 따라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임.

연도	당기 손익	감가상각액	감가상각 제외 순 손실
2008	59억 2900만원 적자	28억 9100만원	30억 3800만원 적자
2009	41억 9400만원 적자	30억 6800만원	11억 2600만원 적자
2010	48억 4600만원 적자	29억 5300만원	18억 9300만원 적자
2011	62억 7800만원 적자	31억 3200만원	31억 4600만원 적자
2012	69억 4700만원 적자	33억 7100만원	35억 7600만원 적자

- 한편, 적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과 반대로 자산가치는 지나치게 낮게 파악돼 있음. 진주의료원 자산이 610억 38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부지값, 건물값, 의료장비값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됨.
- 진주의료원의 실제 자산가치는 훨씬 낮게 평가되어 있고, 적자를 과도하게 부풀려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임.

<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 추정 >

1. 진주의료원 건물 평가액 : 약 512억원(평당 600만원 × 8544평)

- 진주의료원 인근 초전동 소재 아파트 상가의 경우 평당 600만원 정도에 감정평가됨(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
- 이에 비추어 볼 때 진주의료원 건물 평가액은 의료시설이 아닌 단순 부동산(건평 8,544 평)으로 평가하더라도 512억으로 추정됨.

2. 부동산 가치 : 약 497억원 (평당 300만원 × 1만 6579평)

- 진주의료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02년보다 4배 이상임.

가격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2012	440,000	2012/07/30
2011	410,000	2011/05/31
2010	400,000	2010/05/31
2009	400,000	2009/05/29
2008	390,000	2008/05/31
2007	281,000	2007/05/31
2006	148,000	2006/05/31
2005	128,000	2005/06/03
2004	113,000	2004/06/03

- 진주의료원 현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신축이전 당시보다 4배 이상으로 예측됨.
- 시중 거래가격은 보통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음. 진주의료원 인근지역 대지는 평당 300만원 정도로 현재 거래되고 있음. 이를 대입해보면 진주의료원 현 부지 16,579평의 가격은 약 497억 정도로 추정됨.

3. 최소한 1,000억원 이상 자산가치

- 부동산가치와 건물평가액만 하더라도 1,000억원이 넘으며, 진주의료원은 의료시설이고 의료장비 등이 포함되면 가치는 훨씬 높아짐
- 아파트 단지와 혁신도시가 주변에 조성되고 있어 자산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부채와 적자, 인건비 비율을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한 사례가 없기 때문

-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 역할 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적자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부채와 적자, 인건비 비율 등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한 사례는 없음.

- 부채 : 군산의료원은 416억원, 부산의료원은 368억원, 서울의료원은 314억원으로 진주의료원보다 부채가 많지만 폐업하지 않았음.
- 적자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에 2011년에 흑자병원은 7개였고, 27개가 적자였음.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매년 5~6곳을 제외하고는 적자였지만 지방의료원 중 폐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적자병원수	29	26	29	30	29	28	27
흑자병원수	5	8	5	4	5	6	7

-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진주의료원이 77.6%로 일반 민간병원 44%에 비하면 높은 편임. 그러나, 지방의료원 평균인 69.8%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음. 진주 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이 7곳이나 되고, 34개 중 절반인 17개 의료원이 70%가 넘지만 어느 곳도 폐업하지 않았음.

지방의료원	제주	강릉	속초	울진	삼척	강진	진주
인건비비율	101.6%	95.1%	86.0%	83.3%	82.3%	80.2%	77.6%

경상남도가 고작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 경상남도가 총부채 1조 3488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음. 경상남도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 1호로 선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역할인 공공의료 수행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10억원을 갓 넘는 수준의 도비 지원을 절감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역지에 불과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직무유기임.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액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도비 지원	11억 9300만원	13억 6000만원	12억 4200만원

- 더군다나, 10억여원을 절감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거가대교, 마창대교, 경남 FC 등에 막대한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거가대교 : 민간사업자에게 242억원 지원 (진주의료원의 20배 지원)
- 마창대교 : 민간사업자에게 100억원 지원 (진주의료원의 8배 지원)
- 경남FC : 100~200억원 지원 (진주의료원의 15배 이상 지원)

4.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의 원인

1> 신축이전 정책의 실패와 경상남도의 지원 부족

경상남도가 수요예측에 실패하였다.

- 보건복지부의 2012년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의 결정적 원인을 “수요예측 실패”로 규정하고 있음.
- 보고서는 "신축 이전 부지가 도심에서 멀고 교통 여건이 나빠 시민 접근성이 매우 낮다"며 이전지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또한, 보고서는 <진료과 운영의 효율화>와 <지자체 주도로 유희시설과 장비 매각 또는 임대료 수익 창출>을 주문함. 이것은 수요보다도 병상과 장비, 시설 등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으로서 경상남도가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줌.
- 따라서, 수요가 뒤따르지 않는 외진 곳에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함으로써 경영적자가 불가피해진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경상남도의 책임임.

환자접근성 부족을 해결할 지원대책이 없었다.

- 진주의료원은 2008년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신축이전하였음. 중안동은 진주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이 좋았지만, 신축이전한 초전동은 아직 개발예정지였을 뿐 주변에 주택이나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내원환자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신축이전한 초전동은 진주시 외곽지역으로서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하여 환자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음.
- 진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2012년 5월 전까지 1개 노선(355번) 밖에 없었고 운행간격도 30분 이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았음. 이로 인해 내원환자수가 감소하였고 의료수익이 부진하였음.
- 따라서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신축 이전 후 내원환자가 감소한 것은 주택단지와 혁신도시 조성 전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 ▲진주의료원 셔틀버스 운행 등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경상남도는 이와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

2>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

지역개발기금이 총부채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개발기금은 진주의료원 총부채(279억 2100만원)의 33.6%(93억 70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말 진주의료원의 부채 현황

구분	계	외상매입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지역 개발기금	기타
금액	279억 2100만원	28억 5100만원	41억 1000만원	48억 6000만원	93억 7000만원	67억 3000만원
백분율(%)	100%	10.2%	14.7%	17.4%	33.6%	24.1%

※ 외상 매입금 : 약품비 24억 1100만원, 진료재료비 4억 4000만원

※ 미지급금 : 인건비 22억 6500만원, 관리운영비 등 11억 7300만원

※ 기타 : 시중은행 차입금 58억 26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금 4억 6900만원, 기타 4억 3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부담금이 너무 크다.

- 진주의료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임금채불, 진료재료 등 물품대금 체납, 시중은행 차입 등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영수지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진주의료원은 32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매년 20억원 가까운 액수를 지불하고 있음. 2012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총 18억 3566만 1000원을 납부했음. 이것이 지방의료원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2012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상환 현황>

연도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연납부액(원금+이자)
2008	197억 1640만원	12억 2859만 2000원	209억 4499만 2000원
2009		2억 5492만 6000원	2억 5492만 6000원
2010		2억 5492만 6000원	2억 5492만 6000원
2011	14억 5672만원	4억 2992만 6000원	18억 8664만 6000원
2012	14억 5672만원	3억 7894만 1000원	18억 3566만 1000원

<2013년 이후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현황>

연도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연납부액(원금+이자)
2013	14억 5672만원	3억 2795만 6000원	17억 8467만 6000원
2014	24억 5672만원	2억 7697만원	27억 3369만원
2015	24억 5672만원	1억 9098만 5000원	26억 4770만 5000원
2016	10억원	1억 500만원	11억 500만원
2017	10억원	7000만원	10억 7000만원
2018	10억원	3500만원	10억 3500만원
총계	107억 4032만원	10억 591만 1000원	117억 4623만 1000원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투입된 자금으로서 마땅히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한다.

-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경남도민들에게 최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음.
- 진주의료원 현대화사업은 2002년~2007년까지 총 534억여원의 신축이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되었음.

<신축이전 사업비 확보 내역>

구분	확보내역	금액	비고
계		534억 850만원	
출연금	교부세	200억 3200만원	국비
	지방세	91억 6600만원	도비
현물출자	경상남도 토지 출자	22억 1050만원	
자체 확보	지역개발기금 차입	220억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은 신축이전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0억원에 이릅니다.

<진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구성 내역>

항목	액수	연도
공사비	220억원	2007년 8월 3일
장비구입비	50억원	2007년 11월 1일
운영비	50억원	2010년 8월 23일
총	320억원	

-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신축이전에 따른 비용(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으로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을 진주의료원이 차입한 것입니다.
- 진주의료원은 앞으로도 2018년까지 매년 10억~20억원씩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을 지급해야 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음.

타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해주고 있다.

- 타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해주고 있음.
- 부산, 충남, 전북,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뿐만 아니라 신축사업, 증축사업, 의료장비 구입, 노인요양병원 건축, 의사 숙소, 경영활성화,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 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용으로 지원할 뿐 병원신축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기금 상환 현황>

시도명	의료원명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부산	부산의료원	18억 5900만원	13억 4800만원	20억원	신축사업비 정산,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
대구	대구의료원	9억 8500만원	9억 4600만원	6억 88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경기	수원병원	5억원			퇴직금 중간정산
	의정부병원	3억9천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안성병원	5억 800만원	5억 6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천병원	3억 25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파주병원	4억 5500만원	4억 56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포천병원	3억 74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충남	천안의료원		1억 8000만원		시설, 장비 구입비
	공주의료원		2억 5700만원		시설, 장비 구입비
	서산의료원		3억원		시설, 장비 구입비
	홍성의료원		3억 3000만원		시설, 장비 구입비
전북	군산의료원	3억 7200만원	4억 3000만원	4억 3000만원	의료장비, 의사숙소, 퇴직금 중간정산
	남원의료원	4억 5200만원	4억 3400만원	4억 3200만원	의료장비, 장례식장 신축, 퇴직금 중간정산
경북	포항의료원	8억 7700만원	8억 49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노인요양병원 건축, 영안실 증축
	김천의료원	4억 7600만원	2억 79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안동의료원	4억 9600만원	5억 14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경영활성화, 영안실 증축
경남	진주의료원	5억 9900만원	5억 6000만원	4억 56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 진주의료원은 일반병동 205개 병상과 노인요양병원 120병상 등 총 325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식 종합병원임.

구분	계	5인실	4인실	3인실	2인실	1인실	특실
일반병동	205병상	160병상	8병상	3병상	26병상	6병상	2병상
노인요양병원	120병상	120병상					
총계	325병상	280병상	8병상	3병상	26병상	6병상	2병상

○ 2008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음.

장 비 명	수량(대)	장 비 명	수량(대)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1.5T)	1	체외충격파쇄석기	1
전산화단층촬영기(40채널 CT)	1	관절경	1
이동용 X-선 촬영기	2	복강경	1
디지털 X-선 촬영기	5	유방조직검사기(맘모툼)	1
이동용초음파진단장치	1	전신흡입마취기	3
C-ARM 촬영기	1	홀mium레이저수술기	1
유방촬영장치	1	근전도및유발전위검사기	1
초음파영상진단기	4	디지털뇌파계	1
심장초음파기	1	운동부하심전도기	1
자동생화학분석기	2	디지털안저촬영기	1
자동혈액분석기	1	전자내시경	3
전해질자동분석기	1	인공호흡기	6

○ 매년 연인원 20만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입원	104,708명	98,114명	108,382명	100,695명
외래	139,816명	110,006명	110,119명	96,821명
총계	244,524명	208,120명	218,501명	197,516명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과와 센터를 갖추었다.

○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과를 훌륭히 갖추고 있다.

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치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약제과, 내시경센터, 영양상담실, 건강증진센터, 재활치료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의무기록실, 감염관리실, 공공의료사업실, 노인요양병원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등 주로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경남도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분	2012		2011		2010		2009		2008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진주시	158,167	79.8%	157,568	77.1%	148,384	76.8%	157,927	71.5%	119,355	69.1%
사천시	7,020	3.5%	8,085	4.0%	7,058	3.7%	10,900	4.9%	8,301	4.8%
하동군	5,656	2.9%	6,490	3.2%	6,078	3.1%	6,605	3.0%	5,092	2.9%
남해군	1,271	0.6%	1,344	0.7%	1,383	0.7%	2,322	1.1%	1,182	0.7%
산청군	8,177	4.1%	9,483	4.6%	8,901	4.6%	10,120	4.6%	8,210	4.8%
고성군	1,841	0.9%	1,669	0.8%	1,838	1.0%	1,639	0.7%	1,993	1.2%
의령군	2,217	1.1%	2,812	1.4%	2,751	1.4%	3,647	1.7%	2,445	1.4%
함양군	1,042	0.5%	1,337	0.7%	1,388	0.7%	2,350	1.1%	2,249	1.3%
함안군	742	0.4%	471	0.2%	601	0.3%	571	0.3%	339	0.2%
합천군	1,759	0.9%	2,444	1.2%	1,567	0.8%	2,350	1.1%	1,779	1.0%
거창군	205	0.1%	391	0.2%	519	0.3%	1,207	0.5%	1,565	0.9%
창녕군	103	0.1%	28	0.0%	64	0.0%	29	0.0%	151	0.1%
거제시	276	0.1%	317	0.2%	550	0.3%	374	0.2%	566	0.3%
통영시	338	0.2%	395	0.2%	320	0.2%	383	0.2%	354	0.2%
마산시	436	0.2%	521	0.3%	385	0.2%	434	0.2%	425	0.2%
창원시	151	0.1%	395	0.2%	368	0.2%	469	0.2%	359	0.2%
진해시	94	0.0%	101	0.0%	55	0.0%	344	0.2%	504	0.3%
밀양시	215	0.1%	52	0.0%	170	0.1%	30	0.0%	29	0.0%
김해시	288	0.1%	390	0.2%	345	0.2%	218	0.1%	157	0.1%
양산시	68	0.0%	148	0.1%	29	0.0%	38	0.0%	40	0.0%
기타	8,084	4.1%	9,857	4.8%	10,405	5.4%	18,954	8.6%	17,602	10.2%
계	198,150	100.0%	204,298	100.0%	193,159	100.0%	220,911	100.0%	172,697	100.0%

의료재난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 2000년 의약분업시 의료대란, 사스, 신종플루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수익성과 관계없이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 진주의료원은 수익성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경남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제공해왔음.

사 업 명	2012년 추진실적	사업비	비 고
보호자 없는 병원	연인원 9,171명	5억 7400만원	도비 : 4억2600만원 자비 : 1억 4800만원
장애인전문치과	연인원 460명	1억 5000만원	도비
장애인전문산부인과 ('12.06.27 진료시작)	연인원 11명	2500만원	도 수탁사업
만성질환 관리	검진 40회, 2,861명	2000만원	도 수탁사업
지역사회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	연인원 336명		도 수탁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7개소)	방문진료 35회 372명		도 수탁사업
인공관절 무료수술	32건	2600만원	자체 예산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	8회 257명	1000만원	자체 예산
지역사회 보건교육	23회 1,197명	300만원	자체 예산
전립선비대증 검진 및 수술비지원	검진35명, 수술1명	2000만원	자체 예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 상 운영, 입원 환자 연인원 1,283명		
기타 공공보건의료사업 - 행려환자 무료진료 - 건강증진사업(금연클리닉) - 지역행사 의료진 파견 및 의료봉사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여성 진료 지원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36회 264명 3,144건	500만원	자체 예산

매년 연인원 3만여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해왔다.

- 진주의료원은 매년 연인원 3만여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담당해왔음.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급여환자수 (연인원)	3만 7057명	3만 6189명	3만 838명	3만 845명	2만 1724명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손실이 연간 6억원이 넘고 있다.

-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2010년 한 해 동안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6억 5697만 4368원임.

<진주의료원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손실(진주의료원, 2010년)>

필수의료시설 운영	의료급여 수가 차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합계
2억 7694만원	9033만원	2억 8971만원	6억 5697만원
※ 의료안전망 의료시설 운영 : 민간병원이 유지비용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격리병상, 호스피스병상 운영 ※ 의료안전망 진료과 운영 :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약지역에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남도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간 2천만원 수준으로 지극히 미미하다.

-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은 매우 미미함.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진주의료원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가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더욱 확대 지원할 경우 적자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
- 경상남도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사업비로 진주의료원에 연간 2000만원 수준만 지원하고 있음. 이는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지극히 미미한 지원을 통해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을 말해 줌.
-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음.

시도명	의료원명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서울	서울의료원	55억 7800만원	44억 1600만원		신축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4600만원	4600만원	9400만원	신종플루검사장비 구입, 생물테러포본 감시사업
대구	대구의료원	70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행려환자진료 등
인천	인천의료원	4억 5000만원	4억 700만원	6억 4600만원	명예퇴직 지원 등
경기	수원병원	2억 5400만원	2억 5400만원	2억 5400만원	장애인 치과운영, 취약계층 진료비 등
	의정부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안성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이천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파주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포천병원	1억원	1억원	1억원	취약계층 진료비

충남	천안의료원	2억원	2억원	2억원	
	공주의료원	2억원	2억원	2억원	
	서산의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홍성의료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전남	순천의료원	3250만원	3250만원	3250만원	
	강진의료원	3250만원	3250만원	3250만원	
경북	포항의료원	530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김천의료원	530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안동의료원	530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강원	원주의료원	1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강릉의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속초의료원	1억 5000만원	7500만원	1억원	
	삼척의료원	1억 2500만원	1억원	1억원	
	영월의료원	7500만원	1억 2500만원	1억원	
전남	목포의료원	85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	
제주	서귀포의료원	7억 2200만원			
	제주의료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경남	마산의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진주의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로 인해 연간 3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 진주의료원은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 매년 약 30억원 정도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음.
-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를 적용하고 있음. 즉,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입원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분석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2007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평균 4만 5649원이 저렴하였음.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병원 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 비교(2006~2007년)>

항목	연도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차액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	2006년	9만 6614원	13만 1695원	3만 5081원
	2007년	10만 4279원	16만 497원	5만 6218원
평균		10만 446원	14만 6096원	4만 5649원

-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2010년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는 13만 837원으로, 18만 5,162원(2009년 기준)이었던 동급 민간병원의 71%에 불과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2010년 외래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도 3만 7,468원으로, 4만 7,151원이었던 동급 민간병원(2009년 기준)의 79%에 그침.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병원 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 비교(2011)>

구분	입원	외래
지역거점공공병원(A)	13만 837원	3만 7,468원
민간종합병원(B)	18만 5,162원	4만 7,151원
(A/B)×100	71%	79%
진료비 차액(B-A)	5만 4,325원	9,683원

- 이로 인해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보다 연간 30억원 정도의 진료비 차액이 발생함.

$$30\text{억원} = 45,649\text{원}(\text{환자 1인당 1일평균 진료비 차액}) \times 181\text{명}(\text{하루 평균 입원환자수}) \times 365\text{일}(1\text{년})$$

- 이같은 진료비 차액 때문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

<참고> 결손이 발생하는 공익적 역할

1. 의료안전망 진료과 운영

-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과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16개 진료과²²⁾는 내과계·외과계·응급의료·진료지원부서로 구분됨
- 내과계 :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신경과
- 외과계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 응급의료 : 전담의사
- 진료지원과목 :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 재활서비스과목 : 재활의학과
- 마이너 과목 :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선택적 설치)

2. 의료안전망 의료시설 운영

- 의료 안전망 의료시설은 민간병원이 유지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의료시설로 지역내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부서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신생아실, 행려·격리·호스피스 등 공익병동이 포함됨

3.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차이
 -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18%)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가산율(25%)의 72%에 불과한 데에서 비롯되는 수익 차액. 이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 주요 적자 요인임
- 정신건강의학과 수가 차이
 -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수가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의 63%(30,800원~51,000원), 외래는 80%(27,700원)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많을수록 큰 적자 요인임

4. 공공사업 수행 부서 및 인력 운영

-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공보건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공공의료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운영비)

<참고> 진주의료원과 민간병원간 진료비 비교

- 『보건복지부공공병원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부분에서 아래표의 <국민의료비 양등의 제어판>을 참조하면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 대비 65~88%수준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04 국민의료비 양등의 제어판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 대비 65~88% 수준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				
[민간병원 대비 진료비 수준]				
구분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민간병원 대비 진료비 비중
2005년	입원	92,290	119,182	77%
	외래	31,121	36,589	85%
2006년	입원	96,814	131,695	74%
	외래	32,362	36,897	88%
2007년	입원	104,279	160,497	65%
	외래	35,666	41,485	86%

(단위: 원)

- 참고로 진주의료원의 경우 연도별 입원환자 1인 1일당진료수입은 아래표와 같음.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과 비슷한 진료비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입원(원)	99,043	90,583	108,079	110,190	117,840	124,018	126,203
외래(원)	23,820	21,875	37,687	38,520	43,903	43,647	42,100

- 「2010병원경영분석」, 보건산업진흥원, 2011.12, 493p.를 참조하면 가장최근 병원통계 자료인 2010년도에도 진주의료원과 유사규모의 160~299병상 일반종합병원의 경우 1일당 입원 진료비는 165,952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117,840원으로 동종의 민간병원보다 48,112원의 진료비가 낮은 수준임.
-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타 요양병원보다 높다는 것은 간병료 차이 때문임. 이는 아래와 같이 간병인 1인당 간병환자 수의 차이임을 알 수 있으며 진주의료원의 간병수입은 병원의 수입이 아니라 환자대 간병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간병인 수입임.
- 아래표의 내용과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는 인근 3개소 노인요양병원 보다 오히려 7만원 정도 저렴하나, 간병비의 경우 타 요양병원보다 43만원 ~ 22만원 정도 높음. 따라서 간병서비스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차액이라 할 수 있음.

[진주시내 요양병원 진료비본인부담 비교표]

구 분	의료보험				비고
	계	진료비 (20%)	식대 (50%)	간병료 (평균)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1,000	300	180	520	
A노인요양병원	881	350	231	300	간병료유동적
B요양병원재활	1,331	800	231	300	간병료유동적
C노인요양병원	650	320	231	99	간병료유동적
D노인요양병원	650	330	231	89	간병료유동적

- 간병비가 높은 이유는 아래표와 같이 간병인 1인당 간병환자 수의 차이에 따르며, 진주의료원 간병수입은 간병인(위탁)에게 지급되어 병원 수입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진주시내 요양병원 간병인 현황비교표]

구분	병상 수	총인원	근무체계	간병료(1일)	비율	비고
A요양병원	455병상	55명	3교대	10,000원	8.3:1	직영
B요양병원	344병상	42명	3교대	10,000원	8.2:1	직영
C요양병원	196병상	27명	3교대	5,000~10,000원	7.3:1	직영
의료원	120(110)병상	48명	3교대	15,000~20,000원	2.3:1	위탁

- 진주의료원은 2.3명당 1명의 간병사로 구성되며, 타요양병원은 7.3~8.3명당 1명의 간병사로 되어 있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진주의료원은 1명의 간병사가 7명 정도 간병하고 있고, 타 요양병원의 경우는 25명 정도 간병하고 있음
- 이것은 진주의료원이 타요양병원에 비해 간병인 비율이 높아 간병서비스가 타 요양병원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며, 간병인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및 인건비등 간병인 처우개선이 차별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4>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은 경상남도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원장 선임으로 진주의료원은 5년간 파행운영되었다.

- 병원경영발전을 위해서는 원장의 능력과 책임이 가장 중요함.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신축이전 후 원장이 의료원 발전의 토대를 닦아야 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원장이 한번도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 운영되어 왔음.

종합병원을 경영할 능력있는 원장 부재가 진주의료원 경영을 악화시켰다.

- 2008년 신축이전 후 진주의료원 경영을 책임진 원장은 동네의원 출신이거나 건설회사 출신이었음.
- 이들은 공공병원이자 300병상이 종합병원인 진주의료원을 경영해나갈 능력과 마인드가 부족하였음.

원장과 의사들의 갈등과 반복, 의사들의 집단 사퇴와 수급난으로 경영누수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 원장이 의사들과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 2009년에는 주요 봉직의사가 집단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 2009년 소아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퇴사와 공보의 대체, 2009년 이비인후과의 폐쇄와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에서 공보의로 대체, 2010년 전문의 5명 이직, 2011년 2월 신경외과 전문의 퇴사로 실질적으로 과 폐쇄 등 의료진 사퇴와 의료진 수급난으로 심각한 경영악화가 발생함.
- 봉직의사들이 금요일 휴진을 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함. 이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림에 따라 내원환자가 감소하게 됨.
- 2012년 10월 18일 노사가 무급 토요일무 시행에 합의했으나 의사들의 반발을 통제하지 못한 원장의 무능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장이 직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함에 따라 노사관계도 악화되었고,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경상남도의 무책임이 진주의료원 경영악화를 방치하였다.

-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중요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였음.

- 특히, 원장과 의료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 지도·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를 방치하였음.
- 경상남도는 여러 차례의 감사와 36차례의 경영개선 요구만 했지, 실제 진주의료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성 마인드와 경영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원장과 실력있고 신망있는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를 불러왔음.
-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신망있는 원장 선임과 의료진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 신축이전 후 안정적 정착단계를 밟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진주의료원 경영진의 무능과 불안정한 진료환경, 의사공백, 우수한 의료인력 누수 등 진주의료원은 파행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진주의료원 경영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했음. 이것이 진주의료원 경영위기를 불러온 핵심 원인이며, 진주의료원 운영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상남도의 행정 실패임.

원장	특징	재임기간	재임기간 중 상황
김양수	조선대 의대 (소아과) 소아과 의원개업	2007.3.6 - 2010.3.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원발전위원회 결성하여 환자유치에 적극 동참 및 환자와 주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2. 도의 표적 감사 논란으로 원장이 의료원 발전의 대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2009년에 신축이전 후 처음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겠다'고 판단했는데 경남도에서 표적 감사를 시작했고, 이후 원장과의 갈등으로 의사 5명이 차례로 그만두었음. 3. 책임경영을 방해한 경상남도의 책임이 큼.
강구현	서울대 법대 현대건설 (상무)	2010.3.6 - 2011.10.17 1년 1개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대건설 출신으로 의료계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인사로 표면 상으로 경영전문가가 원장으로 취임해 의료원 부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 2. 전문지식이 필요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의료진들을 장악하지 못함. 3. 2010년 전문의 5명 이직. 4. 2011년 2월 신경외과 전문의 퇴사로 실질적으로 신경외과 폐쇄
권해영	부산대 의대 (산부인과) 산부인과 개업	2012.12.10 - 2013.1.31 1년 1개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남도지사회장 출신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의료원 개혁에 나섬(복수직급제, 병동통합, 병원특성화, 병원급 축소) 2. 그러나, 직원들과의 소통의 부재와 전직원이 체불된 상황에서 홀로 매월 4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입건(서류변조사실 없다고 해명) 3. 내과 의사들의 경우 진주시내에도 좋은 병원이 많아 이직을 알아보는데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권 원장이) 처음 간부들에게 경상남도지사회장을 오래해서 의사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의사들이 나가니까 의사를 채용하지 못함. 4. 2012년 10월 무급 토요일 근무 시행에 합의했으나 의사들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해 시행 못함.

5.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책

1>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유일한 해결책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 기습적으로 진행된 불통행정의 산물로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진주의료원은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현대화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룩하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경상남도가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폐업하거나, 제2청사 건립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거나, 민간자본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기 위해 매각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됨.
- 경상남도는 부채가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심각하고,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경영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함.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우수한 인프라(시설, 장비, 인력), 주택단지와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충분함. 또한, 어려운 진주의료원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특단의 결단을 통해 합의를 이룩한 바 있음. 따라서, 진주의료원은 회생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유능한 원장 선임 등의 조치가 있다면 경영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경상남도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경상남도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함.
- 대신,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 위한 일체의 강제적 조치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 경상남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2월 26일 폐업 발표 이후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함.
-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사업 지원 중단,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저소득층 경남도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없는 병실사업 지원 중단 등 진주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중단되어야 함.
-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퇴원을 종용하거나 약품공급과 진료재료 납품 중단을 종용하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2>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보도와 여론공작 중단

폐업원인을 ‘강성노조 탓’으로 내몰고 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18일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의료원 운영과정의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감사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하라” “부당하게 지급된 엄청난 액수가 아직 환수되지 않았으니 속히 환수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지시함.
- 이것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내몰기 위한 악의적인 발언임.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합리적 해결방안보다는 진주의료원의 도덕적 해이, 강성노조, 부정비리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고 있음.

[임금인상과 인건비 비중] 관련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인건비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 과도한 인건비가 적자의 주요인이며 폐업 이유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 의료서비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은 수익이 적고 기본적으로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민간병원보다 높다. -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보다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연차 노동자 비중이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고숙련노동자가 많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 34개 지방의료원 중 17개가 인건비 비중이 70%대이고,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이지만 폐업한 곳 없다.
고임금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병원보다 의사 및 간호사 임금이 훨씬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만 고임금구조라고 해서는 안된다. -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연봉은 3100만원인데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연봉인 3200만원보다 적다.
임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6년간 임금동결이 아니라 2011년 총액 5.5% 인상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임금인상에 합의했으나 2008년~2010년 3년간 임금합의를 지키지 않다가 2011년부터 2008년 임금합의를 적용한 것을 가지고 2011년 임금인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인상되지 않고 2008년 합의한 임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동결은 노조의 자발적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임금인상이 부결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위기 상황에서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 노동조합에서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다. 6년 동안 임금동결되고 있는 상황을 노동조합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인건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인건비가 18억원이나 늘어났다. - 환자수는 일정수준인데 직원 정원은 91명 증원에 기인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에 합의한 임금인상을 2011년에서야 적용함에 따라 2011년 인건비가 증가된 것이다. - 인건비 증가분 18억원 중에서 의사인건비가 2010년 32억 3000만원에서 2011년 42억 3000만원으로 10억원 증가되었고, 의사를 제외한 직원인건비는 8억원 증가한 것이다. - 직원정원은 2009년 대비 2010년에 3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고통분담] 관련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고통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로 2012년 원장을 고발한 것을 보면 고통분담은 터무니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6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카드빚을 내고, 학원과 우유를 끊고, 친인척들에게 생활비를 빌려야 생활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 이것은 고통분담과는 다른 문제이다.
토요 무급 근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무급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노조측에서 불참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0월 26일 토요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토요근무를 위한 TF팀까지 만들어 시행하고자 노력했으나 원장과 갈등관계에 있던 의사들이 거부하였고, 원장이 이들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실시되지 못했다. - 원장의 무능력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노동조합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시켰다.
연차 수당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연차수당 1/2 반납하기로 했으나 간부직원을 제외하고는 반납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수당 1/2 반납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따라서 연차수당 1/2 반납을 결의해놓고 실제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경영진단 실시] 관련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경영진단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거부하여 폐업사태에 까지 이르게 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7월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7,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이며 낭비이다. -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결과가 뻔한 일방적인 경영진단은 안된다. 노사의 공동입장이 반영되는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강성노조] 관련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노조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가 강성이라 경남도의 대응이 불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의료원지부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6년간의 임금동결, 31명의 명예퇴직(사실상 정리해고), 주5일제를 무너뜨리는 토요일무급근무, 2013년부터 연차휴가 1/2 반납도 감수했다. 강성노조가 아니라 병원이 어려울 때 고통분담하고 양보할 줄 아는 합리적인 노조이다. -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 지침을 하달하고, 폐업을 강행하는 경상남도가 강성이다.

[혈세 낭비] 관련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혈세 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혈세낭비를 할 수 없어 폐업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돈은 2010년 11억9천만원, 2011년 13억6천만원, 2012년 12억2천만원 밖에 안 된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치고는 너무나 미미한 액수 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지원을 끊기 위해 도민의 혈세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원 증가] 관련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정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명에서 250명으로 정원을 늘려 의료수익구조를 악화시켰다. - 경영이 어려워는데 직원수가 더 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면서 병상이 늘어났고, 노인요양병원 병상수가 증설(40병상)됐다. 병상수 증가에 따른 인원증가는 당연하다. - 신축이전 하면서 2007년 16명, 2008년 41명의 인원이 증가가 있었으나 2009년에는 2명, 2010년에는 3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노인요양병원의 병상수 증설(80병상→120병상)로 19명이 증가했다. -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2년에는 23명이 감소하였고, '13.2.28자 13명의 명예퇴직을 포함하여 2013. 3. 1일 기준 24명이 감소하였다.

[공공의료 수행] 관련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진료비 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의료원과 민간병원 진료비가 하루 4만 5649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조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에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 차액이 4만 5649원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30억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관련자료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도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진료비 차액이 입원환자 1인당 평균 5만 4,325원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 지방의료원은 비급여, 불필요한 검사, 무분별한 고가진료 등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환자는 어디서나 진료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 의료급여환자는 어디서나 진료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에서는 병원이익에 손해가 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많아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환자를 2배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 - 2006년 기준 의료급여환자 비율 비교 <p>-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민간병원보다 높음</p> <p>[의료급여 환자 비율(2006년 기준)]</p> <table> <tr> <th>구 분</th><th>지방의료원</th><th>민간병원</th></tr> <tr> <td>총 계</td><td>27.8%</td><td>16.6%</td></tr> <tr> <td>입 원</td><td>41.8%</td><td>13.2%</td></tr> <tr> <td>외 래</td><td>19.3%</td><td>19.7%</td></tr> </table> <p>(단위:%)</p>	구 분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총 계	27.8%	16.6%	입 원	41.8%	13.2%	외 래	19.3%	19.7%
구 분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총 계	27.8%	16.6%												
입 원	41.8%	13.2%												
외 래	19.3%	19.7%												
노인요양병원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이 인근요양병원보다 1인당 월 20만원~45만원 이상 비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의 진료비와 식대 등은 인근노인요양병원보다 7만원 정도 저렴함. 다만, 간병비의 경우 인근 노인요양병원보다 22만원~43만원 가량 비싸다. -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의 간병비가 비싼 이유는 간병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 차이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간병인과 환자 비율이 1:2.3명인 반면, 인근 노인요양병원은 1: 7.3~8.3로서 진주의료원은 1명의 간병사가 7명 정도의 환자를 간병하는 반면, 인근 노인요양병원은 1명의 간병사가 25명 정도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다. - 이같이 간병서비스의 질에 따른 차등 간병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비싼 간병비로 영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취질 우려가 있다. 												
공공의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의료원은 2012년에 무료방문진료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의료원 2012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을 보면 도비 6억 3380만원과 자비 2억 900만원을 들여 연인원 1만5천여명에게 공공의료사업을 시행했다. -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은 실인원 12명, 연인원336명에 대해 실시했고,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은 8회 257명에 대해 실시했다. -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항목	경상남도 주장	노동조합측 입장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별 차이가 없다. 공공병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의료원은 인근 고려병원, 제일병원, 반도병원, 진주 한일병원보다 진료비와 각종 검사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유방, 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2만원 가량 싸며 뇌혈관 MRI 경우는 20만원이나 저렴하고, 종합검진도 4만원 저렴하고,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도 3만원 이상 저렴하다. 특히 수익을 남기기 위한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양심적이고 적절한 진료를 한다.
공공의료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중 공공의료는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이 공공医료를 담당하는 것보다 민간의료기관에 공공医료를 담당하는 게 더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료사업비로 계산된 액수만을 기준으로 공공의료 수행 잣대를 삼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진주의료원의 사업수행 전체가 공공의료이며, 민간의료에 비해 저렴한 비용(환자 1인당 1일 평균 입원진료비가 4만~5만원 정도 저렴)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부분적으로는 진주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이 진주의료원과 같은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의료원은 보호소가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의료원은 장기환자들, 수익성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환자들,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다. 이것이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장기환자를 돌보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2009년과 2011년 종합감사 결과] 관련

- 경상남도는 2009년과 2011년 두차례 진주의료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마치 진주의료원 임직원 전체가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이것이 진주의료원 부실경영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이 경상남도가 2009년과 2011년 두차례 진주의료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경상남도의 진실호도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
- 시간외수당이나 보수 초과지급은 주로 의사들이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사들을 유치하고,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영진측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대다수 일반직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원장이었으며, 수익계약이나 정원관리 부적정 등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책임도 주로 원장과 경영진들에게 있었음이 드러났음.
- 또한, 일반 직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 승진임용 등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로서 부정·비리와 무관한 것임이 밝혀졌음.

- 이렇게 볼 때 진주의료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실경영과 부당행위의 책임은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있고, 원장선임과 공무원 파견,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맡은 경상 남도가 짊어져야 할 몫이지, 진주의료원 임직원 전체를 부도덕하고 부정·비리집단인 것처럼 호도하여 폐업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부당함.

<2009년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분석>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공공보건의 기타보수 초과지급	4억 5068만원	의사	- 불리한 근무조건, 종합병원 증설에 필요한 진료과 개설로 사기진작, 적극적 진료 유 도 위해 지급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수의료장비 활성화수당 부당지급	1227만 3000원	의사	-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1억 8072만원	의사	- 응급실 근무의사의 열악한 환경(환자폭행 등)으로 응급실 근무 기피 해결, 타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당직비 개선
요양 및 의료급여 심사청구 업무 소홀	6억 1439만원	원무과	- 내용 : 항생제 처방일수 초과, 급여기준 초 과 처방, 급여기준 초과 입원, 지급보류, 심사불능 등 - 조건 : 인력부족, 청구담당자 인사이동
진료비 미수납자에 대한 징수 소홀	6965만 1000원	경영진	- 전화독려 및 납부독려서만 발부함 - 미수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중복
정원관리 부적정	1억 7800만원	경영진	- 간호사 4명 미충원으로 수익창출 못함
	1억 4300만원	경영진	- 노인요양병원 5등급 상향하지 못함
사무직 정원관리 부적정	3억 6000만원	경영진	- 진주의료원 증설로 계약직 채용 - 인건비 과다 지출, 인력부족 때문
수의계약 체결, 예산낭비	1억원	경영진	-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 - 담당자 업무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
원장 접대경비 개인용으로 사용	2857만원	원장	- 신축이전을 앞두고 홍보, 수익증대를 위한 활동
의사 기본연봉 책정 부적정		원장	- 원장의 결정에 따라 책정

<2011년도 종합감사 주요지적 사항 분석>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지인에 대한 진료비 부당 감면	3억 2063만원	직원	- 병원의 진료수입을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감면 - 직원들의 지인 진료비 감면은 1799만 1000 원임.
공무차량 운행 및	291만 3000원	원장	- 강구현 원장 : 용도미상으로 12회 사용

관리 소홀			- 김양수 원장 : 1년3개월간 299회 공무차량으로 출퇴근
공중보건 의사 보수지급 부적정, 진료수당 초과 지급	8062만 1120원	의사	- 휴일근무와 의료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독려 - 진료과장 집단사퇴로 병원존립의 기로에서 공중보건 의에게 적극적인 병원업무 권유
기본연장 책정 및 진료수당 지급 부적정	9286만 3760원	의사	- 7명의 의사 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지급 - 의료의 질 담보, 경영성과 지향을 위해 진료수당을 높여 의료수입증대를 목표로 함.
의사 당직비 부담 지급	2880만원	의사	- 의사 집단퇴직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
응급실 당직 의료인 응급진료 및 당직 부담운영	6367만 5000원	의사	- 의사 수급이 여의치 않아 부족한 의료진 운영 - 타 의료기관의 의사 대체근무
접대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600만원	원장	- 26건을 개인용으로 사용 - 주로 병원장이 병원사업 관련 지출
요양·의료급여 심사청구 관련 업무 소홀	2억 3524만원	경영진	- 항생제 과다 사용 억제, 3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퇴원 등 개선 노력
징계처분과 보수 지급 부적정	486만 2780원	경영진	- 정직 처분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 정직처분시 급여지급 범위 숙지해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율 책정 부적정	1161만 5900원	의사 경영진	- 보수규정 제정 필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부적정	8153만 7000원	경영진 직원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협약을 관행적으로 운영해옴. - 직원은 4~5명, 나머지는 주로 기관
여비집행 부적정	20만 8000원	원장	- 실제 출장가지 않고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직원간담회 관련 비용	480만원	원장	- 직원 간담회 경비는 복리후생비에 편성하지 못하는데 편성 - 직원의 사기진작, 원활한 업무수행, 경영수익증대
법인 카드관리 및 사용 부적정	2만 6000원	원장	- 법인카드를 주유소, 호프집 등 개인용으로 3회 사용함

경상남도는 왜곡보도와 책임 은폐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고, 공공병원 폐업에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기 위한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직원들의 목소리,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
- 경상남도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을 강성노조로 내몰 것이 아니라 직접 진주의료원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진주의료원 경영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야 함.

3> 공공의료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지원 확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확대

-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거점공공병원임.
- 따라서,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 됨.
-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10억여원의 지원 수준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지역개발기금 부채 청산

-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대부분 ‘의료원 신축이전 또는 증·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때문에 발생한 것임. 따라서 지방의료원 차입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임금체불, 경영악화가 심화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을 지방의료원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시설투자가 불가능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진주의료원 총부채(279억 2100만원)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7억 4623만 1000원(원금+이자)에 대해 경상남도가 연차적으로 도비로 지원해야 함.
- 지원내역
 - 신축공사 대금 : 28억 3623만 1000원(원금+이자)
 - 신축이전 장비구입비 : 37억원(원금+이자)
 - 운영비(시중은행 차입금) : 60억 591만 1000원(원금+이자)

공공의료사업비 지원

-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압박이 되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경상경비를 지원해야 함.
- 예를 들어, 호스피스병동의 경우 진료수익에 비해 인건비, 관료비, 재료비 등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능력있는 원장과 우수 의료진 배치

- 공공병원에서 유능한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경영개선의 핵심과제임. 따라서 경상남도는 신망있고 유능한 원장 선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 또한, 국립대병원(경상대병원) - 지방의료원(진주의료원) - 보건소로 이어지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세우고, 우수 의료원 파견, 탄탄한 교류협력관계 형성해야 함.
- 한편, 의사 수급난,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진주의료원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 혁신도시 1만 세대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의료협약식 등을 체결하여 진주의료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

-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함.

<사례>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

- 2011년 충청남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부채도 519억원에 달하자 충청남도는 “의료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담반을 구성, 선진화 방안을 추진함.
- 이후 충청남도는 4개 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으로 편중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지방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함.
-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는 의료원 경영자, 노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자 간 합의 틀로 구성되며, 충청남도, 의료원, 노조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2년 9/26일 21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고, 의료원 경영난 타개와 공공의료기관으로의 공공성 확보, 급변하는 의료 환경 대처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료원 누적 부채 중 시설·장비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일부 기금 상환 연체에 따른 이자 비용은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원장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공범석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내 의료원의 공익적 가치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며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함.

진주의료원 경영진단팀 구성

-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발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발전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함.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회의 산하에 <경영진단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4>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지방의료원 먹튀 방지를 위해 폐업시 국고 환수

-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5.9%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역대정권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현대화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료원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음.
-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신축이전을 위해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고, 지난 5년간 2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음.

연도	지방의료원 전체 지원	진주의료원 지원	진주의료원 지원 내역
2008년	378억원	20억 5560만원	장비보강, 호스피스병동 건립, 공공의료수탁사업,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2009년	527억 2900만원	5억 3600만원	장비보강,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2010년	327억 1200만원	9510만원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2011년	438억 6200만원	0원	
2012년	404억 3500만원	7654만 9000원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2013년	406억 3550만원	4100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총계	2481억 7350만원	28억 424만 9000원	

-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장비보강 지원금과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호스피스병동 건립과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 등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2008년 신축이전 이후 5년 동안 3차례나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금을 제공했음. 2013년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으로 4100만원이 지원됐음.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것임.
-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먹튀행위임. 더군다나 진주의료원은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정도로 자산가치가 늘어났고, 주변지역에 1만7천세대의 주택단지과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폐업시키려 하고 있음.
- 국비와 도비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함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할 경우 투입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법개정

-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의료원을 300명상 이상 규모로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음. 현대화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방의료원 신축이전에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왔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음.
-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신축이전사업비 534억원 중 2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했고, 2008년 신축 이전 이후 진주의료원에 30억원의 공공의료사업 예산을 지원해왔음.
- 그런데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폐업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투입된 국비를 경상남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먹튀행각임.
- 더군다나, 보건복지부가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34개 지방의료원 어느 한 곳에 대해서도 <폐업> 진단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이 같은 진단결과를 무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음.
-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존폐가 좌우되고 경영불안이 가속화되는 폐단은 중단되어야 함.
- 이에 막대한 국고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폐업할 수 없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비 지원

-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입을 수 밖에 없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지원해야 함.
- 그동안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주로 시설과 장비 보강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손실과 인건비 지원 등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꼭 필요함.

토론 1.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

강 성 훈 경상남도 의원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

경상남도 도의원
강 성 훈

1. 정백근 교수의 발제문에 대하여

공공병원이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적자가 당연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정부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에 동감을 표현하는 바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경상남도는 법의 개정 이유를 잘못 해석하여 진주의료원의 폐업근거로 삼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경상남도의 각성과 보건복지부의 이 법률안에 따른 세부지침안 마련이 시급함을 느낀다.

제안하신 거버넌스 구축은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실히 필요하며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의 운영의 모범적인 예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교수님은 지역에서 열심히 진주의료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계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진주의료원이 희생되고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해 조력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의 발제문에 대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과 해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고 경상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이해하며 이제는 정말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도지사는 어느 누구의 면담도 거부하고 목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갈 곳이 없다며 매일 눈물로 호소하는 환자,보호자가 있는 진주의료원에는 아예 가 볼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 340만 도민의 대표로서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이 철회되고 경영정상화의

노력들로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협조 요청을 간곡히 바랍니다.

3.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가?

① 진주시와 도시사의 치적 쌓기용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 2002년 2월의 사회산업위원회 진주시의회 회의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지사는 인근 문산의 요양병원이 지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전문요양시설원을 일방적으로 진주시와 협의없이 계획했고 모병원장의 항의로 지금 형태의 의료원이 구상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강의원 ;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빼버리고 도지사의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 진주시는 국,도비가 투입이 되어 진주시에 지어진다는 걸 꼭 받아야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환경국장 ;노인 전문요양원의 수치를 따져 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만큼 오고 그런 것을 수치를 따질 때에 다른 시가 국비를 다 가져 갑니다. 그러면 진주시는 언제든지 뒤만 따라 갑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진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 강 의원은 진주시의 전체적인 수요예측이나 필요성, 증감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병원이 설립되어야 함을 질타했고 진주시 집행부는 지으면 수요는 채워진다는 입장이었다

제65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2.02.22 금요일) 회의록 발췌

- 강00위원 경상남도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1,000명 수용으로 전문요양원을 짓는 것을 아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00 그것은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 강 위원 병원이죠?
- 가정복지과장 김00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의료법인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 강00 위원 그러니까 그 의료법인을 만드는데 전문요양원으로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00 전문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위원 그것이 그 법인 성격이 일반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고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노인 전문병원이라는 성격이 노인전문요양원도 절반은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손00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남도 지사님이 계획을 한 일인데 현재 종축장 자리가 옮겨지면 그 자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병원을 하면서 일부는 전문요양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병원하고 같이 얹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지사님이 생각을 하시고 도내에 동부, 중부, 서부 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문산에 병원장이 짓고 있는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께서 그 날 지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노인병원을 짓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병

원을 지으면 서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원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입장이 아니라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진주시로 보아서나 서부경남을 보서는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춘 병원시설이 많으면 노인들한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노인병원을 짓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인원을 빼앗기면 자기들이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것까지 짓는지는 몰랐는데 그것이 옳다고 해서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강00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경상남도에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주의료원이 되었든 또 다른 법인이 되었든 전문요양시설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진주에 있는, 아까 국장께서 특정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노인병원을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00** 그것은 병원입니다. 400평이라고 합니다.

- **강00 위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진주시의 전체적인 수요예측이나 필요성, 증감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놓고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요양원의 증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국비를 지원해 주면 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에서 하고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하고 또 전문요양원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예산을 25%나 30%를 몇 천만원이 되었던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00** 예, 그렇습니다.

- **강00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때에는 적정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도비도 남고 개인이 투자한 것도 사업이 안되고 시비를 해주는 것도 병상이 남아돌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인식하고 있는 사항에서 200평의 규모가 적정하냐,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00**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중풍환자, 치매환자 대상자는 600명이 되는데 전문요양원은 69명 정원입니다.

- **강00 위원** 과장님, 전문요양원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작년 4월에 했습니다.

- **강00 위원** 1년 만에 증축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냥 지어놓고 앞으로 땅을 사고 계속 증축하면 되겠다 라는 발상을 했던지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정부지원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강00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정부 단가가 정해져서 적정 규모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또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 **강 위원** 그런 오류를 안 범하기 위해서 도에서 1,000개 병상 규모로 짓고 또 개인이 400평 규모로 전문요양원에서도 짓고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를 수치를 계산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지사께서도 즉흥적입니다. 1,000개 병상 규모로 짓겠다,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빼버리고 도지사의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무국장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와서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지사가 임의대로 와서 지어서 되겠습니까? 전문 장례식장이 바라다 보이는 곳 아닙니까? 노인들이 나와보면 전문 장례식장이 보이는데 그런 곳에 있겠습니까? 장소도, 위치도 맞지 않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진양호 밑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 행정을 하고 있는 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하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요양원도 200석 규모가 될는지 300석 규모가 될는지 좀더 신중하게, 얼마나 필요할지

- **사회환경국장 손00** 한마디만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한지 33년이 됩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는 하지 않았습디만 세계의 개발국가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수치가 따지고 계획을 하다가는 언제든지 후순위입니다. 21세기는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의 수치를 따져 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만큼 오고 그런 것을 수치를 따질 때에 다른 시가 국비를 다 가져 갑니다. 그러면 진주시는 언제든지 뒤만 따라갑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진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단 잡아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뒤에 수치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문산 전문요양원의 경우도 지어놓고 보니까 수요자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증축을 해서 많은 수요자를 조금이라도 커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의 생각은 행정을 하는 저희들하고 조금 안 다르겠습니까만 원칙론을 따지고 계수를 따지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위원** 이것만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판단하시는 선진국과 강주열 의원이 판단하는 선진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선진국은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하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통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통계를 낸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무조건적으로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수요에 따라 간다는 그러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언제든지 국장님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손00**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② 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 실패

- 진주가 의료공급과잉지역이라는 보고서도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접근성없는 곳에 신축을 하여 환자가 적었다

③ 유능한 원장과 우수 의료진 전무

④ 도비 지원액 미비 (매 년 12억정도 수준)

4. 그러나 이제는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성 눈앞에 있다.

1> 적자 뺄튀기 (60억이 아니라 년 10억의 적자로 경영건전함)

- 진주의료원의 40억~60억원 순손실(적자)은 그대로 자본을 잠식하는 것이 아님. 즉, 40억~60억 순손실 가운데에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지만 실제 현금으로 빠져나가 자본을 까먹는 것이 아님. 2008년 신축이전한 이후 진주의료원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30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40~60억원의 순손실 중 30억원의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진주의료원의 순손실은

10억~20억원대로 줄어듦. 따라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과장임.

<대차대조표>

(단위:억 원)

과 목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자산총계	610	649	678
1. 유동자산	33	42	86
(1)당좌자산	29	38	83
(2)재고자산	4	4	3
2. 비유동자산	577	607	592
(1)투자자산	-	2	2
(2)유형자산	577	605	590
부채 총계	279	253	224
1. 유동부채	151	119	82
2. 비유동부채	128	134	142
자본총계	331	396	454
1. 기본금	588	584	579
2. 결손금(-)	257	188	125
부채와자본총계	610	649	678

<손익계산서>

(단위:억 원)

과 목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의료수익	151	158	142
의료비용	235	236	209
(1) 인건비	125	123	104
(2) 재료비	29	38	34
(3) 관리비	81	75	71
의료손실(-)	84	78	67
의료외수익	46	42	36
의료외손실	31	27	18
당기순손실(=경상손실)	69	63	49

<현금흐름표>

(단위:백만원)

과 목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1. 영업활동	-2,932	250	-6,277
(1) 당기순이익	-6,947	-6,277	-4,845
(2) 현금유출 없는 비용가산(감가상각비 등)	4,887	4,212	4,085
(3) 현금유입없는수익차감(유형자산처분익등)	-	-23	-6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부채의 변동	-872	2,318	-5,511
2. 투자활동	-424	-2,738	1,103
(1) 현금유입	323	2,012	12,766
(2) 현금유출	-747	-4,750	-11,663
3. 재무활동	2,860	-	6,291
(1) 현금유입	4,617	1,457	6,851
(2) 현금유출	-1,756	-1,457	-560
4. 순현금흐름(=1+2+3)	-496	-2,488	1,117

<경영분석비율>

과 목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평균비율
1.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1.8%	35.2%	105.7%	
2.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84.3%	63.9%	49.3%	63.3%
3.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의료수익)	-34.1%	-26.5%	-45.9%	
4.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21.0%	-15.9%	-10.2%	
5. 이자보상배율(의료손실/이자비용)	-15.3	-16.3	-15.7	
6. 경상수지비율(경상수익/경상비용)	73.9%	76.1%	78.6%	92.3%
7. 의료수지비율(의료수익/의료비용)	64.2%	67.0%	68.2%	80.8%
8. 환자1인당진료수익(입원수익)	102,592원	100,031원	95,753원	
9. 환자1인당진료수익(외래수익)	42,037원	43,779원	44,052원	
10. 채권자현금흐름(이자부채+이자비용)	-18억	9억	-19억	
11. 고정장기적합율	125.8%	114.2%	99.2%	97.3%
12.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82.8%	77.6%	73.3%	68.9%
13. (의료수익+의료부대수익- 의료부대비용)대비 인건비율	73.7%	70.7%	65.8%	
14. 노동생산성(부가가치/총직원)	37백만원	36백만원	32백만원	47백만원

<청산가치>

(단위:억원)

1. 2012년도말 자산 총계	610
2. 토지평가차익	162
3. 부채 총계	279
4. 청산가치(=1+2-3)	493

<당기순손실과 현금흐름 요약>

(단위:억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	69	63	49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당기순손실(-)	36	32	20
감가상각및퇴직급여를 제외한 당기순손실(-)	21	22	11

-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유동성 악화와 유형자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비율 악화는 계속적인 적자와 차입금에 대한 상환 등이 원인이다. 또한 유형자산이 자산대비 94% 차지하고 있고 고정장기적합을 추이를 보더라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63%로 나빠진 않다. 또한 청산가치가 약 500억으로 단순히 따져봐도 존속이유가 충분하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미 구입한 유형자산의 원가회수를 위한 인위적인 배분에 불과하므로 미래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좋은 입지조건과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 있다

- 좋은 입지조건
 - 동부권과 혁신도시 인근에 급성기병원 2군데(한일병원,진주의료원) 있고 혁신도시 공공청사 추진현황에 병원 설립계획 없어 진주의료원이 필수 시설임.
 - 현재 2군데 밖에 없는 급성기병원을 없앤다는 것은 지역민의 건강권을 일방적으로 도가 나서서 포기하는 것이다.
 - 현재 200여명의 외래 환자는 올해 말 경 이후는 급속적으로 증가 가능성 농후 함.
-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
 - 상대동, 하대동, 초전동, 금산,문산읍 등 기존 인구 10만 9천명
 - 푸르지오 아파트 1000세대 2012년 초에 입주 완료 함
 - 아파트 단지 : 진주의료원 주변에 3000세대의 아파트 조성 중 (엠코, 해모루 아파트는 2013년 9월경 입주 예정)
 - 혁신도시 : 진주의료원 3km 거리에 1만 3000세대 혁신도시 건설 중 (올해 12월부터 2400여 세대 입주 시작되어 혁신도시 이전 완료되는 2014년 전 후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 예상)
 -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3574여명)
 - 중앙관세분석소 업무개시 함(2014년까지 혁신도시 관련 11개기관 이전 완료 예정)

■ 경남진주 혁신도시 추진현황

I

혁신도시 개요

- ❖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 조성
- ❖ 주거·교육·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금산면, 호탄동 일원
- 규 모 : 4,077천㎡, 계획인구 38천명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상남도개발공사, 진주시

- 사업기간 : 2007~2013(7년간) ※ 현공정 98.9%
- 사업비 : 1조 577억원(조성비 6,316, 용지비 4,261)
- 공공기관 이전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약 3,574명)

주택건설기능군(3)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임차)
산업지원기능군(3)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기타이전기관(5)	한국남동발전(주),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임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임차)

기관명	본사인원(지방이전 계획 승인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1423명
주택관리공단(주)	108명
한국시설안전공단	25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59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0명
한국세라믹기술원	250명
한국남동발전(주)	290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70명
국방기술품질원	375명
중앙관세분석소	26명
한국저작권위원회	151명

II

그간 추진사항

- 혁신도시 건설 최종 후보지 발표 : '05. 10.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07. 3.
- 기공식 및 사업 착공 : '07. 10.
- 혁신도시 토지보상 완료 : '08. 10.
- 서측진입교량 가설공사 착공 : '09. 12. 21
- LH통합 본사 경남 일괄 이전 유치 : '11. 5.
- 4개 이전공공기관 합동착공식 개최 : '11. 12.
 -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앙관세분석소,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사옥 착공 : '12. 11.

▲ 공공청사

구 분(개소)		면적(㎡)	추진상황	비고
공공청사	주민센터(1)	2,856	○ ‘12.5: 부지매입, ○ ‘13.년 초: 착공 ○ ‘14년 초: 개청	진주시
	파출소(2)	928	○ 향후 치안수요에 맞춰 점진적 건립 추진	진주경찰서
		988	“	
	치안센터(1)	120	○ 기존 동진주 경찰초소 운영 중(‘02.12.31.)	부산지방
	우체국(1)	867	○ ‘13년: 부지매입 ○ ‘14년 초: 착공 ○ ‘14년 말: 개청	

	소 방 파출소(1)	2,253	○ 혁신도시 인근에 진주소방서와 문산119 안전센터가 인접하여 소방방호 활동에 지장이 없어 건립 불필요	우정청 경남상도 소방본부
교육 시설	유치원(3)	① 988	○ '11.6. : 분양(민간에서 수요 상황에 따라 건립 예상)	민간
		② 2,231	○ '11.6. : 분양(민간에서 수요 상황에 따라 건립 예상)	
		③ 1,277	○ '11.8. : 분양(민간에서 수요 상황에 따라 건립 예상)	
	초등학교(3)	① 11,742	○ '13년 : 부지매입 및 건축 ○ '14.3. : 개교	경상남도 교육청
		② 13,101	○ 입주 시기에 맞춰 투융자심사 수시 반영	
		③ 12,057	"	
	중학교(2)	① 14,021	"	
		② 13,856	"	
	고등학교(2)	① 13,961	"	
		② 13,608	"	
문화 시설	문화시설(2)	18,068	○ 진주종합운동장, 진주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여성문 화 웰빙센터 등의 시설이 혁신도시 인근에 있어 충족하 나, 필요시 장래 수요 상황에 맞춰 건립예정	-
		1,662	○ '12.11. : 부지매입(향후 주민의견 수렴하여 건립추진)	진주시
사회복 지시설	어린이집(1)	1,694	○ '13년 : 부지매입 ○ '14.10. : 건축 및 개원	진주시

▲ 경남진주 혁신도시 조성 토지 분양 현황

구 분			분 양 계 획				분양률 (%)	비고	
			전 체		분 양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면적대비		
총 계			1,176	2,155,033	822	1,168,882	54.2		
혁신 클러스터	소 계		17	446,122	10	225,706	50.6		
	이전공공기관		9	229,604	7	213,966	93.2		
	산학연클러스터		8	216,518	3	11,740	5.4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010	1,090,553	739	616,539	56.5		
	단독주택	계	975	444,688	725	209,516	47.1		
		일반형	970	279,491	725	209,516	75.0		
		블럭형	5	165,197	-	-	-		
	공동주택	계	14	629,396	9	403,907	64.2		
		연립	1	24,865	-	-	-		
		아파트	소 계	13	604,531	9	403,907	66.8	
			60㎡ 이하	4	141,999	4	141,999	100.0	
			60~85㎡	5	313,473	5	261,908	83.6	
			85㎡ 초과	4	149,059	-	-	-	
	근린생활시설용지		21	16,469	5	3,116	18.9		
상업 용지	합 계		90	194,065	41	61,402	31.6		
	상업용지		41	75,160	40	59,446	79.1		
	업무용지		45	56,585	1	1,956	3.5		
	주상복합		4	62,320	-	-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합 계		59	424,293	32	265,235	62.5		
	교육시설	계	10	96,842	4	16,238	16.8		
		유치원	3	4,496	3	4,496	100.0		
		초등학교	3	36,900	1	11,742	31.8		
		중학교	2	27,877	-	-	-		
		고등학교	2	27,569	-	-	-		
	공공청사	계	7	24,927	3	5,229	21.0		
		주민센터	2	19,771	1	2,856	14.4		
		우체국	1	867	-	-	-		
		선관위	1	2,253	1	2,253	100.0		
파출소		2	1,916	-	-	-			

	치안센터	1	120	1	120	100.0	
	종교용지	3	8,570	2	6,353	74.1	
	체육시설	2	19,730	1	1,662	8.4	
	전기공급시설	2	2,852	1	2,596	91.0	
	주차장	26	30,573	17	21,605	70.7	
	통신시설	1	225	1	225	100.0	
	사회복지시설	1	1,694	-	-	-	
	주유소	3	4,737	2	3,225	68.1	
	운동장	1	208,102	1	208,102	100.0	
	자동차관련시설	2	3,119				
	유보지	1	22,922	-	-	-	

▲ 경남진주 혁신도시 공동주택 분양 현황

블록	세대수 (호)	주택유형	용지 매각	사업 계획 승인	주택공급				시행사, 시공사	비고
					착공	분양	준공	입주		
A-1	742	공공분양 (60~85㎡)	LH사용	'10.12.16.	'11.09.29.	'12.08.	'13.10.	'13.12.	LH (주)한양	분양완료
A-2	211	분양 (60~85㎡)	미매각	-	-	-	-	-	LH	
	183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LH	
A-3	862	국민임대 (60㎡이하)	LH사용	'09.06.30.	'15.10.	'16.12.	'17.12.	'18.01.	LH	
A-4	1,037	공공분양 (60~85㎡)	LH사용	'10.12.16.	'11.12.30.	'12.08.	'13.12.	'14.02.	LH 코오롱	분양완료
A-5	600	공공임대 (60~85㎡)	LH사용	'10.12.16.	'12.06.29.	'13.06.	'14.08.	'14.09.	LH 한라건설	'13년 분양예정
A-6	777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LH	
A-7	756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LH	
A-8	803	공공분양 (60㎡이하)	LH사용	'09.06.30.	'13.05.	'13.09.	'15.07.	'15.08.	LH	'13년 분양예정
A-9	630	공공분양 (60㎡이하)	LH사용	'09.06.30.	'14.05.	'14.09.	'16.07.	'16.08.	LH	
A-10	404	공공분양 (60~85㎡)	LH사용	'10.12.16.	'14.12.	'15.	'16.10.	'16.11.	LH	
A-11	882	민간임대 (60㎡이하)	'10.11.19.	-	-	-	-	-	(주)부영	
A-12	624	분양 (60~85㎡)	미매각	-	-	-	-	-	경남	
	529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경남	
A-13	1,421	분양 (60~85㎡)	'10.12.08.	'13.02.04. 신청 중	-	'13.04.	-	-	DS네트 웍스 한림건설	'13년 분양예정
소계	10,461									
B-3	191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경남	
소계	191									
C-1	190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경남	
C-2	648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LH	
C-3	272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LH	
C-4	357	분양 (85㎡초과)	미매각	-	-	-	-	-	LH	

블록	세대수 (호)	주택 유형	용지 매각	사업 계획 승인	주택 공급				시행사, 시공사	비고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소계	1,467									
계	12,119	-	-							

3>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 경상남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 진주지역 공공기관 등과 의료협약식 등을 체결하여 건강검진 등 진주의료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4> 경남 최고의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5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지은 신축건물로 각 병동은 넓고 쾌적해 환자,보호자,직원 이 만족하는 시설이고 넓은 주차장과 호스피스병동,장애인치과,장애인산부인과,보호자없는 병원,장례식장까지 갖추고 있다.

5. 경상남도,정부의 향 후 지원책은 무엇인가?

- ① 지역개발기금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한다.
- ② 공공의료사업비를 적극 지원해야된다.
- ③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해줘야한다.
- ④ 명예퇴직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

- 명예퇴직 소요 예산은 약 (40억원) 정도로 추산됨. 진주의료원의 재정으로로는 명예퇴직 소요 예산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해 명예퇴직 소요예산을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⑤ 능력있는 원장과 우수 의료진 배치
- ⑥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⑦ 도지사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개발,건설사업 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건강권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갈 곳을 폐쇄한 다라는 것은 도가 할 일이 아니다. 산청,함양지역의 서부권역에 5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 예산 있으면 진주의료원을 회생시켜야 되고 산청 ,함양 등지의 공공병원이 필요 하면 적정한 규모로 건립하면 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은 하 나도 없다.

▲ 도지사 공약 사업

연번	공 약 명	페이지	연번	공 약 명	페이지
1	도정개혁단 설치	1	25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57
2	지방재정조정제도 적극 시행	2	26	김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 지원	60
3	여성·아동 안전한 귀가길 추진	4	27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	62
4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6	28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착공	64
5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9	29	진주 IC 입구~혁신도시간 연결도로 조기 개설	66
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13	30	함양~울산 고속도로 경남구간 조기 착공	68
7	분리매각을 통한 경남은행 조기 민영화	15	31	마산~거제간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70
8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17	32	경남예술단 창단	72
9	항공우주·항공소재산업 국가산단 조기 조성	20	33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75
10	해양플랜트 첨단산단·산업기지 건설	22	34	합천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	78
11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	25	35	낙동강 수변 문화벨트 조성	81
12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27	36	국난극복·호국 관광루트 개발	83
13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30	37	남해안 도보여행길 정비	85
14	항노화산업 육성	33	38	제2거점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	88
1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35	39	경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치	90
16	경남 시설원에 산업벨리 조성	37	40	지속가능한 장애인지원체계 구축	92
17	의령·함안·창녕·합천 친환경농업벨트 지정	39	41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94
18	농특화자원의 가공산업 융복합화로 농업소득 견인	41	42	다문화체험 및 교육센터 운영	101
19	친환경적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43	43	민자사업 TF팀 구성·운영	103
20	해안지역에 산재한 항만기능 회복 방안 마련	45	44	예산집행점검단 운용	105
21	어업과 관광연계 어촌소득 증대	47	45	투자기업유치단 신설	107
22	양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49	46	사회적기업 최소10년 생존보장 프로젝트 추진	108
23	진해 국제물류거점 조성	51	47	청년일자리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111
24	창녕 우포늪 주변 에코벨리 구축	53	48	거창·함양·산청, 친환경 약초·산채산업 육성	114

- 기존의 보건소에서 국비,도비 지원으로 기능보강,신축,리모델링 사업,장비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의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되는 것이다. 산청군만 하더라도 24개의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 지역의 정확한 현황,수요조사없이 50억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시군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구 분	계	보건소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 고
산청군	24	1	8	15	
함양군	22	1	10	11	
거창군	30	1	11	18	
합천군	28	1	16	11	

▲ 사업명 : 2011년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 사업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하동군	759,715	607,772	151,943	759,715	607,772	151,943				
산청군	303,274	242,618	60,656	303,274	242,618	60,656				
함양군	881,964	705,571	176,393	881,964	705,571	176,393				
거창군	976,427	781,141	195,286	976,427	781,141	195,286				
합천군	937,724	750,179	187,545	937,724	750,179	187,545				

▲ 사업명 : 2011년 국가결핵관리사업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산청군	13,975	9,351	4,624	13,975	9,351	4,624				
함양군	7,695	5,163	2,532	7,695	5,163	2,532				
거창군	14,180	8,262	5,918	14,180	8,262	5,918				
합천군	11,883	7,956	3,927	11,883	7,956	3,927				

▲ 사업명 : 201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하동군	50,894	33,929	16,965	50,894	33,929	16,965				
산청군	39,241	26,161	13,080	39,241	26,161	13,080				
함양군	66,347	44,231	22,116	66,347	44,231	22,116				
거창군	109,966	73,311	36,655	109,966	73,311	36,655				
합천군	60,726	40,484	20,242	60,726	40,484	20,242				

▲ 사업명 : 2011년 한센환자관리지원사업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산청군	4,558	2,279	2,279	4,558	2,279	2,279				
함양군	65,622	32,811	32,811	65,622	32,811	32,811				
거창군	68,672	34,336	34,336	68,672	34,336	34,336				
합천군	27,234	13,617	13,617	27,234	13,617	13,617				

▲ 사업명 :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 사업명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시군)

▲ 사업명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지원)

▲ 사업명 : 금연클리닉운영(지원)

▲ 사업명 : 암조기검진사업

▲ 사업명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사업명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사업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사업명 : 노인장애인구강관리

- ▲ 사업명 : 구강보건실설치운영사업
- ▲ 사업명 :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역사회건강조사)
- ▲ 사업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 사업명 : 치매관리사업
- ▲ 사업명 : 정신보건센터운영

○ 도지사 2013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 452억이다. 현재 시·군 순방을 통해 230억 지원을 약속했고 현재 13억 4천을 집행했다. 그렇다면 남은 222억 중 일부를 진주의료원 종사자들의 7개월동안 체불된 임금과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시책 추진보전금 지원현황

- 2013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총액 : 452억원
- 3. 4 현재 집행금액

시군	사업명	지원금액(백만원)
계	3개 사업	1,340
창원시	완월동 도시계획도록(소로1-180호선)개설	100
창녕군	남지탁구장 증축	240
창녕군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체육시설정비	1,000

- 시·군 순방 약속한 지원사업 내역 및 예산내역

시군명	사업명	지원계획(억원)	비고
총계	26건	209.5	
창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도시철도 건설 기본 설계 용역비 	10	지원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주민건의) 	4	
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구간 도로 확포장 	10	
통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	
사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3호선~신도시간 도로개설 사업 	10	
김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호체육시설 사업비 	10	
밀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노융합 연구센터 기반조성사업 	10	
거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 	10	
양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도장 조성사업비 	10	
의령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	
함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의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 	10	
창녕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산지구 광역상수도 확대보급 사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어면 세진 제2양배수장 배수기 교체(주민건의)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암면 야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주민건의) 	2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포한 주변도로(대로3-2) 확포장 	10	
남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천다랭이마을 굴곡도로 개량사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장지 조성사업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선천 교량설치 사업(주민건의) 	5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10	
산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청엑스포 행사장 주변정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서도시계획도로(중로2-1) 개설공사(엑스포부행사장) 	10	
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양 IC 입구 회전식 교차로 설치 사업 	10	

	▪ 농기계임대사업장 교육시설 설치(주민건의)	1.5	
거창군	▪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10	
합천군	▪ 정양로타리~합천나들목간 도로정비 사업	10	
	▪ 인곡마을 세천 정비사업	1.5	

⑧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지방의료원 먹튀 방지를 위해 폐업시 국고 환수

-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신축이전을 위해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고, 지난 5년간 2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음.

연도	지방의료원 전체 지원	진주의료원 지원	진주의료원 지원 내역
2008년	378억원	20억 5560만원	장비보강, 호스피스병동 건립, 공공의료수탁사업,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2009년	527억 2900만원	5억 3600만원	장비보강,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2010년	327억 1200만원	9510만원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2011년	438억 6200만원	0원	
2012년	404억 3500만원	7654만 9000원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2013년	406억 3550만원	4100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총계	2481억 7350만원	28억 424만 9000원	

-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장비보강 지원금과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호스피스병동 건립과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 등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2008년 신축이전 이후 5년 동안 3차례나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금을 제공했음. 2013년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으로 4100만원이 지원됐음.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것임.

⑨ 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법개정

- 이에 막대한 국고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폐업할 수 없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⑩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비 지원

- 그동안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주로 시설과 장비 보강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손실과 인건비 지원 등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꼭 필요함.

6. 현재 이 사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 먼저 홍준표지사는 휴업예고조치 철회, 폐업결정을 유보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고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140대 과제 중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경남도 이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기다려봐야된다.
- 3월 20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했고 4월 11일 국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2>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 대상기관 재산청 22일까지 필요(34곳의 의료원 중 진주의료원이 유일하게 제외)

-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각 사·도에 시달한 대상기관 선정 기준에 따르면 '경남도가 폐업을 결정해 진주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발표했다.

3> 폐업결정을 최소 2년이상 보류하고 도의 지원금을 늘리면서 경영정상화 노력의 결과를 지켜보아된다

- 2012년 10월 진주의료원 노사가 경영정상화를 합의해 개선안을 어렵게 도출해 냈고 실행 중에 있으므로 혁신도시가 들어서서 활성화되는 기간까지는 성과를 지켜보아야한다.
- 능력있는 원장을 뽑아 새로운 이사회와 진주의료원 발전위원회, 지역대책위 등을 꾸려 노사,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4> 도의회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채택

-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료를 강화에 공약과 법률개정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전국 34곳의 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어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경남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적극나서야한다.

5>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의정활동 필요

-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지금 진주의료원의 환자,직원, 지역사회는 진주의료원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 이제라도 의원들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것이다.

- 마산의료원도 이와 유사한 사태에 지역 의원들이 삭발하는 등 열심히 싸워 지켜냈고 2014년에는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새 신축병동을 건립예정에 있다.

6> 연대 활동이 중요하다

- 여태까지 크고 작은 싸움들의 승리는 길고 오래가는 것 그리고 연대의 힘이었다.
- 이 사태가 다른 열악한 공공병원의 희망의 열쇠가 되느냐 아니면 폐업,휴업이라는 전철을 밟느냐는 왜곡된 바르게 진실을 알려내고 많은 사람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지도자의 귀와 가슴에 들어가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층 더 같이 함께하는 연대가 필요한 것 같다.
- 비록 서울,경기도와 먼 최남단 창원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340만 경상남도 도민과 진주의료원 환자,종사를 대표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토론 2.

일선 경영자적 관점에서 본 지방의료원이 가진 현실적 문제

조 승 연 인천의료원 원장

일선 경영자적 관점에서의 지방의료원이 가진 현실적 문제

인천의료원 원장
조 승 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시도를 포함한 등 지방의료원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시도는 이러한 지방의료원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간 수면아래에 묻혀 소수의 의견공유차원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후진성 문제를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로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일선에서 지방의료원원의 경영을 맡고 있는 원장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원인으로 주장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익적 측면을 살펴보면, 작년 인천의료원은 매출액의 15%에 육박하는 증대를 보였다. 그러나 금년 결산결과를 보면 오히려 적자가 1.5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단순한 수치로 보아도 수익의 증대가 이익의 증대와 적자의 감소로 직결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손실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개별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공공병원의 수익구조로는 환자를 통한 매출 증대는 역설적으로 비용증가를 상쇄하지 못하여 손실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년 100억원이상의 매출증대로 공공성 훼손우려까지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재무제표를 보아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병원에서 적정진료를 추구하며 저소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비급여진료를 남발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의료수익의 증대가 순이익의 증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이 수익증대에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천의료원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격리병실은 소수의 환자만이 가끔 이용하며 상시 음압환경을 유지하느라 전기료 등 관리비가 해마다 5,000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지원되는 9,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관리운영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시설장비 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어 상당부분을 반납하고 있는 형편으로 오히려 격리병상이 운영적자를 가중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 장비는 오히려 이듬해부터 수익증대 이상의 감가상각비로 적용이 되어 오히려 적자폭을 확대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즉 단기간의 적자를 줄이려면 시설장비의 보관은 오히려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씩 분담하며 실제 중요한 적자보전의 핵심인 운영비 지원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능력의 격차와 공공의료료 보는 정책적 시각의 다양성은 지방의료원의 지역적인 격차를 가중시킨다. 공공의료는 한 국가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만드는 정책적 관점에서 다가 가야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임에도 다양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철학적 수준에 맞추어 기껏 4년짜리 단기적 계획에 머물러있으며 심지어 공공병원의 폐업까지 즉자적인 관점에서 결정 집행되어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문제이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평가기준에서 소위 잘나가는 의료원에 지원이 집중되어 어려운 의료원은 그나마의 시설장비지원도 적게 받는 역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가 안되는 의료원은 그나마 지원받은 지원금도 반납하여야 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근래 최근 최우수 지방의료원으로 선정된 몇몇 지방의료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그간의 평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실적에 가중치를 두고 이루어졌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보면

1.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지방의료원에 수익성을 잣대로 들이대는 평가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고, 당장의 실적보다 오히려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어려운 의료원을 더욱 지원하여야 하며,
2.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포함한 전환이 시급하며,
3.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운영비의 지원이 정부의 직접지원으로 확충되어야한다.

현재도 극심하게 진행중인 모 의료원 노사분쟁,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한 모의료원 조작의혹사건, 강원도 일부의료원의 매각시도, 다수 지방 공공병원의 법인화한 대학병원예의 위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금번과 같이 공공의료병원의 존폐를 결정할 사건은 지역 시민의 거버넌스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방정부의 관료적인 공공의료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시각에서 비롯되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 우려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세우기 위한 전 국민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도래했다는 생각이다.

토론 3.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환자단체의 입장

안 기 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환자단체의 입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 기 중

토론 4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란을 바라보며 “폐업 시도는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근거없는 막장 행정”

김 동 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을 바라보며

폐업 시도는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근거없는 막장 행정이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김 동 근

1. 본질을 피해가는 경상남도의 쟁점 흐리기

-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위기가 심각한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가 하는 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면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이고, 경영에 문제가 있으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면 되는 것.
- 기타 다른 쟁점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입원 환자 수익, 노동부 고발장 제출, 무급 토요일 근무 시행 여부, 전직원 연차수당 1/2 반납 여부, 감사 결과 등은 모두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지엽적인 쟁점에 불과함.
- 상기 쟁점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경상남도의 왜곡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박자료를 내는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사안들일 뿐 폐업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거가 되지 못함.
- 핵심적인 쟁점인 경영위기설의 근거로 경상남도는 “매년 40억~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음이 밝혀지고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음.
- 또다른 핵심 쟁점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문제 역시 제대로된 논의 없이 몇 가지 지엽적인 근거만을 들고 있으며, 대부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음.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경상대병원은 공공의료예산으로 자체 예산 2억 1,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진주의료원은

2,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 그러나 경상대병원도 의료수익의 규모가 진주의료원의 10배를 초과할 뿐 아니라(2011년 기준)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예산의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계층, 의료서비스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몇 가지 지엽적인 사안만을 활용하면서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는 점.

- 한편 경상남도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노동부 고발장 제출’, ‘도덕성 해이’, ‘감사결과 미이행’, ‘강성노조의 해방구’, ‘역대 도지사들이 폭탄 돌리기를 했고’ 등 자극적인 언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의 핵심 쟁점을 흐리는 한편, 폐업의 책임이 종사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쟁점은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가 심각한가’ 하는 점임. 이것이 해명되면 그 다음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진주의료원이 경상남도에 필요한가’ 하는 점을 논의해야 함. 경영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서 다른 지엽적인 쟁점을 끌어들이는 것은 논의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상남도가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 폐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폐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근거들을 무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2.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설의 근거는 다음 세 가지임. ①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존속이 힘들고, ②매년 40~60억 원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3~5년 안에 파산이 필연적이며, ③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을 할 수 없다는 것.

1) 300억 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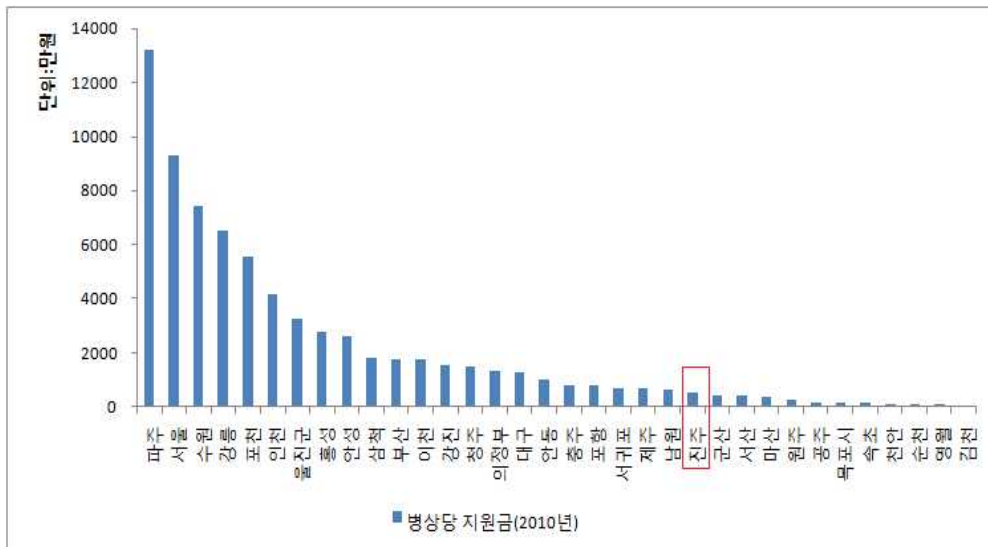
-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 원으로 2005년 84억 원이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닌 부채비율로, 부채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분석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63.9%, 순자산은 396억 원으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임.
- 또한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을 통해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함. 2005년에 비해 부채가 170억 원 증가했고 부채비율 역시 2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

원의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 증가가 안정성이 떨어졌음을 의미하지 **않음**. 현대자동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2) 대규모 손실로 인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¹⁾

- 매년 40~60억 원의 당기순손실²⁾ 규모는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3~5년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불러올 수 있는 규모가 아님.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2011년 결산자료³⁾를 기준으로 볼 때, 장부상 손실로 계산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항목인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을 빼면 진주의료원의 손실은 16억 원으로 줄어듦.
- 이처럼 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보완하여 분석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11년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평균하면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 9,000만 원에 불과하여, 40~60억 원의 장부상 손실과는 차이가 있음.

3) 뭇뭇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



- 2010년 진주의료원의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 원으로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 경상남

- 1) 진주의료원의 경영손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진주의료원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라는 점. 따라서 일반 기업과 같이 이익·손실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다만 여기서는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가설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밝히려 하므로 이 부분은 일단 언급하지 않음.
- 2) 진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증가한 것은 의료원 신축 이전이 본격화되는 2007년부터임. 병원 신축으로 인한 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이 상승했고, 4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유지비가 대폭 상승했으며, 병원 규모가 커지고 가동 병상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지만 시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 3) 2011년 결산자료가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임.

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 1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밀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투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게다가 홍준표 도지사는 3월 18일 서북부 의료낙후 지역에 연간 50억 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의 4배에 달하는 액수로, 더 이상 예산 투입이 불가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경상남도의 주장을 스스로 뒤짚는 것.

3.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

1) 폐업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폐업 이후 계획은 무엇인가

: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홍준표 도지사

-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도의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심지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폐업을 강행 추진.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설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폐업 이후 계획까지 패키지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임.
- 홍준표 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진주 지역에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더불어 경상남도 부채 규모의 축소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제2청사 건립에는 재정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두가지는 서로 모순적인 공약임.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로 제2청사를 이전하면 공약을 지켜 지역 민심을 얻는 동시에 이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⁴⁾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금 지원의 절감은 부수적 효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3월 6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을 통해 제2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제2청사를 애초 예정지인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곳에, 2년 안에 짓겠다고 밝혔다는 점. 2년 안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있다면 후보지가 어디인지 등을 생각해볼 때 진주의료원 폐업이 제2청사 이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부채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과정에

4) 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 부칙 제2호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서 발생한 것.

- 더 중요한 것은 왜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 이후의 계획을 명명백백 밝히지 않는는 것. 진주의료원의 실제 자산규모는 1,0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장부상 자산가에 토지가 격을 공시지가 수준으로만 재평가해도 800억 원을 초과함. 이후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이 정 도의 대형기관을 폐업할 수는 없음. 경상남도는 의료원 건물 매각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 정도의 건물을 갑자기 처분하기는 쉽지 않음. 지금 시점에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는게 아 니라면 폐업 이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해야 함.

2) 지방의료원 폐업 권한과 국비지원 문제

: 200억 원의 공공의료 자원 국비를 전용하려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에 534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경상남도는 22억 원의 부지 와 92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했고 200억 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음. 이러한 지원은 진 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려는 의미. 이전 5년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 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 확보 내역

구분	내역	금액
국비	교부세	200억 3,200만 원
도비	지방세	91억 6,600만 원
	토지 출자	22억 1,050만 원
자체확보	지역개발기금 차입	220억 원

- 홍준표 도지사의 뜻대로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상남도는 막대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정. 진 주의료원의 장부상 순자산인 396억 원이 경상남도로 귀속되는데, 진주의료원 부지 가격이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83억 원 상승했음.⁵⁾ 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경상남도는 114억 원을 보냈고, 경상남도의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면 579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5년 만에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것. 579억 원에는 국비 2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한다면 국가 재정 200억 원의 애초 사 용 목적을 어기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마땅히 환수되어야 함.
-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의를 받들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무리하게 폐업시키고 환자들을 쫓아내려 시도하는 것임.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은 명백히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돈놀이 행정이며, 쌍용자동차, 하이드스 등 기업을 인수하여 쥐어 짜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난 후 경영위기설을 퍼뜨리며 철수를 시도하는 외국인

5) 진주의료원 부지의 실제 시세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주변 부지의 현 시세가 평 당 150~300만 원에 이른다고 함. 게다가 건물 역시 시세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본의 먹튀행각과 닮아있음.

4. 그 외 경상남도의 주장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

- 경상남도는 '2012년 2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상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공공의료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문제없다고 주장.(3월 4일)
- 그러나 이는 법률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 2012년 개정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2010.10.27. 보건복지부)하는 것임.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지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 아님.

2)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도 재정을 심하게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경상남도는 현재 안고 있는 279억 원의 부채는 도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도의 건강한 재정 확립을 위하여 폐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3월 6일)
- 진주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 전체가 아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7억 원으로, 연 10~20억 원씩 2018년까지 상환하면 되는 정도임. 따라서 경상남도의 주장은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모두 경상남도의 부채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 더 큰 문제는 경상남도 재정 압박의 주요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에도 진주의료원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 "김해시가 내년부터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보전에만 350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 거가대교 민간업체에 보전해 준 돈만 469억 원에 이르며, 이들 민자 개발의 대가로 지자체가 20년간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주의료원 부채는 애깃거리도 못 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경남도가 1조 3천억 원이라는 부채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의 본질이 공공의료에 있는 것도 아니다."(3월 18일. 부산일보)

3) 의료나후 지역에 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하여

- 3월 18일 홍준표 도지사는 서북부 의료나후 지역에 연간 50억 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의 4배에 달하는 액수로, 더 이상 예산

투입이 불가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경상남도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

- 이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실제 지원금이 연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를 덮음으로써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책일 뿐 진정성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음. 폐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함.
- 또한 매년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생기는 공백을 막을 수 없음. 진주의료원이 2011년 의료사업으로 지출한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폐업하고 50억 원을 보건소 등에 지원한다고 해서 공공의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음. 정말 공공의료사업을 펼치려 한다면 진주의료원에 50억 원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임.

4) 감사결과 처분 및 개선지시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장하면서 지시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태의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선정적인 주장을 통해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임.
-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므로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것일 뿐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쟁점이므로 아무런 의미 없는 주장임.

5.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나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님.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진주의료원의 경우 2008년 이전 과정에서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되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이번 사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 문제임과 동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의료불평등 해소 관련 대선후보 공약(경실련)

질문항목	공약 내용		
	안철수후보	문재인후보	박근혜후보
지역 및 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지역 거점병원 인력과 시설 지원	-지역병상총량제 -의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거점 공공병원/생활권 별 응급의료센터 확충	-의료자원 균형배분 전달체계 확립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공의료인력 부족	-처우 개선	-의사 지역 할당제 -처우개선	-의료인력 별도 양성과 의무근무 제도화
대형병원 '빅5'의 환자 쏠림현상	-일차의료 정립 -지방대학병원 지원	-일차의료강화특별법 제정 -수가/병상수 조정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반대	-반대	-(정부 추진안) 찬성

-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설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원 운영 및 폐업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어서 부처에서 적극 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그러나 이는 법률 제정 당시 지방의료원의 폐업 시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법제도의 미비로 보아야 함.
- 의료기관의 개설과 휴업, 폐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음.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자의 휴업·폐업을 막고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있음.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2)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 의료원 이전 당시 보건복지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

제를 악화시킨 것.

- 초전개발구역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멀지 않은 거리에 혁신 도시가 건설(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 중으로 진주의료원의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음.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 경상남도는 2008년의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폐업의 근거로 들지만,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니라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진료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음.⁶⁾
-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3)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임.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함.
- 이미 이번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노, 사, 정,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진주의료원 경영 현황 및 폐업과 관련한 쟁점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참고.

6) 해당 보고서는 경상남도의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공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없으며, 의료원의 경영 악화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등 운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1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의 현실진단과 해법모색

정 백 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
문 정 주

토론 6.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김기남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김 기 남

토론 7.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윤 성 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윤 성 혜

참고자료

1.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보건의료노조 성명모음
2.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주요 언론보도 모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관련 보건의료노조 성명모음

[성명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규탄 성명서 (2013. 2. 26)

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 국정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이란 말인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

경상남도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명백한 공공의료 죽이기이며 일방적·강압적인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만에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해온 진주의료원을 전격 폐업 결정한 것은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공약은 한낱 폐기물에 불과하고, 국정과제는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국정 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이란 말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맨 먼저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대신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 죽이기에 나선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진주의료원은 ▲필수의료시설 운영(응급실 등)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무료진료, 가정간호사업)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유를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채와 적자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으로서 209억 6천만원에 이른다. 막대한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차입금이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주

요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는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채무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과 진주의료원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외곽 변두리로 신축이전한 데 따른 손실이 대부분이다. 2010년 한해동안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6억 5697만 4368원에 이른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며 '건강한 적자'이다. 2010년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곳을 제외한 29곳이 적자였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한 곳은 없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진주시민들과 서부경남 도민들이 진주의료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 포기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직무유기이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경영악화의 책임을 직원들과 환자,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복지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그리고 성남시립병원과 대전시립병원과 같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새롭게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을 폐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대화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다. 갑작스런 폐업 결정을 통보받은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에 떨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내몰리게 됐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 사, 정,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희망한다.

만약,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익성을 좇대로 공공병원 죽이기에 나선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3년 2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하루만에 공공의료를 포기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폐기됐다.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도 휴지조각이 됐다.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포기·축소하려는 박근혜정부의 본색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 죽이기의 선두에 섰다.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의료원과 직원들이 모르개, 도의회조차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경상남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미명아래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자신의 직무를 팽개친 채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하는 전횡을 휘둘렀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누가 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이다.

첫째,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죽이기이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이전한 새 건물에 325개의 병상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서 매년 20만명의 저소득층 환자, 3만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해왔다.

매년 30억원에 이르는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 장애인전문 치과와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특히 의사폐업, 사스,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의료재난시에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와 같이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둘째,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이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80억원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신축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로서 지역거점병원 현대화를 추진한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기록하고 있는 60억원대의 적자는 대부분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적자이다. 진료비 차액 30여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0여억원, 공공의료사업 수행 6억여원 등 공공의료 역할수행에 따른 지원이 뒤따를 경우 진주의료원의 경영난과 적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뒷전에 제쳐둔 채 오로지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셋째, 무책임한 폐업은 환자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이며,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6년간의 임금동결, 6개월간의 임금체불, 향후 3년간 30명 명예퇴직, 30명 인원감축과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무급토요근무 결정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다. 또한, 병동통합, 병상수 축소,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구매계약 개선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이 추진됐다.

이러한 노력을 외면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넷째, 미래전망이 밝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막대한 이익과 특혜를 자본에게 넘겨주기 위한 꼼수이다.

진주의료원은 현대화된 시설,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고, 의료원 주변에 4000세대의 주택단지 조성 및 1만세대의 혁신도시 조성으로 발전가능성과 미래가 탄탄하다. 그런데도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신축이전한지 5년밖에 안되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막대한 매각특혜와 이익을 안겨주려는 공공이수작일 뿐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주의료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34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을 수익성을 잣대로 난도질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미래를 틀어막으려는 공공의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결사항전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박근혜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
2. 보건복지부는 수익성 위주의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운영평가를 전면 폐기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지원대책을 수립하라!

3.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진주의료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4.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개정작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진주의료원 지원예산을 확충하라!
5.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상남도 항의투쟁, 시민 서명운동, 여론화투쟁, 청와대 상경투쟁,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등 전면투쟁을 전개한다.
6.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역시민사회단체, 정부(보건복지부, 경상남도), 경남도의회,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끝>

2013년 3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규탄 (2013. 3. 7)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위한 조례개정안 폐기하라!

홍준표 도지사 개인병원 아닌 경남도민 위한 공공병원 정상화해야
불통행정, 독재행정, 반의료적 행위 중단하고 합리적 대화에 나서라!

○ 경남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해당기관과 도의회, 보건복지부조차 모르게 일방적·강압적으로 폐업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원, 환자, 시민, 진주시의원, 경남도의원, 노동계, 의료계, 시민사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월 7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이후 “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폐업할 수 없다”는 진주의료원 정관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조례개정안에 나선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공공의료를 살리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화를 요구해왔고, 합리적 대안마련을 촉구해왔다.

○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포기한다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주변에 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3km 거리에 1만3천세대의 혁신도시가 들어서 진주의료원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신축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대화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아무런 설득력과 명분을 갖지 못하는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례를 개정하면 서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며, 막대한 개발차익에 대한 특혜 의혹만 키울 뿐이다.

○ 도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진주의료원을 경영위기로 몰아온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회피한 채 그 피해를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모습은 파렴치한 작태이며, 도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하는 작태이다. 권력은 남용하고 직무는 유기하는 독재행정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지금까지 6년간의 임금동결과 7개월간의 임금체불, 연차수당 반납, 30명 명예퇴직, 토요일 무급근무 결정 등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다해온 300여명의 직원들이 당장 길거리로 나왔게 생겼고, 200여명의 환자들이 쫓겨나게 생겼다. 진주의료원을 이용해온 연 20만명의 경남도민들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됐다. 이런데도 경

상남도는 환자퇴원을 종용하고, 의사 사직, 약품지급 중단 등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반의료적·반인륜적 조치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서민도정, 복지도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난 받아 마땅한 반사회적 작태이다.

○ 3월 6일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조차도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우선”이며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금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업처분해도 되는 개인병원이 아니라 정부와 경상남도가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공병원이다. 폐업 철회와 정상화가 해답이다.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끄러운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끝)

2013년 3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관련 성명서 (2013. 3. 11)

보건복지부장관 첫 임무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해결

대선공약 이행과 보건의료현안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정식 면담을 통해

각종 현안문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길

○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박근혜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국가 실현과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건강권 향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시험대이자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과제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해결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진행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첫 강제 폐업 사례로서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103년 동안 공공의료를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지 5년 만에 경상남도가 전격적으로 폐업 결정한 것은 공공의료 포기의 신호탄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해결은 공공의료 축소·포기로 가느냐 아니면 공공의료 육성·활성화로 가느냐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행될 경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34개 지방의료원 폐업의 도미노현상을 부를 것이고, 5.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마저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은 파산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2005년 법 제정 이후 역대정권이 추진해온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이관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되새겨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하여 의료원과 직원, 진주시민과 경남도민, 도의회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와도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신축이전 비용으로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했고, 2008년 신축이전 이후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8억원의 국비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경상남도도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운영진단 결과에서도 ‘폐업’ 진단이 아니라 ‘경영개선책’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도 경영개선이 아닌 폐업결정을 내렸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 최초의 업무,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이어 [지방의료원 육성, 공공의료 활성화] 라는 대선 공약마저 후퇴하게 된다면,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발언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데 대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과 실세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이와 함께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간 치열한 돈벌이 경쟁과 빅 5병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접근성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병상 총량제 도입 등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과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공공의료기관들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역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지원방안 수립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모델을 기본으로 한 보호자없는 병원의 올바른 제도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간호 인력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과 간호 인력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간호 서비스 질 저하 방지책 마련, 관련 직종단체, 노조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 과정을 통해 최근 상충중심 밀실논의, 졸속 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돈 걱정없이 아프면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6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확대 ▲전체 1,700개 병원 중 200개도 안되는 병원만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현실과 인력대책 부재 및 제도적 미비로 일회성 반짝 평가와 중복평가에 머물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산적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지혜롭고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정책의 중심은 현장에 있고, 현장과 소통할 때 올바른 해결책과 발전의 길이 열린다. 각 직능단체들과 공급자-소비자-보험자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소통과 조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며,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임기를 시작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전 장관처럼 일부 특정 직능단체 편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폭넓고 균형감있게 소통하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의료산업 6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전국단위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정식 면담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이 자리에서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을 중심에 두고 각종 현안문제 해법을 같이 찾아나가길 희망한다. (끝)

2013년 3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진주의료원 제외 규탄 성명서 (2013. 3. 14)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진주의료원만 제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지 말고 정상화대책을 마련하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결정으로 연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진주의료원만 제외하기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3월 12일 각 시도에 시달(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1480)한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폐업을 결정하여 진주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 그동안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라고 관련업체에 압박을 주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하였고,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내과외과의 재계약을 파기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환자들의 치료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경상남도의 이같은 작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도 같은 배를 타려는가?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경상남도의 행태를 묵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줄 셈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란 말인가? 거기다가 경상남도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환자진료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강제폐업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짹짹하러 하는가?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스스로 한말을 헌신짝 뒤집듯 뒤집는단 말인가? 지금처럼 공공의료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기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의 지휘감독을 맡은 복지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만 할 것인가?

○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지 못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공의료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공공병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이후 5년간 3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현대화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하였다. 신축이전한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탕진이며,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우리는 누구든 무슨 이유로든 공공병원을 축소·후퇴시키려는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그에 동조하는 세력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지 말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관할하는 주무부서답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라! 그리고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 진주의료원을 당연히 포함시켜라!

○ 진영 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과 실세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13년 3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진주의료원 휴업은 안된다 (2013. 3. 15)

강제적인 휴업조치는 환자인권 유린이다

경상남도는 환자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어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환자들이 남아 있고 환자진료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이어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환자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생명권을 짓밟고, 환자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조치이다.

○ 아직 진주의료원에는 127명의 입원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고, 매일 120여명의 외래환자들이 진주의료원을 찾고 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여생을 갈무리하고 있는 4명의 호스피스병동 환자가 있고, 마무리 재활치료 단계를 밟고 있는 재활의학과 환자들,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장기입원환자들이 있다. 휴업조치로 이들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반의료적 행위이며,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인권유린행위이다.

○ 지금 경상남도는 일방적으로 폐업결정을 통보해놓고서는 법적으로 폐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자퇴원을 종용하고 약품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 노동조합은 ▲경남도청 공무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간호사에게 취업알선을 유도한 사례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병원에서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자기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전화를 걸거나 보호자 주소지로 환자를 유인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사례 ▲경남도청 직원이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 ▲의료보호환자에게 더 이상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퇴원을 종용한 사례 ▲경남도청 공무원이 입원환자에게 전화하여 곧 약품공급이 중단된다고 전원을 종용하였고, 환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직을 강요한 사례 ▲경남도청이 약품회사에 전화하여 약품공급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례 등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 불법적인 환자유인·알선행위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강제휴업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를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보건소, 보건복지부에 알리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국회 진상조사 촉구 등 환자생명권과 환자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해 200억원의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었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5년간 3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는데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폐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먹튀행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갈팡질팡하는 경상남도의 행보도 절망적인 행정력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①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결정해놓고서는 ②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와중에 ③또다시 환자들을 내쫓기 위한 강제휴업을 실시하겠다는 오락가락 행정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행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 환자는 군사작전의 대상이 아니다. 경상남도는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환자 강제퇴원과 강제휴업조치를 중단하라!

2013년 3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박근혜정부가 나서야 한다 (2013. 3. 17)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박근혜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 폐업은 '국민행복시대' '100% 국민대통합'에 역행
홍준표 경남도지사 비호하지 말고 합리적 해결대책 마련해야

○ 박근혜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공병원 폐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폐업을 발표한 점에서, 부채와 적자는 부풀리고 자산가치나 발전가능성은 축소하여 폐업을 억지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사회적 정당성을 잃은 채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면서 인권침해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 이러한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시대' '100% 국민대통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정권 출범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 역사상 공공병원 강제폐업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벌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확대의 길로 가느냐, 공공의료 축소·포기의 길로 가느냐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지방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분명하게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

-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지방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박근혜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40대 국정과제

48번 과제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 (공공의료)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 구축

※ (기초) 농어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

(지역)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권역)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권역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5.9%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대정권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현대화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료원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신축이전을 위해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고, 지난 5년간 2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다.

연도	지방의료원 전체 지원	진주의료원 지원	진주의료원 지원 내역
2008년	378억원	20억 5560만원	장비보강, 호스피스병동 건립, 공공의료수탁사업,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2009년	527억 2900만원	5억 3600만원	장비보강,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2010년	327억 1200만원	9510만원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2011년	438억 6200만원	0원	
2012년	404억 3500만원	7654만 9000원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2013년	406억 3550만원	4100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총계	2481억 7350만원	28억 424만 9000원	

○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장비보강 지원금과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호스피스병동 건립과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 등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2008년 신축이전 이후 5년 동안 3차례나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금을 제공했다. 2013년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으로 4100만원이 지원됐다.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먹튀행위이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은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정도로 자산가치가 늘어났고, 주변지역에 1만7천세대의 주택단지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폐업시키려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박근혜정부는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호하는 것인가? 국가 지원 아래 육성·발전이 추진되고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지방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과 목적으로 함부로 폐업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병원 폐업과 관련하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업절차를 강행하기 위해 131명의 입원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진주의료원 강제휴업을 예고해놓고 있다. 환자폐업이 강행될 경우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공병원 폐업사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행복시대’ ‘100%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있는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진주의료원 강제휴업 예고 규탄 성명서 (2013. 3. 18)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 강제휴업 규탄한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130여명의 입원환자를 강제로 내쫓겠다?

단 1명의 환자가 남을 때까지 의료인의 사명을 다할 것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 폭로하고 홍준표 도지사 그림자투쟁 전개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이어 3월 18일 강제휴업을 발표했다.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하고, 강제휴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해당 진주의료원은 물론 경남도의회와도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폐업을 기습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병원을 폐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최고급 현대시설과 장비를 갖추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연 20만명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느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마당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로지 “폐업만이 목적”인양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자와 직원들을 내쫓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다시 공공병원 정상화를 바라는 경남도민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묵살하는 불통행정, 먹통행정, 독재행정이다.

○ 뿐만 아니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제휴업조치는 또다시 오락가락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난 후에 부랴부랴 3월 7일 폐업절차를 만들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다룰 도의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조례개정안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휴업조치에 나섰다. 이것은 4월 9일 도의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환자와 직원들을 내쫓아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을 얻어 조례개정안을 강행통과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일 뿐이다.

○ 더구나 지금 진주의료원에는 131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임종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하루하루를 보내는 환자들도 있고, 단계적으로 받아오던 치료가 중단되면 병세가 악화돼 소중한 재활의 꿈을 잃게 되는 재활환자들도 있고, 수익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의료보호환자, 장기환자들도 있다. 병원비가 저렴한데다 시설과 환경, 의료서비스가 좋아 폐업 발표 이후에도 하루 120여명의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은 이들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며, 강제휴업조치가 실제로 진행되어 치료가 중단될 경우 생명권을 위협받게 되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3월 18일 오전 직접 창원까지 가서 경남도

청 기자실에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중단사태가 예상되는데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자들을 내쫓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경남도민을 위해 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도지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남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촉구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강제휴업조치를 중단하라!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바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경상남도, 경남도의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대책위원회 산하에 경영진단팀 구성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아울러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를 부풀리고 자산가치와 발전가능성을 축소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경남도청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비용으로 200억원을 투입하였고, 2008년 이후 장비보강 지원금과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호스피스병동 건립기금,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28억원을 지원하였다.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먹튀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공병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공공병원 폐업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결정과 강제휴업조치에 따라 환자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진주의료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업결정의 타당성 여부와 환자 및 직원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라! 아울러, 5.9%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 건강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폐쇄하지 못하도록 지방의료원 폐업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폐업시 신축이전에 투입한 비용과 시설 및 장비 보강에 투입된 국고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진주의료원 강제휴업조치에 뒤따를 환자 강제퇴원, 의사 강제 사직, 약품과 의료재료 공급 중단, 환자식 공급 중단 등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를 사회공론화할 것이며, 환자생명권 침해행위와 진료중단으로 인한 의료사고 유발행위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단 한명의 환자가 남을지라도 끝까지 의료인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최선의 진료를 다할 것이다.

○ 아울러, 우리는 진주, 사천, 산청, 함양 등 서부경남지역주민들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대도민 선전활동을 본격화하고, 경남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남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홍준표 도지사의 모든 도정일정을 따라다니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림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진주의료원 강제휴업조치와 강제폐업조치는 103년 동안 공공의료 역할을 다해온 진주의료원을 역사의 유물로 만드는 <진주의료원의 끝>이 아니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공적 발전을 이룩하는 <활기찬 진주의료원의 시작>이 될 것이며,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은 환자 강제퇴원과 조례개정에서 끝나지 않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을 철회할 때까지, 폐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심판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끝)

2013년 3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성노조 발언 규탄 성명 (2013. 3. 18)

강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한다고?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무책임 경영의 해방구”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노조혐오증’을 버리고 악의적 매도를 중단하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월 18일 실장, 국장, 원장 등이 참가한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부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축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데 맞서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강성노조로 싸잡아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강성노조 때문에 공공병원을 폐업해야 한다는 말인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목적이 강성노조를 때려잡기 위해서라는 말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명분없는 공공병원 폐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애꿎게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강성노조로 매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책임회피용, 공공병원 폐업의 명분쌓기용 희생물이란 말인가?

○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라”는 주장은 여론호도용이다. 200억원의 국비와 91억원의 도비를 포함하여 5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이전한 멀찍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후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상남도가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한다면, 진주의료원은 부채와 적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으며, 서부경남지역 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변두리 외곽지역에 신축이전한 후 5년간 방치해놓은 채 고작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해온 경상남도가 50억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책임은 회피용이자 들끓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여론무마용일 뿐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료원 운영과정의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감사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하라” “부당하게 지급된 엄청난 액수가 아직 환수되지 않았으니 속히 환수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내몰기 위한 악의적인 발언이다.

○ 노동조합이 경상남도가 2009년과 2011년 두차례 진주의료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경상남도의 진실호도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 전체가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부실경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이나 보수 초과지급은 주로 의사들이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사들을 유치하고,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영진측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대다수 일반직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원장이었으며, 수의계약이나 정원관리 부적정 등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책임도 주로 원장과 경영진들에게 있었음이 드러났다.

○ 또한, 일반 직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 승진임용 등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부정·비리와 무관한 것임이 밝혀졌다.

○ 이렇게 볼 때 진주의료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실경영과 부당행위의 책임은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있고, 원장선임과 공무원 파견,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맡은 경상남도가 짊어져야 할 몫이지, 진주의료원 임직원 전체를 부도덕하고 부정·비리집단인 것처럼 호도하여 폐업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부당하다.

<2009년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공공보건의 기타보수 초과지급	4억 5068만원	의사	- 불리한 근무조건, 종합병원 증설에 필요한 진료과 개설로 사기진작, 적극적 진료 유도 위해 지급
하위공문서 작성으로 특수의료장비 활성화수당 부당지급	1227만 3000원	의사	-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1억 8072만원	의사	- 응급실 근무의사의 열악한 환경(환자폭행 등)으로 응급실 근무 기피 해결, 타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당직비 개선
요양 및 의료급여심사청구 업무 소홀	6억 1439만원	원무과	- 내용 : 항생제 처방일수 초과, 급여기준 초과 처방, 급여 기준 초과 입원, 지급보류, 심사불능 등 - 조건 : 인력부족, 청구담당자 인사이동
진료비 미수납지에 대한 징수 소홀	6965만 1000원	경영진	- 전화독려 및 납부독려서만 발부함 - 미수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중복
정원관리 부적정	1억 7800만원	경영진	- 간호사 4명 미충원으로 수익창출 못함

	1억 4300만원	경영진	- 노인요양병원 5등급 상향하지 못함
사무직 정원관리 부적정	3억 6000만원	경영진	- 진주의료원 증설로 계약직 채용 - 인건비 과다 지출, 인력부족 때문
수의계약 체결, 예산낭비	1억원	경영진	-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 - 담당자 업무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
원장 접대경비 개인용으로 사용	2857만원	원장	- 신축이전을 앞두고 홍보, 수익증대를 위한 활동
의사 기본연봉 책정 부적정		원장	- 원장의 결정에 따라 책정

<2011년도 종합감사>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지인에 대한 진료비 부당 감면	3억 2063만원	직원	- 병원의 진료수입을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감면 - 직원들의 지인 진료비 감면은 1799만 1000원임.
공무차량 운행 및 관리 소홀	291만 3000원	원장	- 강구현 원장 : 용도미상으로 12회 사용 - 김양수 원장 : 1년3개월간 299회 공무차량으로 출퇴근
공중보건 의사 보수지급 부적정, 진료수당 초과 지급	8062만 1120원	의사	- 휴일근무와 의료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독려 - 진료과장 집단사퇴로 병원존립의 기로에서 공중보건에게 적극적인 병원업무 권유
기본연장 책정 및 진료수당 지급 부적정	9286만 3760원	의사	- 7명의 의사 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지급 - 의료의 질 담보, 경영성과 지향을 위해 진료수당을 높여 의료수입증대를 목표로 함.
의사 당직비 부당 지급	2880만원	의사	- 의사 집단퇴직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
응급실 당직 의료인 응급진료 및 당직 부당운영	6367만 5000원	의사	- 의사 수급이 여의치 않아 부족한 의료진 운영 - 타 의료기관의 의사 대체근무
접대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600만원	원장	- 26건을 개인용으로 사용 - 주로 병원장이 병원사업 관련 지출
요양 의료급여 심사청구 관련 업무 소홀	2억 3524만원	경영진	- 항생제 과다 사용 억제, 3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퇴원 등 개선 노력
징계처분과 보수 지급 부적정	486만 2780원	경영진	- 정직 처분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 정직처분시 급여지급 범위 속지해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을 책정 부적정	1161만 5900원	의사 경영진	- 보수규정 제정 필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부적정	8153만 7000원	경영진 직원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협약을 관행적으로 운영해옴. - 직원은 45명, 나머지는 주로 기관
여비집행 부적정	20만 8000원	원장	- 실제 출장가지 않고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직원간담회 관련 비용	480만원	원장	- 직원 간담회 경비는 복리후생비에 편성하지 못하는데 편성 - 직원의 사기진작, 원활한 업무수행, 경영 수익증대
법인 카드관리 및 사용 부적정	22만 6000원	원장	- 법인카드를 주유소, 호프집 등 개인용으로 3회 사용함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06년~2008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노조협오증’을 거두고 이성을 되찾아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공병원 육성·발전방안과 경남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간부회의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혁신과 개혁을 당당하게 밀고가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혁신과 개혁은 멸절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것도 아니고,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책임을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며, 진주의료원에는 12억원조차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서부경남지역에 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꿈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필요한 혁신과 개혁은 경남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철회하고 경남도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며,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수요예측 실패와 유능한 원장 및 의료진 수급 실패의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 3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엉터리 숫자놀음 규탄 성명 (2013. 3. 19)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엉터리 숫자놀음을 중단하라!

꿈수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

○ 경상남도가 3월 30일까지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한 3월 18일 저녁 홍준표 도지사가 기자들과 만나 “진주의료원을 폐업해도 단 한명의 환자까지 책임지겠다”며 “병원을 옮겨서 비용이 추가 발생하면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지금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들은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병동의 환자들, 단계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가 중단되면 병세가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 재활환자들,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장기환자들, 민간병원보다 시설과 환경이 월등하게 좋은 진주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이다. 현대화된 공공병원에서 저렴하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입원환자 120여명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단 한명의 환자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꾀변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힘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에 3년~5년 사이에 자본금 331억 1700만원을 잠식하고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아무런 신빙성이 없다. 진주의료원 자산규모가 최소 1,000억원이 넘는 데도 610억 380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잡고,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30억원마저 손실로 계산하고, 연간 40억~60억원이던 적자가 앞으로는 연간 96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적자 규모를 대폭 부풀려 잡는 꿈수를 부린 것일 뿐이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1,000억원의 자산가치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감가상각비 30억원을 제외하고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3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남은 700억원의 자본금을 잠식하는 데는 23년이 걸린다. 이만큼 진주의료원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와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자산가치가 더 늘어나게 되고 경영정상화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과 명분을 찾기 위해 경영위기를 부풀리는 속임수 숫자놀음을 중단해야 한다.

○ 1조 3488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6조원이 넘는 경상남도의 예산에서 고작 12억원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 지원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 534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안되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몰고가는 것도 명분이 없다. 6조원의 막대한 예산규모로 운영되는 경상남도가 연간 12억원의 재정지원이 부담스럽다는 말인가? 경상남도가 예산

절감해야 할 곳은 공공의료 포기가 아니다.

○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후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 혈세 524억원을 들여 325병상의 현대식 건물을 짓고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것은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인데,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엄청난 혈세 낭비이다. 더군다나 연간 12억원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 지원예산조차 포기하면서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경상남도가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한다면, 진주의료원은 부채와 적자의 그늘을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무료진료활동, 응급의료기능 강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원과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서부경남지역 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3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관련 주요 언론보도 모음

[오마이뉴스]

'103년 역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밀실행정" 비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첫 결정... 노동계·야권 철회 촉구

13.02.27 17:11최종 업데이트 13.02.27 17:11

윤성호(cjnews)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다. 진주의료원 직원은 물론 경남도의원들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되었다고 반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진주지역 의료서비스가 과잉으로 공급되고, 진주의료원은 매년 40~60억원, 지난해에는 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점차 적자 재정규모가 커져 현재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며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직원, 경남도청 항의방문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역협의회(의장 강수동)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안외택)·진주의료원지부(지부장 박석용)는 27일 오전 경남도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버스를 타고 왔으며,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한홍 행정부지사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청 경비원과 경찰이 이들을 막으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외택 본부장은 "우리는 오로지 환자를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다. 경영이 어렵다고 우리를 내모느냐. 참으로 서글프다"며 "경남도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며, 밀실행정으로 폐쇄를 결정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선거 때 '서민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김정숙 경남도의원(민주통합당)은 "경남도 행정이 언제부터 불통이 됐나. 의원들조차 폐업 방침을 몰랐다. 의회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담당부서 직

원들이 '국장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은 "사람 다 죽여놓고 무슨 절차냐. 직원과 가족들이 모두 길거리로 나왔게 되었다"며 항의했다.

강수동 의장은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경남도청 항의방문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을 '진주의료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 6명의 공무원을 진주의료원에 보냈다. 이에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폐업 결정 철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 국정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이란 말인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명백한 공공의료 죽이기이며 일방적·강압적인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유를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채와 적자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2100만 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으로서 209억6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차입금이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는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진주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채무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진주시 중앙동에서 초전동으로 이전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적자는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과 진주의료원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외곽 변두리로 신축이전한 데 따른 손실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6억5697만4368원에 이른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이며 '건강한 적자'이다"며 "2010년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곳을 제외한 29곳이 적자였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진주시민들과 서부경남 도민들이 진주의료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홍준표 지사의 독단행정 극에 달해"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연대회의, 무소속)는 27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독단행정으로 도민 무시하는 도지사는 다시 서울로 가시라"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독단 행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중대한 결정의 과정에 도민도, 의회도 해당기관도 배제된 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일방적 폐업결정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바라왔던 우리 의원들은 경남도의 갑작스런 이런 결정에 매우 당혹할 수밖에 없다"며 "2008년 이후 임금동결 이후 현재 7개월 동안 임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고통분담을 위해 직원들은 연차반납, 구조 조정 합의, 대화 요구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접근성, 도청과전공무원·원장의 무능으로 보지 않고 노조와 진주의료원의 직원 문제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 포기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직무유기"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경영악화의 책임을 직원들과 환자,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와 경남도, 해당기관의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공론화 등의 형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103년 역사 자랑했는데... 전국 지방의료원 중 첫 폐업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폐업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경상남도 자혜의원'으로 시작했으며, 1925년 '경상남도 진주병원', 1983년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바뀌어왔다.

296병상인 진주의료원은 필수의료시설 운영(응급실 등)과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무료진료, 가정간호사업)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내과전문의 정원 4명 중 3명이 지난 연말부터 올해 1월 사이 사퇴했고, 남은 1명도 '월급을 경남도에서 지불보증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폐업 배경으로 '누적 부채 급증'과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77.6%로 정상적인 경영 시스템 탈피', '진주지역 특성상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지역으로 경영 부실 지속', '경영 정상화 뒷전' 등을 꼽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뒤 서설 매각을 검토하고, 휴업 뒤 구조조정과 특성화병원 개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프레이시안]

홍준표, 도지사 되자마자 서민 뒤통수 때리기?

[서리풀 논평]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기사입력 2013-03-04 오전 7:44:34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든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 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국 극히 중요한 관서로서 도리어 내용 없는 명칭만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랴? (...) 의학이란 것은 국가의 큰 사업으로 된다. 이제 그에 대한 법제를 해명하여 명실이 서로 부합되도록 할 것이며 그 피폐현상을 일체 방임해서는 안 된다." (<경세유표 1>(여강출판사 펴냄))

그 때의 전의감이나 혜민서는 아니나 지금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며칠 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곧 폐업한다고 발표했다. 몇 가지 맥락만 바꾸면 <경세유표>에 적힌 내용 그대로다.

진주의료원을 닫겠다는 공식적인 이유는 부채 때문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279억 원이고,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본다고 한다. 부채와 적자의 내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결국 경제와 효율을 이유로 삼는 것은 틀림없다. 15년째 계속되는 그 익숙한(!) '구조 개혁'이란 이름으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 의료 기관을 어쩌겠다는 소리는 하도 자주 들은 이야기라 놀랍지도 않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새 임기가 시작되면 기다렸다는 듯 공공 병원 '개혁'을 꺼내든다. 아니나 다를까, 경상남도도 홍준표 새 도지사가 취임하기 무섭게 내놓은 (예상되었던) 카드다.

다른 곳의 사정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기회만 있으면 사·도립 의료원을 없애자는 지방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적자를 줄이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곳이 그나마 좀 나은 데라니.

공공 병원을 동네 슈퍼나 통닭집으로 보면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감당할 도리가 없다. 다른 슈퍼나 통닭집, 음식점이 있을 테니 주민들도 그러려니 여기기 쉽다. 어디 진주의료원만 그럴까. 지금 공공 병원의 적자를 타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동네 슈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나마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한다는 소리에 잠깐 멈칫거릴 뿐이다.

이런 눈으로는 공공 병원의 존폐는 재정과 경영이라는 기술적 근거에 좌우된다. 그러나 천만

에, 공공 병원은 벌써부터 100퍼센트 정치의 영역이었다. 비효율과 재정 적자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권력의 불평등.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상남도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좋겠다. 이 불 만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역시(!) 효율성을 높인다고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 그러나 2010년 완공된 후의 실상은 효율도 공익도 모두 거리가 멀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민간 업체에 보전해 준 돈이 작년에만 469억 원이란다. 이대로 가면, 물가 상승까지 쳐서 앞으로 20년간 6조 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놀랍게도 경상남도 안에 비슷한 다리가 또 있다. 마창대교 역시 매년 100억 원가량 적자를 도 정부가 메워준다.

이 정도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야말로 '애교' 수준이다. 도 살림이 어렵다면서도 다리에 쏟아붓는 혈세는 상상을 넘는다. 그런데도 짐짓 도 정부의 반격은 공공 병원을 향한다. 의료원을 없애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눈물겨운 신과 정치. 공공이 공공을 공격하는 '자해' 행위, 좋게 봐야 희생양이다.

정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선거에서의 표만을 뜻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과 의지, 도덕과 선의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뜻의 정치다.

물론 제도 정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도지사와 도 의회가 의료원의 목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한 개인으로 볼 수는 없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들은 사회 관계와 그들의 이익을 차별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한다.

의료원을 없애서 줄일 수 있는 재정 적자는 미미하다. 그런데도 구조 개혁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는 불평등의 정치가 작동한다. 의료원은 기존 권력이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나아가 폐쇄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의료원과 같은 공공 병원에 미치는 권력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존폐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뻔하다. 지키자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서 변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과소' 대표된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지금은 의료원을 없애도 광역자치단체의 장(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다시 뽑히는 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 병원은 늘 정치적 소모품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공공 의료의 비중은 민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곳곳에 민간 병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시설이나 장비, 꾸밈새는 점점 더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민들의 호감이나 평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한마디로, 많은 주민들은 공공 병원이 없어져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론과 대중 정치의 측면에서도 공공 병원의 기반은 그만큼 취약하다. 극단적으로 고급과 대형, 기술을 숭상하는 의료 구조는 이미 사람들의 생각까지 차지했다.

공공 병원의 위축은 진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비수도권의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경제가 힘들수록 공공 병원은 구조 조정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거듭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와 구조가 그런 만큼 당장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 병원이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한국 의료의 과제이다. 또 반복할 필요 없이, 공공 의료의 가치와 중요성은 분명하다.

길게 봐서 공공 의료의 제자리를 찾으려면 정치의 변화가 보태져야 한다. 공공 의료의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대표될 때에만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대표성의 핵심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공공 병원의 기능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바뀌고 또 커져야 한다. 좀 더 많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할 때 정치적 구속력은 커진다. 아울러, 어떤 이름으로든 여론과 대중 정치 역시 공공 의료를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불평등의 정치는 끊임없이 공공 병원을 '악용'하려고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왜, 어떻게, 악용하려 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전근대성과 신자유주의의 기묘한 조합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기존 권력의 횡포에 대항하는 첫 걸음이다.

[오마이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목소리 높아

진영 장관후보 "검토해보겠다"... 진주시의회,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13.03.06 21:29최종 업데이트 13.03.06 21:31

윤성호(cjnews)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거론되었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있는 것이 취약계층에 더 낫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 다수인 진주시의회는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고, 진주지역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영 장관 내정자 "진주의료원 관련 검토해 보겠다"

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거론되었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중원)의 질문을 받은 진영 장관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후보자는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길이 있고, 진주의료원도 있는 것이 취약계층에 더 낫

다고 생각한다, 그런 길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폐업의 부당성을 강조하자 진 장관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상 초유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를 출범초기부터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나타내며 "인수위 시절부터 부위원장으로서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2010년에 당기 손익을 48억 냈고, 지역개발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50억원이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렴한 진료비를 받아 생긴 손해가 39억 3751만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손익은 11억여 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진주시의회(의장 유계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뒤, 이날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도 매년 20여만 명의 도민이 진주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의료비 절감과 함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부경남의 대표적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데 대해 진주시민의 대표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도가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수혜주민, 종사자, 경상남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진주시민이나 서부경남 도민은 물론 경상남도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의회는 "경상남도가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 취지에 걸맞게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하루빨리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기 위해 도의회에 사전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지역주민의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또 진주시의회는 "진주의료원 노조는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중앙]

김미희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집중 질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진 후보자 "공공성이 먼저"

2013년 03월 06일 (수) 21:56:13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성남 중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경남이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공공병원의 운영 기준이 공공성이나, 수익성이나?"

김 의원은 진영 후보자의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 160~161쪽의 귀절 (지방정부에는 별도로 공립병원을 설치하여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을 따오며, 첫 질문으로 공공병원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공공성인지, 수익성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당연히 공공성" 이라고 즉각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월 26일 공공병원 103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진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유는 아직 잘 알지 못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후보자에게 상기시켰다.

이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쇄를 결정했다"고 현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를 출범초기부터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 후보자에게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부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 의료, 복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해 34개 전체 지방의료원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진주의료원 부채 현황과 그 이유를 수치로 들어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지자체 지원 부족과 지방의료원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이 적자났다는 사실을 짚었다.

또 최근 신축한 서울시립병원의 경우,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1600억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

해 병원이 부채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경우 서울시립병원과는 달리 이 금액(장비구입비 등 270억원)을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이 270억원을 경남도가 부담하면 진주의료원 부채는 9억2100만원에 불과한 상황.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2010년에 당기 손익 48억4600만 원을 냈고,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를 2억5492만원 상환했다.

이 금액 역시 진주의료원이 서민을 위해 짚 진료비를 받아 생긴 입원환자 1인 1일 평균진료비 연간차액 30억원과 △진료환자 1인 1일 평균진료비 차액인 9억3751만원 △공공성을 위해 사용한 필수의료시설 운영비 2억7694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비 2억8971만원을 합친 약 45억 원을 정부가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손익은 5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경영진과 직원들이 충분한 발전계획과 자구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폐업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현재 진주의료원 주변에는 4000세대 아파트단지가 조성 중이다. 또 3km 거리에 1만3000세대(4만명) 아파트가 입주하고, 11개 공공기관(3200명 근무) 이전 예정인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병원을 외각으로 이전하면서 줄어든 이용 환자수가 늘어날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직원들 또한 명예퇴직, 임금동결, 인원축소 및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축소, 무급토요근무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 수익사업 제고 등 병원이 경영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진 후보자는 김미희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미희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 다시금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진영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운영진단서 등을 제출받을 권한이 있고 임원 해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장관이 변화 의지만 있다면 지자체장과 병원장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에 대해 실행 의지가 있다면 즉각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 것이 맞다"고 진 후보자에게 조언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지자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지방의료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진 후보자에게 장관으로 임명되면 진주의료원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청년의사]

[기자수첩] 진주의료원 폐업, 시민에게 물어야

기사입력시간 : 2013-03-06 12:39:41

최종편집시간 : 2013-03-06 12:39:41

곽성순 기자

지난달 27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취재를 위해 진주를 찾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취재하며 새삼 놀랐던 점은 의료원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관심이었다.

경상남도는 앞선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유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들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진주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타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적자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경상남도는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진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의료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택시의 기사는 “지난 2008년 의료원이 이전하기 전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왜 이전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진주 시내인 중앙동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과 같이 부채가 몇백억 수준으로 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름 의료원 부채 이유를 분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론 의료원이 타 민간의료기관보다 덜 친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채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결정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경상남도는 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결정사항을 ‘통보’했을 뿐이다. 그들의 통보에는 경상남도가 결정한 의료원 이전에 따른 부채 증가와 의료원 직원들이 7개월 가까이 임금이 체불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03년 동안 의료원을 키운 것은 진주시민들이며, 의료원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도 진주시민들이다.

경상남도는 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의료원을 이용하는 진주시민들의 목소리는 들었어야 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이 시민들의 ‘혈세’를 좀먹고 있다면,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면 결정은 경상남도가 아니라 직접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진주시민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맞다.

[노컷뉴스]

진주의료원 노조 식발...도청 앞 노숙투쟁 시작

2013-03-12 13:34 | 경남CBS 김효영 기자

진주의료원 노조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항의하며 삭발식과 함께 도청앞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박석용 지부장과 서순경 조합원, 사측에서 윤만수 관리과장이 폐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노조는 이날부터 도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과 노조, 경상남도, 도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연합뉴스 | 입력 2013.03.12 13:49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원 일부는 이날 회견이 끝난 뒤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공공의료 사수 방침을 밝히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 < 지방기사 참고 > > 2013.3.12

[오마이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눈물의 삭발식'

12일 경남도청 앞, 노숙 농성 돌입... 폐업철회 촉구 목소리 계속

13.03.12 13:57 | 최종 업데이트 13.03.13 13:52 |

윤성호(cjnews)

눈물의 삭발식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면담이 거부되자 진주의료원 노사 대표들은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는데, 조합원들이 눈물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 윤만수 진주의료원 관리과장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지부장, 서수경 조합원이 삭발했다. 삭발식을 연 뒤 박 지부장은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지금부터 투쟁"이라고 말했다.

윤 관리과장은 "경남도에서 하루 빨리 폐업 결정을 철회한다면 직원 모두는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며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조합원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삭발식 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 농성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청원)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조합원들이 들고 있었던 피켓이 부셔지기도 하고, 몇몇은 넘어지거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 "폐업 아니라 정상화가 해답"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해답이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는 행위이고, 경남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남도의 직무유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조건 강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는 없고, 왜곡선전과 여론호도, 경찰무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폐업 강행이 있을 뿐"이라며 "경남도의회를 경남도의 시녀로 만드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는 엄청난 자산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데다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최신식 진주의료원을 갑자기 폐업하고자 하는 정치적 흑막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왜곡보도행위와 여론호보 행위를 중단할 것", "경남도는 환자들을 내쫓기 위한 반인륜적·반의료적 작태와 도의회를 거수기로 내몰고 도의원들을 공공의료 포기의 공범으로 만들려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공공병원으로 만들고,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과 노동조합, 경남도, 경남도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를 결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7개 지방의료원지부를 대상으로 '전 조합원 리본 달기' '지원방문 투쟁' '보건복지부·청와대 상경투쟁' 등을 결의했다.

석영철 의원 "홍준표 지사, 폐업할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가자들은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약식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석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투쟁을 힘있게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의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인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은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하루 전날인 11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가졌던 면담 내용을 전했다.

석 의원은 "폐업의 부당성을 이야기 했는데, 홍 지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화를 제안했는데 하겠다고 했으며, 휴업 등 절차를 밟아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의사 18명이 진료하고 있으며, 환자는 150여 명이 입원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목소리 계속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만간 경남지역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위가 별도로 구성된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도민 65% 이상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된 결정' 뜻 겹쳐서 받아들여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일방적 통보 이후 경남도의 독단적 불통행정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남도는 당장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남도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폐업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 정상화와 공공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경남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상남도과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합원은 경남도가 입법예고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희망하며, 이 조례의 입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며 "경남도가 도민의 의견과 역행해서 '거꾸로 가는' 경남도의 의료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며, 경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뉴스1]

진주시민대책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께 사과하라"

(경남 진주=뉴스1) 김동수 기자

입력 2013.03.12 14:59:50 | 최종수정 2013.03.12 14:59:50

(경남 진주=뉴스1) 김동수 기자=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2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의 폐업 조치 이후 반인륜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정행위로 수백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퇴원 종용을 하고,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상 약품 공급 중단을 강요, 진료 재료 납품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곡·과대 포장된 경영부실 문제를 빌미로 거점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2월 26일 전격적인 폐업 결정을 내렸다"며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린 경제 논리대로라면 거가대교, 마창대교, 경남개발공사도 폐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독단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인륜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일보]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광화문에 간 까닭은

시민사회·노동계 "공공의료 충실히 수행 '건강한 적자'... 철회해야"

김미희 의원 "경남도민 65.4%가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된 결정' 생각"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 반대 집회가 서울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시민사회와 노동계로 이뤄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그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해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만큼 싸고 질 좋은 공공의료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건강한 적자'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보편복지 확대가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은 의료민영화를 신호탄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일한 진보정당 국회의원인 김미희 의원도 이날 광화문 광장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지방의료원 활성화 공약을 하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바로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들었다"면서 "청천벽력같은 일이었고, 우리가 가까스로 지켜온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경남도민 여론조사까지 벌였던 김 의원은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비율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더 낮아질 것이며, 우리는 최소한의 공공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남도민의 65.4%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잘못된 결정'으로 생각하는 만큼,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들의 뜻대로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은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 규모도 크고, 좋은 시설도 갖춘 곳이어서 장애인, 저소득층, 인근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는 서민들에게 진주의료원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1년에 20만명의 경남도민이 진주의료원을 찾는데, 이 진주의료원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보다 훨씬 열악한 강원도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많은 병원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민간위탁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325개 병상을 갖춘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저소득층 노인 무료 수술, 홀몸노인 무료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했으나 경남도는 적자를 이유로 최근 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정종민 기자·일부 연합뉴스

[경남매일]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전국 확산

28개 시민사회단체 ‘시민대책위’ 구성

시민사회·노동계 서울서 철회 촉구

2013년 03월 12일 (화) 이대근 기자 dkllee@kndaily.com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에 따른 반발이 지역민은 물론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노총 진주지역본부와 경남문화예술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등 28개 단체는 12일 ‘의료공

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지사는 경제논리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도민,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며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정 출범 70일 만에 단순 경제논리로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렸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거가대교, 마창대교, 경남개발공사 등을 먼저 폐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홍준표 도지사는 독단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인륜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로 이뤄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도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그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해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만큼 싸고 질 좋은 공공의료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건강한 적자’”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보편복지 확대가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은 의료민영화를 신호탄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25개 병상을 갖춘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 무료 수술, 홀몸노인 무료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했으나 경남도는 적자를 이유로 최근 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이대근 기자 dklee@kndaily.com

[창원일보]

"폐업 결정 철회하라"... 진주의료원 노조 식발 투쟁

전국보건의료노조·진보당 경남도당 "홍준표 불통행정"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2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을 가진 뒤 식발식을 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은 곧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남도는 하루빨리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진주의료원 노사, 경남도, 도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 소속 3명은 이날 함께 식발식을 했으며,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조건 강행하고 있다.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는 없고, 왜곡선전과 여론호도, 경찰무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폐업강행이 있을 뿐이다"면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먼저 결정해놓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은 경남도의회를 경남도의 시녀로 만드는 반민주적 작태이며, 경남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를 식물의회, 허수아비의회로 만드는 폭거이다"고 비난했다.

노조원들은 회견이 끝난 후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 65%이상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뜻을 겹쳐히 받들이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일방적 통보 이후 경남도의 독단적 불통행정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진주의료원 직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규탄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도의회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위한 수순을 신속하게 밟으며, 사실상 아픈 환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도민 위에 군림하려하지 말고, 도민의 뜻부터 겹쳐히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면서 "경남도는 당장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김광수 기자

[경남도민일보]

"진주의료원, 제2청사 건립 희생양 삼았다"

사회진보연대 "도 폐쇄 결정 근거인 연 40억~60억 손실액 잘못된 해석"

데스크승인 2013.03.13

이승환 기자 | hwan@idomin.com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근거로 내세우는 '경영 위기설'이 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근거가 되는 연 손실액 40억~60억 원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근 연구원은 진주의료원이 2007년부터 해마다 40억~60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경남도 주장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에서 손실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결산자료가 공개된 2005~2011년 진주의료원 경영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회계장부에 손실로 기록하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증가분'은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손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항목을 뺀 2011년 진주의료원 현금손실을 16억 원으로 계산했다. 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손실 차이를 보완·분석하고자 작성하는 현금흐름표를 보면 2005~2011년 진주의료원 평균 현금 손실은 9억 9000만 원 정도다.

보고서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근거로 내세우는 부채 300억 원도 '착시'를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부채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액만 명시해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경영분석에서 안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부채액이 아니라 부채비율"이라며 "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부채는 253억 원(2012년 279억 원)이지만 부채 비율은 63.9%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산규모도 늘었으므로 진주의료원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더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예산 규모가 6위인 경남도가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 원(2010년)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23번째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경남도 지원 규모가 지나치기는커녕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과장된 '경영 위기설'을 근거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홍준표 지사 공약인 '제2청사 건립'이라고 주장했다. 부채 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을 동시에 이루려고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나온 대로 진주의료원 건물을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경남도가 고민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다. 이는 지난 6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확인됐다.

문화복지위원인 김경숙(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제2청사 건립을 진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소관은 아니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동근 연구원은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 지원 △경남도·의료원·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경남도민일보]

진주의료원 노조 집회..."무슨 죄 있다고 내쫓냐"

진주의료원 노조 도청 앞 농성...지역·서울서도 폐업 반대 성명

데스크승인 2013.03.13

이시우 김종현 기자 | hbjunsa@idomin.com

12일 오전 11시 35분 도청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보던 40대 후반 한 여성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했다. 그녀의 한마디에 다른 이들도 애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러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데, 무슨 죄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의료원 폐업 저지 투쟁을 하면서 도청 앞 잔디밭에 천막을 쳤다. 진주의료원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결정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는 행위고, 경남도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폐업이 해결책이 아니라 정상화만이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기한 천막 노숙 농성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오전 11시 30분 이들은 삭발식을 했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서수경 조합원(수간호사), 의료원 직원 대표인 윤만수 관리과장 등 3명의 머리카락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다. 서수경 씨는 삭발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곳저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더니 한 조합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서럽게 울었다. 그 모습에 삭발 하던 3명과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들은 삭발식 직후 도청 정문 옆 오른쪽 잔디밭에 천막을 쳤다. 순간 천막을 건어내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조합원들 간 20분가량 다소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행히 다친 이들은 없었고, 천막은 나중에 설치하기로 하고 양측은 한 걸음씩 물러섰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최신식 진주의료원의 갑작스러운 폐업 이유와 홍 지사의 정치적 흑막 공개 △폐업을 둘러싼 각종 왜곡보도 유도 행위와 여론 호도행위 중단 △환자를 내쫓기 위한 반인륜적·반의료적 행위와 도의원을 공공의료 포기 공범으로 만들려는 조례개정 작업 중단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찾기를 위해 폐업 결정 철회와 함께 진주의료원 직원, 노조, 경남도, 경남도의회, 전문가 등 5자가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발전위원회' 구성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지역과 서울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도내 특수고용노동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 경남지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등 노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폐업'에 반대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에 간병노동자 25명이 일하는데 반도병원에서 이들 중

20명만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더욱이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진주의료원 노인 요양병원 간병노동자 36명 모두 하소연할 곳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간병노동자는 우리와 같은 처지의 특수고용노동자이고, 의료원 폐업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날 오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쇄 저지를 시작으로 새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도 폐업 반대 성명을 냈다.

[한겨레신문]

“진주의료원 폐업만은...” 삭발농성

경남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12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윤만수 관리과장, 박석용 지부장, 서 수경 수간호사(왼쪽부터) 등 3명은 진주의료원 노사를 대표해 삭발을 했다.

보건의료노조, 도청 앞 노숙 돌입 경남도민 3명중 2명 “폐업 안돼”

경남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도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직원 가운데 비번과 휴가자는 이날부터 폐업 결정 철회 때까지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노숙을 하며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박석용 지부장, 윤만수 관리과장, 서수경 수간호사 등 3명은 진주의료원 노사를 대표해 삭발을 했다.

진주의료원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진주의료원을 진주 외곽 변두리로 신축이전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빚을 해결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진주의료원과 직원들에게 떠넘겨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경남도의 행태를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지 못한 경남도의 책임회피이며, 환자들의 생명권과 직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주의료원·노조·경남도·경남도의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최권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말살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진정한 의료복지는 공공의료가 튼튼히 뿌리를 내렸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쪽을 대표해 삭발한 윤만수 관리과장은 “폐업 결정만 철회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견디며 병원 정상화를 위해 투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 제발 진주의료원 폐업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경기 성남중원)이 지난 9일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잘한 일’이라는 답은 22.7%에 그쳤다. 경남도가 결정 과정에 지역민이나 진주의료원과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7%가 ‘독단적 결정’이라고 답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의약뉴스]

"진주의료원 살려주세요~" 청원 릴레이

5000명 지지선언...가난한 도민 구세주 같던 병원

발행 2013.03.13 07:17:03

폐업 계획이 발표된 진주의료원을 살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지난 6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12일 현재 목표 인원 1만명인 이 청원의 발의자 수는 약 5500여 명이다.

청원 게시글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예상돼 있었다”며 “아픈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시글에서는 “7개월치 임금 체불에도 직원들은 진주의료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폐업이란 결정을 내린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질타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달 말 300억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

도는 “이같은 추세로 갈 경우 도민들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하거나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가는걸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폐업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직원들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 등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폐업 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2월 폐업이 발표된 후 환자 수가 급속도로 줄었으나 여전히 환

자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원은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정상운영하고 있다”며 “의료원 폐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기만이자 도지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한 네티즌은 “적자가 얼마인데 문을 여나”라며 “적자가 심하면 당연히 문 닫아야하는 게 진리”라고 의견을 밝혔다.

진주의료원에 종종 다녀왔다는 누리꾼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름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 편이었다”라며 “치료비가 저렴해 환자 입장에선 구세주와 같았다”라며 폐업 반대를 외쳤다.

최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4%는 폐업을 결정한 경상남도가 지역주민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민 천 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 조사에서 ‘폐업 결정은 잘한 일’이라는 답은 22.7%였다.

한편 직원들과 민주노총 노조의 철회촉구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폐업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삭발 시위가 있었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매일노동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역시 배경에는 부동산이?

한지원 | jwhan77@gmail.com

승인 2013.03.13

지난달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폐업이 이야기될 정도는 아니었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은 4년 전 534억원을 들여 대규모 신축이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도대체 경상남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한국 공공의료의 골간 중 하나인 지역 거점병원의 설립·폐업이 깔았다 부수고 다시 까는 보도블록 공사도 아닐진대 경상남도는 왜 이런 결정을 시민사회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레 발표하게 된 것일까.

필자가 여러 공공기관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데뽀로 앞뒤 안 가리고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이권관계다.

많은 경우 공공기관 사업은 너무 굵떠서 문제다. 그런데 공공의 이해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이권 관계가 분명하게 걸려 있을 때 사업은 무리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한 예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이 그랬다. 2006년 6월 고령과 금산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급작스레 의회를 열어 지방상수도 위탁 안전을 처리했다. 지방상수도 위탁을 할 경우 군에서 관리하던 취수원이 폐지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돼 인근 땅값이 치솟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지방상수도 투자를 위한 민자사업, 군 재정 부담 감소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원 적자로 인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권관계가 이번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진주시에 도 2청사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진주에 2청사를 가시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쉽게 눈에 들어온 것이 진주의료원을 2청사로 활용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도지사에게 2014년 지자체 선거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절박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도지사의 정치적 이권 문제만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지는 못한다. 다양한 이권 관계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주변 부동산 투기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사가 들어설 경우 유입인구로 인해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다. 이미 현지 부동산업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야기되자마자 주변 토지매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나 유지들이 이런 사업에 빠질 리 없을 것이다. 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이 참여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자체나 정치인들은 억지 추측이라고 항변한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이 나고 있고,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어차피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폐업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경상남도의 설명만큼 경영위기가 심각한 건 아니다. 2008년 이후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규모 시설 이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효과다.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투자에 대한 비용처리를 사후에 하고 있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은 시설투자 비용을 매출과 수익 상승으로 감당한다. 반면에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치료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저가로 공급한다. 때문에 민간기업 경영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설투자 이후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상남도의 재정 위기설도 크게 과장됐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부풀린다. 그런데 실제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액수는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수준이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활동비를 조금만 줄여도 감당할 수 있다. 매년 경상남도가 수백억원을 손해 보고 있는 민자사업 계약을 조금만 개정해도 가능한 액수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위기를 부풀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감추는 전형적인 지자체의 꼼수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남인뉴스]

"홍구라 독재행정,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2013년 03월 13일 (수) 10:16:13 이윤기 bynaeil@naver.com

지난 10일 홍준표 구단주(경남지사)가 K리그 개막 홈 경기를 관전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사상 첫 '만원관중'이 들어선 창원축구센터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반대'를 외치고 있다.

[메디파나]

"진주의료원 지키겠다"...노조지부장·관리과장 '삭발'

박석용 지부장, 서수경 조합원, 윤만수 관리과장 삭발 감행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2013-03-13 11:31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원 노조지부장과 관리과장이 삭발을 감행하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주의료원 박석용 지부장, 윤만수 관리과장, 서수경 조합원 등 3명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촉구'를 외치며 삭발을 감행했다.

이들은 삭발을 통해서 "경남도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막아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같은날 오전에는 진주의료원 직원 및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지부 소속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로비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거리 선전전 및 폐업 방침 철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 국민청원란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청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지난 2월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지난 7일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에서 제외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2013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오마이뉴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홍준표 지사, 공개토론' 제안

50여개 야당·시민사회단체 '경남대책위' 결성... 14일 경남도의회, 대규모 집회

13.03.13 12:03 | 최종 업데이트 13.03.13 12:03 |

윤성호(cjnews)

경남도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속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홍준표 지사한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남대책위는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대책위에는 민주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진보정의당 경남도당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 창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했던 경남도가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엊그제 홍준표 지사를 만났는데, 폐업 철회는 없고 휴업 뒤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4월 9일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인데, 심각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도와 전국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 불통행정에 대응해 폐업 철회를 이루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업 결정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연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수혜 대상자에서 알 수 있듯 진주 의료원은 의료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도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이라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의료원의 적자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과 도시 외곽 변두리로 신축 이전(2008년)에 따른 손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남도는 다른 지역처럼 병원 신축 이전에 대한 지원을 제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담을 병원 측에 고스란히 전가했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해당 기관이나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의가 없는 불통행정, 독단행정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일자리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수백 명에 이르는 병원 종사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실업자로 만들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는 마땅히 재고해야 할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대책위는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업 철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 연대해나갈 것"이라며 "서명운동, 집회 등 제반 활동을 전개해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원오 전농 부경연맹 부의장과 강병기(통합진보당)·박선희(진보정의당)·허윤영(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석영철·강성훈 경남도의원, 조유묵 마창진참여연대 사무처장, 감병만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 박해정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진주지역 30여 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독단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민대책위는 "홍준표 지사는 반인륜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남대책위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공공의료사수 2차 집중투쟁"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청년의사]

진주의료원 '한방'에 정리하는 방법은 폐업뿐?

경상남도, 적자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내부 문건에 폐업 장점으로 '현존 조직 문제점 일시 정리' 명시

기사입력시간 : 2013-03-06 12:37:45

최종편집시간 : 2013-03-06 12:37:45

곽성순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찾은 진주의료원 로비에서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있을 전 직원 대상 간담회를 준비하는 인원 몇몇이 간식을 먹고 있었다.

의료원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아직 외래진료시간이 남았지만 1층 접수처에는 직원이 없었으며, 경상남도의 의료원 폐업 결정 소식을 접한 입원환자들 몇몇이 로비 주변을 서성일 뿐이었다.

1층에 위치한 내과 외래에는 간호사들 몇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내과의사는 없었다. 4명이었던 내과의사는 지난 연말과 올 초 이미 3명이 퇴사한 상태였으며, 1명이 남은 상태였지만 남은 한 명도 결국 만나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내과의사는 지난 2일 퇴사했다.

2층에 위치한 총무과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별다른 업무를 보는 것 같지 않았으며, 5시 30분에 진행될 간담회에 참석 준비를 할 뿐이었다.

취재를 위해 의료원 곳곳을 둘러보고 환자와 접촉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직원은 없었다. 직원들 모두 갑작스런 폐업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서 작성한 '진주의료원 처리대책 보고'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처리 방안'으로 ▲폐업과 ▲휴업 후 경영진단 구조조정을, '정상화

방안으로는 ▲특성화 병원 ▲민간 위탁 ▲국립 난치병센터 등을 제시했지만 보고서 마지막에 언급된 '검토 가능 방안'에는 첫 번째로 ▲폐업 후 시설 매각 검토, 두 번째로 ▲휴업 후 구조 조정, 특성화병원 개원만을 명시했다.

경영 부실에 따른 처리 방안 중 폐업에 따른 장점으로는 ▲현존 조직의 문제점 일시 정리 가능을, 단점으로는 ▲공공기관 폐업에 따른 지역적 상실감 ▲폐업에 따른 노조 반발 ▲폐업 후 시설 처리 문제 등을 꼽았다.

휴업 후 경영진단 구조조정의 장점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휴업이 불가피하나 경영진단을 거쳐 구조조정 등 진행) 단점으로는 ▲현존 조직의 문제점 일시 정리 불가 ▲휴업 시 월급 지급(70%, 월 5억 이상) 등을 꼽았다.

보고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현존 조직의 문제점을 일시에 처리 가능하고 휴업 시 지급해야 하는 월 5억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아무도 몰랐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소수의 도청 관계자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 결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폐업 결정 후 진주의료원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본원에 208명, 노인요양병원(의료원 8층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에 29명 등 총 237명의 정규직원이 있다. 이들 중 자신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폐업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진주의료원을 담당해 오던 도청 공무원들조차 폐업 결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기획실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도청 관계자들을 잘 알고 지내는데, 폐업 결정 기자회견 보고 바로 (친분이 있는 도청 관계자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들도 진짜 몰랐고 기자회견 보고 알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 도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경숙 도의원은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도 망연자실

현재 진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도 갑자기 들린 의료원 폐업 소식에 망연자실해하며 폐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상남도의 폐업 결정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입원했다는 50대 남성환자는 현재 내과의사 부재로 내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병원만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환자는 "우리는 적자고 이익이고 그런 것 모른다. 아프면 치료만 받으면 된다. 이런 병원이 없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어르신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있는 병실에서도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 중인데, 폐업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며 할머니가 울고 있다”고 전했다.

알레르기질환으로 입원한 50대 남성환자 또한 의료원 폐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환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기관이고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부채를 이유로 폐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원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없는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폐업하면 안 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형태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퇴직 포함 자구책에도 ‘폐업’ 결정

진주의료원에서 만난 직원들은 갑작스레 폐업 결정을 접해서인지 분노보다는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경상남도에서 우리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지난 2008년부터 자구책이나 경영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진주 의료원 노조에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폐업 결정 후 진주의료원 측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시 권해영 원장과 노조는 ‘노·사 별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담긴 경영개선종합대책은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임금인상 및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축소지급 ▲토요일 근무 시행 ▲급성기 병원 병상 수 조정 ▲주차장 유료화 등이 담겼다.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7일 2013년도 명예퇴직에 16명이 신청해 13명의 명예퇴직이 결정됐으며, 이들은 지난 2일자로 이미 퇴직했다. 계획상 오는 2013년 말 11명이 명예퇴직 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의료원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당기고 인원을 늘린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은 이미 양보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임금이 동결된 상태며, 그마저도 약 7개월 정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의사들은 3개월 미지급 중).

이처럼 직원들은 이미 경영상태 악화와 관련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오히려 도에서 이를 자구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드러나지 않은 내부 갈등, 김양수 원장 때부터 ‘빠져’

기획관리실에서 수년간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진주의료원을 거쳐간 김양수, 강구현, 권해영 원장 시절 사례를 통해 의료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11대 김양수 원장 시절에는 2009년 당시 진주의료원의 영향력 있는 의사 4명이 한꺼번에 퇴직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어려운 의료원 사정으로 인한 임금 체불 상황에서

의사 4명이 진주시내 한 의료기관으로 한 번에 이직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직한 의료기관 원장이 당시 의료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임금 체불 등 의사들이 이직할 이유가 있긴 했지만 하필이면 이직한 곳이 이사회 이사의 의료기관이어서 한동안 의료원 내 회자됐다고 하며, 그 후 의료원의 의사 채용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2010년 3월 김 원장에 이어 취임한 강구현 원장은 현대건설 출신으로 의료계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인사였다. 표면상으론 경영전문가가 원장으로 취임해 의료원 부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의료진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결국 강 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1년 10월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강 원장의 뒤를 이어 2011년 12월 취임한 권해영 원장 또한 경상남도 의사회장 출신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의료원 개혁에 나섰지만 역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권 원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며 지난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진주의료원 원장 부재의 빌미를 제공했다. 권 원장의 문제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해 9월에는 직원은 물론 의사까지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홀로 매월 4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며 노조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 달랐다”며 “의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책임지지 말라고 해놓고 의사 채용이 안 되면 ‘왜 의사를 뽑지 않느냐고 따지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원에 남아있는 어느 의사도 권 원장이 내과의사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내과의사들의 경우 진주시내에도 좋은 병원이 많아 이직을 알아보는 데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권 원장이) 처음 간부들에게 경상남도 의사회장을 오래해서 의사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의사들이 나가니까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실 책임, 왜 직원들에게만 지우나

원장과 진료부장 등 주요 보직이 모두 공석인 진주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만수 관리과장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꼽은 적자의 상당부분은 도에서 결정한 의료원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라고 강조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지난 2008년, 1923년부터 자리했던 진주시 중앙동 4번지에서 현재 위치인 진주시 월아산로 2026번지로 이전했다.

윤 과장은 “2008년 이전을 앞두고 2007년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했고 2008년에도 2월에 이전했지만 5월 개원식까지 3개월 가량 공백이 있었다”며 “이 영향으로 2007년 49억 적자, 2008년 59억 8,200만원 적자 등 2년만에 110억 가량 적자가 늘어났다. 이전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현재 경상남도의원 등과 접촉하며 진주의료원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경상남도에서 폐업과 관련한 완충작용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폐업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원 폐업, 남은 쟁점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지만 진주의료원 정관에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상남도 측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도청 내 진주의료원 관련 태스크포스에 소속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새로운 조례 마련 등 도의회와 합의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주의료원의 경영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도의회 관계자들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경상남도 측 행태에 불만을 표하며 도의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도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 도민들의 복지시설 폐업을 시민들과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기습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홍준표 도정의 불통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화복지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 지역을 연고로 한 도의원들도 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오늘(6일) 문화복지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문화복지위 소속 위원 9명 중 홍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6명으로 월등히 많고, 도의원 전체를 봐도 53명 중 4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은 향후 진주의료원 폐지를 놓고 도의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상케 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를 잘 설득해 폐지와 관련한 조례를 마련해 밀어붙여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의료원에 남아있는 입원환자의 처리 문제다. 2월 27일 현재 진주의료원 본원에 96명, 노인요양병원에 93명 등 총 18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지방의료원 구조조정 신호탄 될 수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의료계 내 공공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진주의료원 사태를 접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에 나섰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결정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말했던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공약 모두 휴지조각 신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와 높은 인건비 비율을 꼽은 것도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방의료원 폐업에 나설 경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12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낸 기관은 ▲김천의료원(10억 4800만원) ▲충주의료원(6억 3800만원) ▲포항의료원(3억 1600만원) ▲서산의료원(2억 1900만원) ▲청주의료원(1억 4900만원) ▲울진의료원(1억 2900만원) ▲제주의료원(1억 2700만원) 등 단 7곳뿐이었으며, 나머지 27개 의료원은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진주의료원 77.6%)을 살펴봐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원은 별로 없다.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70% 대인 곳은 ▲인천(77.2%) ▲수원(72.1%) ▲의정부(74.8%) ▲이천(71.1%) ▲파주(74.5%) ▲원주(74.0%) ▲삼척(72.6%) ▲천안(74.2%) ▲서귀포의료원(73.9%) 등 9곳에 달했으며, ▲서울(82.8%) ▲속초(86.0%) ▲영월(82.3%) ▲강진(80.2%) ▲울진군의료원(83.3%) 등 5곳은 80%, ▲강릉의료원(95.1%)은 90%를 웃돌았다. 심지어 ▲제주의료원의 경우 101.6%로 인건비 비율이 의료수익을 넘어서기도 했다.

만약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성공, 타 지자체가 비슷한 이유로 관내 지방의료원 폐업을 결정해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 성공, 민간과 공공기관 보조 필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의료원 연쇄 폐업이라는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단순히 적자 폭이 크고 자구책이 지자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소유 중심이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으로 불리면서도 상당수 공공의료 역할을 했던 민간의료기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공공의료기관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공의료의 발전은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보조를 맞춰야 가능한 일이다. 공공의료의 한 축이

도미노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재검토돼야 한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 또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지방의료원 한 곳이 폐업하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년의사]

[커버스토리] 103년 진주의료원 역사, 막 내리나

기사입력시간 : 2013-03-06 12:38:00

최종편집시간 : 2013-03-06 12:38:00

곽성순 기자

지난달 26일 경상남도가 도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발표했다.

경상남도가 의료원 폐업 사유로 밝힌 것은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279억2,100만원에 달하는 부채다.

실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서 작성한 ‘진주의료원 처리대책 보고’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향후 월 9억5,000만원(연 1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3년 내 남아있는 자산(331억1,700만원)을 잠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상남도가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달 27일 찾은 진주의료원은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였다. 이날 오후 4시경 도착한 진주의료원은 아직 외래진료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외래환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입원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진주의료원 측은 지난 2008년 의료원 이전 등 경상남도의 결정으로 늘어난 부채를 의료원이 떠안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원에 따르면 2012년도 결산 기준으로 의료원의 총 자산은 610억3,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79억2,100만원, 남은 자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331억1,700만원이다. 부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상매입(28억5,100만원), 미지급금(41억1,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48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93억7,000만원), 기타(67억3,000만원) 등이다.

이 중 외상 매입금은 ▲약품비 24억1,100만원 ▲진료재료비 4억4,000만원이며, 미지급금은 ▲인건비 29억3,700만원 ▲관리운영비 11억7,300만원, 기타는 ▲시중은행차입금 58억2,600만원 ▲연차수당미지급금 4억6,900만원 ▲기타 4억3,500만원 등이다.

의료원 측은 “총 부채 279억원 중 개발기금 및 시중은행차입금 152억원과 직원 체불인건비 및 연차수당미지급금 등을 제외하면 기타 약품비 등 미지급금은 45억 정도”라며 “결론적으로 부채 중 상당수는 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채 중 상당수가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미 2008년부터 동결된 임금과 7개월 간 체불임금(의사의 경우 3개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 측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도에서 폐업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원 직원들은 11대 김양수 원장(2007~2010년) 때부터 의료원 내에서 벌어졌던 이상 징후를 설명하며 의료원 부실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경상남도 결정에 따라 지난 2008년 이전 후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모두 의료원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입원 중 의료원 폐업 소식을 접한 환자들도 망연자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현재 의료원 본원에는 96명, 노인요양병원에는 93명 등 총 18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본원에 208명, 노인요양병원에 29명 등 총 23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폐업이 결정될 경우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경상남도의 폐업 결정 후 병원에 남아있는 10명의 의사들(정형외과2, 신경과2, 비뇨기과1, 일반외과1, 재활의학과1, 영상의학과1, 해부병리학과1, 마취과1)은 아직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접한 도의회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도가 의회에조차 보고하지 않고 폐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경숙 도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진주 출신 도의원 등 폐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도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 부실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도의회에서 폐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1910년 개원 이래 103년 동안 진주시의 공공의료를 담당해 왔다.

[프레이시안]

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오락가락 행보

공공보건 프로그램에서 진주의료원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3-03-15 오후 12:18:45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 대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보건 의료노조는 보도 자료를 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각 시도에 지방의료원 공공

보건 프로그램 수행 대상 기관 선정 공문을 보내면서 '경상남도가 폐업을 결정해 진주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고 반발했다. 지자체의 공공병원 폐업 결정을 복지부가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은 중증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자가 질환 관리를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복지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12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경상남도의 행태를 묵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줄 셈이냐"고 맹비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영 위기'를 근거로 지난 7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라고 관련 업체를 압박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며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했고, 그나마 한 명 남았던 내과 의사의 재계약을 파기해 주민의 원성을 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진주의료원을 관할하는 경상남도에 해당 공문을 뒤늦게 발송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15일 오전 공문을 다시 보내 선정 대상에 진주의료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폐업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지 말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관할하는 주무 부서답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연합뉴스]

<르포> "진주의료원 문 닫으면 죽을 수밖에..."

폐업 결정된 진주의료원

환자 대부분 저소득층...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을 곳 없어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면 더는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17일 윤정부(71·진주시 지수면) 씨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으로 자신이 처한 처지를 이렇게 한탄했다.

윤 씨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지난 1월 10일 진주의료원 51병동에 입원했다.

지난 30여 년간 같은 질환으로 진주의료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수 십 차례 반복해 왔다.

적게는 열흘부터 많게는 3개월씩 입원하기도 했다.

"이젠 죽는 날만 기다려야지"

조금만 힘든 일을 해도 호흡곤란증상을 일으키는 탓에 그동안 직업도 갖지 못했다.

그는 진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는 한 달 33만원의 생계비가 수입의 전부다.

이 때문에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일반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씨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폐업 위기 놓인 진주의료원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로비에서 한 환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13.3.17 choi21@yna.co.kr 그는 의료원에서 한 달에 식사비의 20%인 6만~7만원만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으면 진료비가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박창순(83·여)씨도 윤 씨와 사정이 비슷하다.

2009년 뇌경색과 골다공증 등 질환으로 입원한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는 장애수당 등을 끌어모아 한 달 70여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있다.

"이젠 죽는 날만 기다려야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지난 1월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윤정부(71·진주시 지수면) 씨가 경남도의 의료원 폐업 방침으로 "이젠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3.3.17 <<지방기사 참조>> shchi@yna.co.kr 일반 병원보다 20만~30만원 저렴하다.

박 씨는 이전에 일반 병원 2~3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달 이상 장기간 입원하면서 건강보험의 진료비가 낮아져 수익이 줄어들자 병원 측에서 퇴원을 종용해 의료원으로 오게 됐다.

박 씨는 의료원이 폐업하면 더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걱정 때문에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폐업하면 어디서 치료받나"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2009년 뇌경색과 골다공증 등 질환으로 입원한 박창순(83·여) 씨가 진주의료원 내 벤치에서 남편 임채운(84)씨와 의료원 폐업 이후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3.17 <<지방기사 참조>> shchi@yna.co.kr 박 씨는 "의료원에서 치료받으며 연명하고 있는데 이젠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진주의료원 노인병원에는 현재 7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지난달 26일 경남도가 폐업 방침을 밝히고 퇴원이나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권했는데도 24명만 퇴원했다.

상당수 환자가 윤·박 씨와 같은 이유로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노인요양병원에서는 호흡곤란 등 위기상황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도 전원하지 못하는 한 이유이다.

의료원은 지금도 입원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루 100명 가량의 외래환자를 받고 있다.

지난주 저소득층 환자 2명이 입원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도 내 시·군의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전원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지역의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진도 배치되지 않아 전원할 수 없다며 의료원 만한 노인병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7 20:31 송고

[연합뉴스]

18일 진주의료원 '휴업 예고' 예상...노조 반발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빠르면 18일께 휴업 예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8일 중으로 기간을 정해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한 뒤 휴업에 들어가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휴업을 하려고 해도 환자들이 의료원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지난달 26일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의 환자 가운데 이날 현재 121명이나 남아있어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도는 1주일에서 열흘 가량 여유기간을 둔 뒤 휴업 강행방침을 환자와 노조원들에게 밝히고 적정 시점에 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달 9일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먼저 휴업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의료원 노조가 18일 오전 도청에서 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일정을 밝힐 예정이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b94051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7 18:45 송고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노조원, 도의회 진입 시도 "폐업철회"

경남도의회 본회의 참관 시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힌 가운데 14일 보건의료산업노조 노조원과 진주의료원 지부 노조원 300여명이 제30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참관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노조원들이 의회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2013.3.14 <<지방기사참고>> seaman@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적자누적을 이유로 폐업 방침을 밝힌 진주의료원 직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원 수백여명이 1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참관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본회의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경찰간 몸싸움으로 본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자 본회의 출석을 포기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 지부 노조원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 개최 시각에 맞춰 방청을 하겠다며 도의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여경기동대 등 7개 중대 300여명을 동원해 도의회 진입을 막았다.

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양측이 충돌하면서 고함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30여분간 승강기가 벌어졌다.

본회의 좀 봅시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힌 가운데 14일 보건의료산업노조 노조원과 진주의료원 지부 노조원 300여명이 제30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참관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2013.3.14 <<지방기사참고>> seaman@yna.co.kr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하자 홍준표 지사는 등원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도 진주의료원 문제를 제기하려 경남을 방문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면담일정을 이유로 사회를 정관용 부의장에게 넘겼다.

정 부의장은 도의원들에게 도지사, 도의회 의장 불참에 따른 양해를 구했다.

본회의 참관이 저지된 진주의료원 노조원 등은 도청 광장으로 옮겨 폐업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

[연합뉴스]

경남 야권 도의원 일제히 "진주의료원 폐업 부담"

폐업 결정된 진주의료원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내린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걱정이다.2013.3.13 choi21@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야당 소속이거나 진주시가 지역구인 도의원들이 줄줄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높고 공방을 벌였다.

김백용(진주3·무소속) 의원은 먼저 진주의료원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홍준표 지사가 성급하게 폐업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비·검사비가 저렴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으며 5년전 병원건물을 신축해 의료시설이 쾌적한 점을 고려하면 문을 닫기에는 아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폐업 원인을 무조건 진주의료원 탓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기(김해6·진보당) 의원은 의료원을 폐업하려고 경남도가 입법예고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종엽(비례대표·진보당)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자 운영손실을 '뺄튀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연간 운영손실 60억여원 가운데 감가상각비를 빼 당기손실액은 31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홍지사와 같은당인 최해경(비례대표·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현실적이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경남도를 옹호했다.

최 의원은 만성적자 상태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서북부 지역 보건소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원 공백을 메우고 의료원 직원들 재취업과 입원환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4 17:34 송고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사태> ① 103년 역사 공공병원 존폐 기로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내린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자료사진)

경남도 "적자누적·방만경영, 회생 가능성 없어 폐업"

노조 "공공의료 말살, 폐업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 찾아야"

<※편집자주 =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놓고 경남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경남도는 적자와 부채 누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일로여서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폐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의료원 노조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폐업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기रो에 선 진주의료원 사태의 원인, 쟁점, 바람직한 해결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진단합니다.>

(진주·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김선경 기자 =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이 103년의 '공공의료' 역사를 마감하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재정난 타개를 위해 산하기관 구조개혁에 나선 경남도가 적자와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에 '폐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경남도의 폐업방침 발표 이후 경남도청과 도의회 앞 광장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진주의료원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폐업 방침을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매일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경남도, 왜 폐업 카드 꺼냈나?

진주의료원은 1910년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서 출발, 도립병원과 지방공사를 거쳐 2006년 경남도 진주의료원으로 바뀌었다.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등 경남 서부지역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왔다.

2002년 김혁규 당시 지사가 낙후한 서부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확장 이전을 약속했고, 2008년 5월 새 건물을 지어 초전동으로 옮겼다.

총 5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의 현대식 건물에다 80실 325병상을 갖췄다. 이전한 지 5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고 말았다.

원인은 날로 커지는 적자와 그 때문에 불어나는 부채 규모다. 진주의료원의 지난해 말 현재 누적 부채는 279억여원에 이른다.

병원을 이전하기 전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다른 의료원과 비슷한 매년 10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그러다가 병원 신축을 준비하던 2007년 41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59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62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매년 적자 규모가 커졌다.

누적 부채도 2006년말 79억원에서 병원신축 이후인 2008년 212억원, 2010년 223억원, 2011년 252억원, 지난해 말 27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3~5년 안에 남은 자산(331억원)마저 다 까먹고 빈 껍데기만 남은 채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남도는 진단했다.

진주권역의 의료 서비스가 공급과잉인데다 지난 2월부터 민간병원도 일정 부분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되면서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계에 봉착, 더 존립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경남도는 폐업 이유를 밝혔다.

◇ "부실책임 직원들에게 떠넘겨"...일부선 "제2청사 마련 포석" 의혹 제기

노조는 수익성을 잣대로 한 경제논리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것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공공 병원을 줄속으로 없애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원의 현 상황에는 경남도의 책임이 적지 않은데도 모든 책임을 노조 등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남도가 공공병원을 이끌 능력이 부족한 동네의원 원장, 건설회사 간부 출신 등을 의료원장으로 선임해 의사들과 갈등을 빚다가 중도 사직하게 했는가 하면 진주혁신도시와 아파트단지 등이 조성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병원을 옮겨 경영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1조3천억원이 넘는 부채로 재정난에 처한 원인은 방만한 각종 개발사업 등 다른 곳에 있음에도 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홍 지사의 선거공약인 '제2청사' 마련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담당국장은 도의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을 제2청사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적자액만큼 예산을 들여서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폐업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럴 거면 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도의회 야권 의원,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폐업 반대 투쟁에 가세하고 나섰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정치권으로도 비화돼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지방의료원 폐업 때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

◇ "폐업 강행" vs "결사 저지"...도의회 결정 주목

이런 반발에도 경남도는 폐업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경남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오는 27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들은 뒤 4월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에 앞서 진주의료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휴업한 상태에서 폐업을 밀어 붙인다는 복안이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폐업 신고에 이어 해산·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미 진주의료원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의약품 납품 업체에는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간병인이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도 취소했다.

이 때문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은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가장 많은 내과에 의사가 한명도 없다. 불안해진 환자들도 떠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더라도 의료 서비스 차질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아온 일부 소외계층 환자는 "더는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남도는 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휴업 상태에서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재개원은 결코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의료원 노조는 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매일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삭발까지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의 지방 의료원들이 잇따라 존폐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업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경남도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진주의료원의 생사는 도의원들의 결정에 의해 갈리게 된다. 홍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조례 개정안 상정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7 11:00 송고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사태> ② 경영난 원인 등 공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진주

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적자 성격·원인·공공성 놓고 입장차 현격

"자구노력 외면·도덕 해이"... "비리집단 몰아 폐업 정당화"

(진주·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김선경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빌미가 된 경영난의 원인 등을 놓고 경남도와 의료원 노조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적자의 성격과 원인, 자구노력, 공공성 유지 여부 등이다.

◇ '불치의 적자' vs '공공의료 특성상 불가피'

적자의 성격을 놓고 경남도는 '불치(不治)'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의료원 측은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더 많다고 맞서고 있다.

매년 10억원 안팎이던 적자는 병원 신축을 준비하던 2007년 41억원, 이전한 해인 2008년 59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62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늘었다.

병원 신축과 이전 과정에서 환자를 받지 못한다든 신축 건물과 장비 감가상각비(연간 30억~35억원) 등이 적자 증가의 주 요인이라고 의료원은 주장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적자규모는 연간 30억원 선으로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낮은 진료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원 윤만수 관리과장은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병원보다 낮은 진료비를 유지한다"며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정보 시스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에도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산업진흥원의 '2010 병원경영 분석'에 따르면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일반종합병원 1인당 입원진료비는 16만 5천952원인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11만 7천840원으로, 차액이 4만 8천112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의료원 신축 이전이나 이후 매년 순손실이 발생, 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신축 이전에 따른 일시 현상이 아니라 고질화한 구조상 문제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방만한 경영, 구성원들의 도덕성 해이 등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자가 느는데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신축 이전(4년간 평균) 69.3%에서 신축 이후 73.5%로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의료원 측에 운영 진단, 원가절감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자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회견이 끝난 뒤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공공의료 사수 방침을 밝히며 삭발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

최하위인 'D'등급을 받고도 경영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고임금 구조로 만성적자" vs "마산의료원보다 낮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사 임금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높은 구조여서 만성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사(13명)와 간호사(125명)의 평균 연봉은 각각 1억 9천만원과 3천100만원 이라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사는 지역 민간병원과 비슷하지만 간호사는 민간병원보다 300만원 정도 많다는 것이다.

15년 이상 30년 이하 간호사들은 최고 700만원,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은 무려 1천100만원을 더 받았으며 '고임금'을 적자의 요인으로 내세웠다.

진주의료원 노조 박석용 지부장은 "의료원 직원 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 결정되며 자체로 인상할 수 없다"며 "병원 이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으며 인근 마산의료원의 70~8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남도가 같은 도립병원인 마산의료원의 임금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 진주의료원 공공성 한계 도달했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계에 봉착,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고 계속 운영할 필요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폐업 결정의 한 이유로 들었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민간병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담당하는데다 보호자 없는 병원도 도내 18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인공관절 수술 지원, 장애인 산부인과와 치과 운영 등 경남도의 공공의료사업 예산에서 진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하고 대부분 민간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189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7%밖에 되지 않는 등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의 노인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월 110만원으로 인근 민간 노인요양병원보다 오히려 20만~45만원 비싸다며 공공의료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노조의 주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의료원 측은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원(9천171명)과 장애인 전문치과(460명)를 비롯해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 행려환자 진료 등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민간 노인요양병원보다 본인 부담금이 오히려 많다는 경남도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

박했다.

의료원의 진료비는 30만원으로 다른 요양병원보다 싸지만 간병비(하루 1만5천~2만원)는 민간요양병원(5천~1만원)보다 높다. 그러나 민간 요양병원은 간병인 한 명이 7.3~8.3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비해 의료원에서는 23명을 돌보는 서비스의 질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남도가 의료원에 지원한 돈은 2010년 11억 9천만원, 2011년 13억 6천만원, 2012년 12억 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병원에 지원하는 액수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데도 이마저 없애려고 '혈세'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 자구노력·도덕 해이 놓고도 공방

경남도는 2008년 병원 신축이전 후 정원을 15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의료수의 구조를 악화시켰으며, 무급 토요일 근무·연차수당 절반 반납 등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폐업 결정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2008년부터 6년간 임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하나 2011년에 총액대비 5.5% 인상했고 지난해는 의료원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정원이 늘어난 것은 노인요양병원 등의 병상이 늘어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2008년 임금인상에 합의했으나 경남도에서 3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2011년에야 합의 내용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원장 고발건은 당시 6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를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체납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며 고통분담과는 다른 문제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진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직·인사·예산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따른 낭비, 비효율 자금관리 등 방만한 경영과 심각한 도덕 해이가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일부의 잘못을 마치 조직 전체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아 폐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공박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7 11:00 송고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사태> ③ 폐업만이 능사?...대안은(完)

폐업 위기 놓인 진주의료원

전국 의료원 대부분 적자에도 지자체들 개선노력·지원 병행

일부는 흑자 경영..."노력하면 정상화 가능"

(창원·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김선경 기자 = 경남도 주장처럼 진주의료원에게 '폐업' 외에 다른 길은 없을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은 전국에 34곳 있다. 대부분 적자를 낸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들은 공공의료 특성상 일정 규모의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의료원은 다양한 노력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다른 지방의료원의 사례에 비춰 진주의료원 사태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공익 수행 의료원 일정 적자 '불가피'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는 취약계층이 많은데다 공공사업 수행 의무 등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의료원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2011년 지방의료원 적자·부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만성 적자와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다.

2011년 현재 전국 34곳 지방의료원의 평균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20.5%로 의료원 권역 내 민간병원(11.8%)보다 훨씬 높다.

이는 취약계층 환자 진료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환자 진료, 필수 의료 안전망 운영, 공익사업 수행 등 지방의료원들의 공익 역할에 따른 총 비용은 2011년 기준 335억원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했다.

강원도의 한 의료원 원장은 "지방의료원 환자는 취약계층이 많은데다 적정 진료 의무가 있다 보니 적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병원도 비보험 치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지 않으면 흑자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적자 발생에는 인건비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비용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자에 연연하면 공공의료는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자에도 의료원 지원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민간병원이 담당 못하는 공적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0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부산의료원은 지난해 43억원을 들여 PET-CT 76종의 첨단의료 장비를 새로 도입했고 건강증진센터, 소화기센터 등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매년 50억원 가량을 의료원에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가 원광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가 425억원에 달했지만 전북도는 올해 45억원을 지원한다.

홍성의료원(충남)과 서귀포의료원(제주)도 매년 지자체에서 50억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물론 지방의료원에는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만한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없애려는 노

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강원도의회가 지방의료원 한곳을 매각 방안을 거론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 일부 의료원은 '흑자'...비결은?

청주의료원은 2006년 4억원, 2007년 2억원, 2008년 1억원, 2009년 3억원, 2010년 3억원, 2011년 1억원 등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에 흑자를 낸 7곳을 뺀 나머지 의료원의 적자 규모가 평균 2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좋은 성과다. 이 의료원도 예전에는 적자에 허덕였다. 경영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흑자로 돌아섰다.

환자 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하고 시설 확충에 애써 2006년에 흑자로 돌아섰고, 의료수익(입원·외래수익 등)이 매년 10~20% 늘었다.

2011년 건물 증·개축으로 늘어난 감가상각비 등 탓에 지난해 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여전히 의료수익은 10% 정도 증가했다.

충주의료원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매년 수익원대 흑자를 냈다.

2000년대 초 검진사업, 2008년 심장내과 유치, 2009년 정형외과 관절수술 시행 등 특성화 사업을 잇따라 추진했다. 그 결과 환자가 늘어 외래수익이 2009년 42억원에서 2011년 53억원으로 26% 늘었다. 입원수익도 지방의료원 평균 또는 유사 규모 민간병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충남 서산의료원도 2008년을 빼곤 2004년 이후 꾸준히 적게는 1천9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1천여만원의 흑자를 냈다.

경북 울진의료원은 2009년까지 해마다 2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다가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적자이던 제주의료원도 2011년에 흑자를 기록했다.<전국의료원 손익·부채 현황표 참고>

◇ "폐업이 능사는 아냐...노력하면 정상화 가능" =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안정되면 공익사업을 중점 운영하거나 확대 추진할 여력이 커지는 등 공공의료 실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남원의료원은 2010년 이전에는 매년 20억~30억원대의 적자를 냈으나 2011년에 9억3천여만원으로 확 줄었다. 매년 환자가 5%씩 늘어 의료수익이 늘었지만 인건비 동결 등 비용감소 노력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이 의료원은 지방의료원 평균 대비 2배 정도의 공공사업을 수행, 설립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부터 4년 연속 거점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충남 홍성의료원은 대학 병원 전임의급 이상 경력자 등 우수 의료진 확보에 주력하고 시설 현대화로 지역민을 끌어안았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심혈관센터를 여는 등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진주의료원 폐업이 능사는 아니며, 경남도와 의료원 구성원들이 자구노력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언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최근 경남도민 1천명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했더니 69.7%가 진주의료원 노사가 힘을 모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폐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마련하기 위해선 다른 지자체와 의료원의 자구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개 의료원을 둔 강원도는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의료원장에게 세 차례 경고를 준 뒤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현행 평균 의사 연봉의 4.7배에 해당하는 의료수입 목표액을 올해부터 최대 7배로 높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연봉을 2% 감액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울진의료원은 의료환경 대처 능력을 키우려고 기능·직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한다.

부산의료원은 건축예산을 집행하면서 에너지 절감, 투자 효율화, 인적자원 관리 등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창구를 신설하는 등 환자 유치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지현 보건 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 특성상 흑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건강한 적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가능하다"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향후 공공병원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보고 폐업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노조도 현대화된 시설과 최신 장비 등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경영개선 방안만 명확히 세운다면 얼마든지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7 11:00 송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한국 댕친 '악성코드 대량감염'...2차 공습 '경보' 박상원·박해미 3년만에 돌아온 '브로드웨이 42번가', 쇼뮤지컬이란 이런 것!대사 없이 라이브 뮤직쇼로 진행되는 결혼식... '뮤직쇼 웨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주의료원 환자비상대책위원회 박광희 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진주에 있는 도립병원인 진주의료원. 그동안 노조와 병원측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는데요. 어제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생겼는데요.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기에는 당면한 문제가 큼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요 그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죠. 보호자 박광희 씨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먼저 가족 중에 누가 입원해 있습니까?

◆ 박광희> 어머니가 입원한 지 5개월 됐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 김현정> 의료원이 곧 휴업을 할거라는 예고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 박광희> 그냥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 김현정> 공식적으로 병원측에서 뭔가 통보를 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지요?

◆ 박광희> 네.

◇ 김현정> 몇 명이나 지금 환자들이 남아 있나요?

◆ 박광희> 130여 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병원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 박광희> 진주의료원은 일반개인이 돈벌이하는 병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경남에서 개업한 지 103년이 되는 병원이고, 사회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의료원을 어차피 이용 안 하는 거니까 있든 없든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만, 사회취약계층의 사람들은 꼭 필요한 병원이지요.

◇ 김현정> 비용이, 치료비가 다른 곳과 비해서 얼마나 싸가요?

◆ 박광희> 저는 다른 병원에는 안 가봤고, 이 의료원 오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한 달 있었습니니다. 대학병원에서 한 달 있으니까 간병비하고 진료비하고 또 밥 사먹어야 되고, 소모품 쓰고 이러니까 천 만원 정도 들어가던데요.

◇ 김현정> 얼마 동안 천 만원이지요?

◆ 박광희> 32일 있었습니니다.

◇ 김현정> 한 달 동안 천 만원 정도 총 경비가 드셨어요?

◆ 박광희> 다른 경비까지 하면 그거보다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쓴 것은 빼더라도 한 천 만원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진주의료원으로 옮기고 나서는요?

◆ 박광희> 한 달 또 계산을 하니깐 200만원이면 충분해요. 한 5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작에 들어올 걸. (웃음)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토지가 대단히 넓습니니다.

◇ 김현정> 그 병원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 박광희> 네. 깨끗하고 시설 좋고 저렴하고요.

◇ 김현정> 도립병원이니깐 저렴한 비용에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립병원이라는 말씀이네요?

◆ 박광희> 네. 그런데 이 병원을 없애겠다고 하니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반발이 많죠.

◇ 김현정> 그 돈을 가지고 취약계층, 가난한 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건 엄두도 못 내

나요?

◆ 박광희> 지금 이제 휴업을 선포하면서 같은 값에 비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은 개인이 하는 병원에도 보내주겠다.

◇ 김현정> 경남도에 다른 도립병원이 있긴 있습니까?

◆ 박광희> 네.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좀 먼가요?

◆ 박광희> 멀기도 하고, 의료의 수준도 여기보다 많이 떨어지겠죠.

◇ 김현정> 그러면 근처 사립병원을 지원해 주겠다면 그곳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 박광희> 예전에는 그렇게 병원에서 받아주겠지만 장기입원환자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되면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 김현정> 언제까지 도에서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는 거군요?

◆ 박광희>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가라, 일단은 지원해 주겠다, 여기까지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뭘 믿고 가겠는가,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광희> 네.

◇ 김현정>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한 환자들이 130여 명 되신다고 했죠. 본인의 돈으로 주변에 있는 개인병원, 사립병원으로 갈 처지는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 박광희> 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해, 하동 이쪽에.. 그러니까 개인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의료원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독거노인분들, 저소득층 분들도 계실 테고요.

◆ 박광희> 네. 또 가족이 있어도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죠.

◇ 김현정>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정리를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한 생각도 좀 드시겠어요?

◆ 박광희>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만약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병원이라면 이렇게 쉽게 추진은 못할 겁니다.

◇ 김현정> 경남도라든지 혹은 병원에 항의는 좀 해보셨어요?

◆ 박광희> 아니요. 보컬로 당선된 도지사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 김현정> 홍준표 도지사요?

◆ 박광희> 어느 날 언론에 진주의료원 폐업한다고 발표를 해 버리고 발표의 근거를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폐쇄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경남도 측에서는 어쨌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 이세요?

◆ 박광희>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그냥 대화가 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보호자 분들 중에 죽어도 못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 박광희> 네. 다수 있을 걸요. 아니, 죽어도 못 나간다가 아니고 갈 데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갑한 상황이네요. 어려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분이세요. 환자 비상대책위원회 박광희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경남도청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어제 여러 차례 요청을 넣었지만 ‘어떤 언론과도 지금은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신 전국의 의료상황은 어떤지, 공공의료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발표한 휴업발표문이 폐업확정이다, 이렇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까지는 아닌 거죠?

◆ 유지현> 폐업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이 통과 돼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휴업까지는 확정이지만 폐업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 거고요. 아직 그 부분은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 유지현>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어제 강제휴업발표죠.

◇ 김현정> 그런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년에서 5년 내에는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도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현> 경상남도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데요.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지금 300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축 이전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것이 경남도청이 갚지 않아서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진주의료원의 매년 18억원씩 갚고 있죠. 거기다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보다 평균진료비가 조금 저렴한데요. 이로 인한 차액이 무려 연간 30억원이나 되고요.

현금을 까먹진 않지만 신축병원 감가상각비만 해도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적자로 계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금손실액은 한 1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보면 진주의료원에서 말하는 40억에서 60억 적자라고 하고 있는 이 적자는 회생 불가능한 적자가 아니고요. 꼭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자는 목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문 열었으면 이 정도 적자는 감수해야 되는 정도의 적자다, 이 말씀?

◆ 유지현> 그렇죠.

◇ 김현정> 그 정도로 파약을 한다면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지현> 글썄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건 게 있어요. 제2청사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후에 경남도청 제2청사로 쓰지 않겠나?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 김현정> 진주의료원 그 자리에다가 청사를 짓는다고요?

◆ 유지현> 아니죠. 이거를 폐쇄하고 진주의료원을 용도 변경해서 제2청사로 쓰겠다.

◇ 김현정> 그 건물 그대로? 새 건물이니까?

◆ 유지현> 네. 신축 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소문과 기사가 지금 뜨고 있는 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개인의 선거공약을 위해서 공공병원을 폐쇄한 것도 맞지 않고요. 병원시설로 설계해서 지은 건물을 도청사로 변경해서 쓰겠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굳이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필요가 있나요,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지현> 그렇겠죠. 다시 짓는 데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돈이 드니까. 지금 경남도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 유지현> 거기다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가 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주택단지, 혁신도시 이런 것이 완공되면 자산가치가 더 늘어날 건데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에 매각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공공병원보다는 돈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폐업결정이라는 건 원래 도지사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지현> 현재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공공병원, 큰 병원인데요?

◆ 유지현> 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 김현정> 민간위탁만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유지현>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데다 경영이나 운영을 맡기는 거죠.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의료원을 만들고, 폐업하고 이럴 때는 도지사 결정이 돼 있어요.

◇ 김현정> 문 닫는 거는 도지사 마음이군요?

◆ 유지현> (웃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자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수하면서, 지원해가면서 취약계층을 살피자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처음으로 만약 경남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 혹시 눈치보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현> 그게 제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진주의료원이 만약에 폐업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지방의료원의 도미노현상 폐업이 불러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34개 지방의료원이 있어요.

◇ 김현정> 공공의료원이요?

◆ 유지현> 네. 그런데 이 지방의료원 34개 중에 대여섯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운영이거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한 곳,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다수가 공공병원의 마인드를 갖지 못한 곳, 이런 곳들은 폐업을 하거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위험도로 따지자면 어디가 지금 제일 우려스럽습니까?

◆ 유지현> 그동안 최근 가장 많은 도의회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데가 강원도 의료원 이고요.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이렇게 해서 5개의 의료원이 강원도의 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데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 몇 개 없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병원부터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 유지현> 물론이죠.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적자를 건강한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직 휴업상태는 아닙니다만, 어제 휴업예고를 선언했고 그래서 폐업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사태를 오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

"진주의료원 환자들 내쫓으면서 책임지겠다고?"

보건노조, 홍준표 경남도지사 '환자 책임지겠다' 발언 비판

"12억원 의료원 예산 포기하면서 의료낙후지역에 50억을?"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2013-03-20 06:42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단 한명의 환자까지 책임지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도 단 한명의 환자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한 지난 18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해도 단 한명의 환자까지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120여명의 환자들이 의료원 휴업으로 인해 병원을 나가게 된다고 해도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보건의료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현대화된 공공병원에서 저렴한 고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입원환자 120여명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환자들을 책임지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꾀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발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힘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주고 약 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들은 호스피스병동의 환자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들로 진주의료원에 남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싶어하는 환자들 대부분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난 이후에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후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524억원을 들여 325병상의 현대식 건물을 짓고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것은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인데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엄청난 혈세 낭비"라고 강조했다.

<© 2013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폴리뉴스]

김용익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하면 103억 국고 환수"

"폐업 조치 철회하고 공공의료 대책 마련해야"

최훈길 | chg1231@polinews.co.kr

승인 2013.03.21 11:04: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진주 의료원 폐업 조치를 철회하고 새로운 공공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103억 원의 국고 지원 조치를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경남도는)4월 초에 도의회가 열리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켜 폐업하겠다고 한다. 103년 된 유서 깊은 공공병원 하나가 줄지에 사라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병원 폐업 대책이 기가 막힌다"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가라며 돈 대주겠다고 하고, 병원 직원은 다른 병원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병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대책 없이 빈 집으로 하는지, 왜 급히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게 새누리당 당 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도지사를 맡고 할 짓입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이런데도 아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공공병원 폐쇄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 이름에서 보건 이름을 빼야 한다"며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사람(진영 장관)이 할 태도인가. 진주시민이 70%가 (병원 폐업에)반대하고 경상도가 술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22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내주 25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지난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이곳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 의료낙후 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홍 지사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주의료원을 폐업해도 환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병원을 옮겨서 비용이 추가발생하면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폴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3. 3.1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 진주의료원 휴업조치 강력대응”

김용익 의원 “보건복지부는 뭐하고 있나?”...압박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8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대해 “경상남도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휴업조치를 발표하고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은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진주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경상남도는 지역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진주의료원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휴폐업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면 아예 복지부에 있는 공

공의료과를 없애고 지자체로 모든 사업을 이관하라”고 압박했다.

김용익 의원은 “만약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영 장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한 불명예스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사태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익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지방의료를 휴업 또는 폐업 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세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며 “지방의료를 휴업 또는 폐업조치를 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22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상남도도 무조건 병원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토론회 의견을 수렴하여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